

북한농업과 사회주의국가의 농업개혁

번역·정리 김 영 훈 (책임연구원)
김 지 용 (임시연구원)

북방농업실험

비

명

목 차

I. 개 회

〈개회사〉	1
〈축사〉	3

II. 제1분과 : 북한농업의 현황과 전망

1. 북한의 경제정책과농림수산업현황및전망	5
2. 북한의 농지이용실태와농업생산능력	38
3. 북한사회주의농업과농정현황	51
4. 북한의 식량사정과소비행태	63
5. 북한의 농산물무역현황과전망	74

III. 제2분과 : 사회주의 개방국가의 농업개혁과 교훈

1. 경제개혁에 따른러시아농업의 변화	111
2. 경제개혁과중국농업	125
3. 통독과정의농업개혁과그교훈	139

〈부록〉 국제학술회의 개요

비

명

開 會 辭

韓國農村經濟研究院

院 長 許 信 行

오늘 農林水産部の 後援으로 “北韓農業과 社會主義 國家의 農業改革”에 관한 國際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있는 일로 생각하며, 특히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農林水産部 長官, 國內外 專門家,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世界政勢는 바야흐로 蘇聯을 위시한 東歐諸國 등 社會主義 國家의 몰락과 동시에 東西獨의 統合過程을 거치면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힘입어 우리와 인접한 中國, 蒙古, 越南 등 東아시아 社會主義國家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開放과 改革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40여년간 敵對관계를 지속해온 南北韓도 UN에 동시에 가입하고 나아가서는 「南北經濟 交流를 위한 基本合意書」를 교환하는 등 世界史의 흐름에 다소나마 기여하는 분위기가 한층 高潮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國際學術會議는 지금까지 禁忌時되어온 北韓農業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北韓의 開放.改革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앞으로의 南北韓 經濟交流를 더욱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統一에 對備한 長期的인 政策비전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은 農林水産部の 적극적인 뒷받침에 힘입어 今年 1月 北韓農業室을 신설하여 北韓農業과 林業 및 水産등 농업전반에 관한 現況 파악과 分析, 南北韓 相互經濟交流에 관한 深層研究,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南北韓 統一에 대비한 農業政策 전반에 걸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本 研究院은 中國, 舊蘇聯을 비롯한 東歐諸國 등 과거 社會主義國家를 총 망라하여 北方農業研究센터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최근 증가일

로에 있는 對 中國 農產物 交易과 앞으로 예상되는 구소련을 위시한 東歐圈 國家들의 農業 部門의 人的, 物的交流 등 相互交流의 폭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국가에 대한 심층연구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本 國際學術會議는 두가지 주제를 상정하고 그 첫主題는 北韓 農林水產業의 現況, 특히 北韓의 經濟政策下의 農業政策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이과정에서 農業生產基盤과 식량 등 農業生產能力 과악과 농산물 무역현황 등 북한 농림수산업 전반이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외국의 참가자들은 北韓에서 오래 勤務하였거나 또는 여러차례 訪問한 경험을 토대로하여 북한의 농업실상을 여러분에게 들려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농업의 변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두번째 主題는, 社會主義 國家의 農業改革으로 최근 改革과 開放이 가속화되고 있는 中國과 구소련의 농업개혁이 북한의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統獨이 우리의 南北統一에 어떠한 敎訓을 줄것인가 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변화방향, 南北韓經濟交流協力 그리고 궁극적인 統一問題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회의를 통해 참가자 여러분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교환하여 北韓農業의 실상을 정확하게 評價함으로써 우리 南北韓에 고유하고도 적합한 모델을 찾아내는데 큰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本 學術會議에 참가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해외참가자 여러분의 서울체류가 보람있기를 바랍니다.

祝 辭

農林水産部 長官

姜 賢 旭

오늘 「北韓農業과 社會主義 國家의 農業改革」에 관한 국제학술회의가 국내의 참가자 여러분과 관계전문가, 그리고 많은 내빈객들의 깊은 관심속에서 성황리에 열리게 된것을 진심으로 祝賀합니다.

지난해에는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하고 「南北韓 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가 교환되었습니다. 과거 理念과 體制固守의 경직적 입장에서 일탈하여 새로운 和解와 協力の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평화적 통일의 실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북한농업관계 전문가,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실무자, 통독의 경험을 축적하고 계신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時宜適切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1980년대말 부터 시작된 소련과 동구공산국가들의 급속한 改革과 開放, 이로인한 사회주의권의 광범위한 崩壞로 야기된 世界秩序의 再編은 이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더이상의 閉鎖政策을 버리고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개방정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이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사회는 물론 농림수산업 현황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경제교류를 보다 活性化시킬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경제관계개선을 바탕으로 정치·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의 폭을 넓혀 民族同質性 회복과 平和의 民族統一의 시기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칠천만 겨레의 염원인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모두다 인내와 진지한 태도로서 통일을 위한 모든 준비작업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독일의 경우로부터 통일은 오랜 준비작업을 토대로 이

루어지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통일의 감격 못지않게 통일후의 정치.경제.사회 및 각종 제도의 수렴과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관계개선을 촉진하고 나아가 민족의 同質性 回復을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부문부터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확신과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도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학술교류와 같이 專門家들이 서로 진지하게 토론하고 축적된 지식을 충분히 교환하는 이러한 작업들이야말로 남북관계 발전의 튼튼한 礎石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本 學術會議가 북한농업에 대한 이해를 크게 높여 남북한의 동성회복과 민족 통일에 一助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회의를 주재하는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의 노고를 致賀하고, 참여해 주신 전문가, 학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祝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I. 제1분과 : 북한농업의 현황과 전망

1. 북한의 경제정책과 농림수산업 현황 및 전망

발표 : 김운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가. 序 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南北韓은 38°線을 경계로 분단이 되었다.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40여년간 서로 상반된 체제와 생활방식이 도입되면서 상호간의 異質性은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獨逸의 통일과 구소련을 비롯한 東歐國家들의 붕괴, 그리고 中國의 改革과 開放 등 냉전체제의 붕괴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현상고착의 타파를 강요해 왔다.

이러한 외적 환경변화에 접하여 남북한은 1991년 UN에 동시에 가입하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하기에 이르렀다. 아직 이념과 체제교수의 경직된 입장에서 완전히 일탈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 어갈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남북한 당사자간의 결의에 따라서는 40여년간 지속된 단절의 시대를 청산하는 것은 물론, 통일의 분위기에 까지 이끌 수도 있는 가능성이 한층 고조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북한간 경제교류 혹은 남북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실상을 정확 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정치환경 혹은 군사력 평가에 중점이 주어져 왔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연구도 대부분 총량지표의 비교에 머물러 있었고 산업 부문별 연구는 미미한 상태였다. 최근에 와서 몇몇 분야에 대해 본격 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을 따름이다.

만약 가까운 시일내에 남북한간 통합이 이루어 진다면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 제는 식량문제와 북한지역내 토지문제의 처리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과 남한의 식량자

급을 등을 감안할 때 식량문제에 대한 사전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다음은 북한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이다. 해방직후 남북한간의 토지처리 과정이 상이했고, 지금 현재 소유권과 이용형태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 이 모든문제를 다 포괄 할 수는 없고, 북한의 경제일반과 농림수산부문의 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한다.

북한의 농업에 대한 연구는 他産業部門에서와 같이 1962년 이래 각종 통계를 거의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발표하는 경우에도 극히 제한적이거나 대외선전용인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많은부문에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어 연구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되어왔다. 그렇다고 북한이 공표한 자료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단편적이거나 북한사회의 현상과 특수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와 FAO 통계치, 국내외 학자들과 통일원의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임업과 수산업부문을 포함시켜 농림수산부문 전반에 걸친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했다. 민족의 숙원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대비하여 농림수산부문의 통합계획수립에 一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 北韓의 經濟政策

마르크스는 경제를 ‘인간사회에 있어서 물질 재화의 생산, 교환 및 분배하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경제는 인간의 사회생활을 유지, 발전시키는 절대적 조건으로서 다른 여타 부분의 기초를 제공하는 하부구조를 형성한다. 하부구조로서 경제의 발전이 있을 때 역사도 발전할 수 있으며 경제만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역사관이 경제체제의 본질을 형성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어떠한 존재형태를 띄어야 하는가를 규정짓는다. 따라서 과도기 단계에서의 일부 특수한 현상을 제외하면 북한경제는 유물사관에 입각한 경제의식, 중앙당국이 주체가 되는 계획경제질서, 원칙상 모든 물질 생산수단의 국유화 또는 집단화이다.

〈표 2-1〉 경제계획의 과업과 목표(제1차 7개년계획 이전)

계획 명칭	기본과업	계획 목표 혹은 성과
1차 1개년 계획 (1947)	○기업소 복구조업 ○국영상공업 확대	○공업총생산 : 1946년비 약 2배 ○알곡수확고 : 1946년비 30만톤 증산
2차 1개년 계획 (1948)	○공업의 편파성 극복 ○생산품의 질제고 및 원가절하	○공업총생산 : 1946년비 41% 증가 ○알곡수확고 : 1946년비 13.5% 증가
2개년 계획 (1949-50)	○낙후된 산업과 농업의 발전 ○조선전역의 경제복구 토대조성	○국영산업총생산 : 1948년비 194% ○알곡총생산 : 1946년비 158%(쌀잡곡)
전후복구 3개년 계획 (1954-56)	○戰前수준 도달	○국민소득 : 1953년비 75% 증가 ○공업총생산 : 2.6배 ○알곡수확고 : 1949년대비 119%
5개년 계획 (1957-60)	○공업화의 기초구축 ○식의주문제의 기본적 해결	○국민소득 : 약 2.2배 ○공업총생산 : 2.6배 ○알곡수확고 : 376만톤

북한은 이와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원칙에 입각하여 1945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왔다. 시기구분과 주요과업, 계획목표 등을 「북한경제 통계집」(통일원, 1986) 및 「북한개요」(통일원, 1991)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정리, 작성한 것이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북한의 경제계획은 1947년 부터 1개년의 단기계획이 1948년까지 실시되었다. 그후 1949년 부터 1950년 까지는 일제의 식민지적 잔재와 폐해를 제거한다는 목표하에 2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6.25전쟁으로 중단되었다. 6.25전쟁기간 중에는 전시 물자 및 식량공급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었다. 전쟁이 끝나면서 3년간 戰前수준으로의 경제복구에 목표를 두고 전후복구 3개년계획을 추진하였다. 1957년 이후 경제계획은 계획기간이 연장이 되고 보다 체계화된다. 그리고 1960년대 이전까지는 중국과 소련 및 기타 공산국의 지원에 힘입어 대부분 목표들이 달성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1961년 부터는 1950년대 후반의 5개년계획에서 구축된 중공업기반을 더한층 견고하게 발전시키고 경공업, 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통해 주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7개년계획이

〈표 2-2〉 경제계획의 목표와 실적(60년대 이후)

구 분	기 본 과 업	주 요 목 표	실 적
제1차 7개년 계획(1961- 70)	○중공업 발전 ○경공업, 농업의 동시 적 발전 ○전국적 기술혁명 ○국방, 경제의 병진	○국민소득: 2.7배 ○공업총생산: 3.2배 ○양곡수확고: 600-700 만톤	○국민소득: 미발표 ○공업총생산: 3.3배 ○기계금속공업성장율: 18.4% ○노동생산성성장율: 147.5% ○알곡수확고: 미발표 ○계획기간: 3년연장
6개년 계획 (1971-76)	○사회주의 물질, 기술 적 토대 견고화 ○산업설비 근대화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 서 해방	○국민소득: 1.8배 ○공업총생산: 2.2배 ○양곡수확고: 700-750 만톤	○국민소득: 1.7-1.8배 ○공업총생산: 2.5배 ○기계금속공업성장율: 19.1% ○노동생산성성장율: 155% ○알곡수확고: 800만톤
제2차 7개년 계획 (1978-84)	○인민경제 주체화, 현 대화, 과학화 ○생산원가 인하 ○절약운동 강화 ○수송의 근대화 ○대외무역 증대	○국민소득: 1.9배 ○공업총생산: 2.2배 ○양곡수확고: 1,000만톤 ○80년대 10대 전망목표 와 4대 자연개조사업 추진	○국민소득: 미발표 ○공업총생산: 2.2배 ○전력생산성장율: 178% ○철강생산성장율: 185% ○공작기계생산성장율: 167% ○알곡수확고: 1000만톤
제3차 7개년 계획 (1987-93)	○인민경제 주체화 현대 화, 과학화 ○기술혁명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	○국민소득: 1.7배 ○공업총생산: 1.9배 ○농업총생산: 1.4배	추진중

추진되었다. 1970년 11월 12일 노동당 5차대회를 통해 3대기술혁명 수행과 산업의 체질개선을 목표로 한 6개년계획을 마련하여 1971년 부터 착수하였다. 동계획기간 중에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西歐로부터의 자본, 기술 및 설비의 도입에 관심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북한은 서방국가들로부터 도입한 차관 및 연불수입대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1975년 부터는 심각한 외채문제를 겪었고, 또 수송, 에너지 부문 등 사회간접자본부문의 낙후로 인해 당초 계획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해지면서 1977~78년의 2

년간 완충기간을 갖기에 이르렀다.

1978년 부터 시작된 제2차 7개년계획에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과학화·현대화’가 표방되면서 알곡 1,000만톤 생산이 제시되고, 80년대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전망목표’ ‘4대 자연개조사업’이 추진되었다. 또 대외경제사업 및 무역확대 발전방침 채택, 합영법제정 등과 같은 대외개방조치를 취했으나 전반적인 실적은 목표에 크게 미달하여 1985~86년의 2년을 조정기로 설정하였다.

1987년 부터 실시된 제3차 7개년계획의 주요목표들은 제2차 7개년계획과 크게 다를바 없다. 다만 몇개분야를 제외하면 이전의 경제계획에 비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목표들이 오히려 하향조정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경제난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이는 70년대 중반부터 계속되어온 외채문제를 비롯, 경제체제의 경직성 그리고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에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 北韓의 經濟現況과 農業

북한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3월과 12월에 「土地改革에 관한 法令」과 「地下資源·山林·水域 國有化 法令」을 공포, 토지, 산지 등의 소유구조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同年 8월에는 主要産業의 國有化 法令을 발표, 공장, 광산, 철도, 체신, 은행 등의 주요산업을 國有化하였다.

1947년부터는 농업부문에서 國營農·牧場을 설치하는 등 전산업에 걸쳐 사회주의화를 가속시켜 나갔다. 그러다가 1953년 휴전 이후 부터는 사회주의 건설에 본격 착수하여 농업의 집단화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화를 더욱 강화하였다. 1958년 8월에는 농업의 협동화와 수공업자·상공업자의 협동화를 끝으로 생산관계의 社會主義化를 완료하였다. 이같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는 생산수단의 소유형태가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국가적 소유에는 협동단체 소유를 제외한 土地·地下資源·山林資源·기타 自然資源·중요공장과 기업·은행·항만 그밖의 교통운수 및 체신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협동적 소유에는 농업·어업부문의 협동단체에 소속된 토지, 농기구, 동물, 어선, 건

〈표 3-1〉 北韓의 社會主義 開革過程

기 간	開 革 內 容
1946. 3. 5	土地開革에 관한 法令 公布
1946. 8. 10	主要産業의 國有化法令 公布
1946. 12. 22	地下資源·山磷·水域 國有化 法令 公布
1954. 4.	協同農場 組織 着手
1958. 8.	農業, 手工業, 商工業者 協同化 完了
1958. 10. ~12.	協同組合을 里單位로 擴大, 再編

물 등과 공장·기업소 등이 포함되고 있다.”

북한은 과거 어느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私有의 범위를 제한했다. 개인의 임금과 분배 몫으로 구득할 수 있는 개인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생산물과 생산수단이 國·公有化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주민은 소비생활에서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소유로 인정되는 소득이라도 「蓄積」을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당의 방침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된 私的 소유와 중앙통제경제가 북한의 산업경제구조를 특징지우고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북한의 산업구조는 중공업 우선 정책과 국방 경제건설의 併進政策이 반영된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형태를 보여준다. 따라서 국민생활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 가스, 수도(5.0%), 경공업(8%), 건설업(8.2%), 서비스업(20.9%) 부문의 비중은 현저하게 낮고, 중공업(22.0%)과 1차산업부문(28.0%)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와같은 북한의 산업구조는 인구이동의 제한과 한정된 자원을 軍·産複合型 중공업부문에 편중배분함으로써 초래한 결과라 판단된다.

북한이 발표하는 자료의 신뢰성 부족, 시장경제 체제에서와는 다른 경제통계 추계 등이 북한의 경제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KDI, 통일원 등에서는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최근의 북한 경제와 관련된 주요지표를 추계한 내용이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1) 북한헌법 20조

〈표 3-2〉 북한의 산업구조('91년)

	북한	남한
농림어업	28.0	8.1
광공업	38.0	27.9
광업	7.9	0.4
제조업	30.0	27.5
(경공업)	(8.0)	(9.7)
(중공업)	(22.0)	(17.8)
전기, 가스, 수도	5.0	2.1
건설업	8.2	15.4
서비스	20.9	46.5
국민총생산(GDP)	100.0	100.0

資料：韓國銀行 調査部, 1992. 8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많은 논문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로 과중한 군사비 지출을 지적한다. 다음 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은 GNP중 광공업과 농림어업의 비중이 각각 56%와 26.8%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GNP 대비 군사비의 비중이 22.4%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의 수출가운데 농산물과 광산물등 1次產品 비중이 1990년 현재 42.1%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공업부문이 量的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質的으로는 크게 미흡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KDI의 추정에 의하면 노동생산성은 남한이 북한의 6.3배 수준으로 북한의 1990년 노동생산성은 1976년 당시의 남한의 그것과 비교될 수 있다. 중간재투입생산성은 남한이 북한에 비해 1.5~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역시 남한의 1970년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는 결국 經濟成長率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데 1981~90년중 남한경제는 연평균 9.6%성장한데 비해 북한경제는 연평균 1.3%의 성장에 그쳤다.²⁾

이와 같이 북한경제의 불균형적 산업구조와 전반적인 침체현상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2) 『北韓經濟의 現況과 展望』, 韓國開發研究院, 1991. 10. pp. 192~4

〈표 3-3〉 경제총량지표(1991 기준)

구 분	북 한	남 한	남한/북한(倍)
(1) 총인구(만명)	2,250	4,287	1.9
(2) 인구증가율(%)	1.83	0.98	0.54
(3) 경제활동인구(만명)	965	1,849	1.9
(4) 농가인구비율(%)	37.8	15.1	0.4
(5) -농업종사인구(%)	24	17.5	0.73
(6) GNP(억달러)	229	2,808	12.3
(7) 1인당 GNP(달러)	1,038	6,498	6.3
(8) 경제성장률(%)	-5.2	8.4	-
(9) 군사비/GNP(%)	22.4	3.8	-
(10) 무역총액(억달러)	27.2	1,534.0	56.4
(11) 수출중 1차산품비중(%)	42.1	5.7	0.1
(12) GNP중 농림어업비중(%)	26.8	9.1	0.3
(13) GNP중 광공업비중(%)	56.0	44.8	0.8
(14) GNP중 기타서비스비중(%)	17.2	46.1	2.7
(15) 곡 물(만톤)	530.7	623.6	1.2
(16) 쌀(만톤)	217.6	538.4	2.5
(17) 수산물(만톤)	120	298	2.5

資料 : 한국은행, 통일원, 통계청, KDI

註 : (5)번까지와 (11)번 이후는 1990년 기준이며, 나머지는 1991년 기준

「自力更生」원칙을 고수해온데다 최근들어 舊蘇聯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 기반이 붕괴되어 대외경제환경이 크게 악화된데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속적인 무역역조에 따른 외화부족과 외채상환압력으로 인해 原油를 비롯한 주요 原資材의 수입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러 전반적인 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북한의 농림수산업 현황

1) 북한의 농정개황

북한의 농정은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앞장에서 언급한 수차에 걸친 경제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1947년 제1차 1개년계획부터 현재 진행중인 제3차 7개년계획까지의 경제계획과 농정을 연계시켜 북한농정의 흐름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농정의 시대구분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북한관련 각종 자료와 문헌에 의거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① 인민민주주의 개혁기(1945~49), ② 동란기(1950~53), ③ 사회주의 혁명기(1954~59), ④ 사회주의 제도 건설기(1960~70), ⑤ 사회주의 제도 안정기(1971~76), ⑥ 주체경제 확립기(1977~86), ⑦ 사회주의 개방기(1987~) 등.

북한은 1950년대말 토지의 전인민적 소유제가 확립되면서 농업부문의 사회주의화가 완성단계에 이르고, 이과정에서는 생산성도 상당히 증가되었다. 그후 북한은 농업부문에 약간의 침체현상이 보이자 1964년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다. 여기서 농업문제를 농업의 낙후성과 도시·농촌간의 격차로 규정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농촌에서의 3대혁명(기술, 문화, 사상) 수행을 시도하였다. 보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1970년대의 6개년 계획기간중 농업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추진하였으며, 1976년 10월 노동당 중앙위 제5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자연개조5대방침」을 결정하고 곡물증산을 위한 장기적인 자연개조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기간중의 역점사업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식량수급상에도 큰 애로사항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대내외 홍보에 주력한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이래 식량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알곡증산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동시에 알곡증산을 위한 간척지 개간, 화학비료 및 농기계 투입량 등도 구체적 수치로 제시되어 목표달성에 매진하는 열성을 보인다.

북한은 1981년 노동당 중앙위 제6기 제4차회의에서 30만정보 간척지 개간, 20만정보 새 땅 찾기, 남포갑문건설, 태천발전소 건설사업 등 '4대자연개조사업'을 새로이 제기하였다. 간척지 개간사업은 1989년말 현재 6만여정보에 그치고 있고, 20만정보의 새 땅 찾기 운동에 대한 성과는 구체적으로 알려진바 없으며, 오히려 무리한 산지개간으로 하천관리, 홍수통제 등에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4-1〉 북한농정의 단계별 구분과 정책과제

단 계 별	기 본 과 제	주 요 시 책	비 고
제1단계 : 인민민주주의 개혁기 (1945~49)	1. 봉건적 토지소유관계 청산 2. 농업생산을 봉건적 생산관 계에서 해방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46.3) ○임야관리경영결정서(46.6) ○지하자원, 산림, 수역국유화령 (47.12)	반제, 반봉건 적 민주주의 혁명단계
제2단계 : 동란기 (19509~53)	1. 전시 노력동원 2. 전시 식량공급	○농민시장 개설에 관한 결정서 (50.10) ○농민들에 대한 노력동원 제한에 대하여(52.4)	전시동원체제
제3단계 : 사회주의 혁명기 (1954~59)	1. 농촌에서 자본주의 요소 청 산 2. 농업의 협동화와 私的 생산 관계 해소	○농업협동경리의 강화, 발전대책에 관하여(54.3)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잠정) 초 안(58.11) ○100만정보 관개면적 확장령 (58.10)	사회주의 경 제체제 완성
제4단계 : 사회주의제도 건설기 (1960~70)	1. 농촌의 3대(기술, 문화, 사 상) 혁명과업 확산 2.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제 3. 협동소유를 전인민적 소유 제로 접근	○농업협동조합들에서 천리마작업 반 운동을 조직, 전개할데 대하여 (61.3) ○농업협동조합경영위원회를 조직 할데 대하여(61.12)	우리나라 사 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 제 (64. 3) 발표
제5단계 : 사회주의제도 안정기 (1971~76)	1. 농업의 수리화, 전기화, 기 계화, 화학화 2. 힘든 농업노동에서 해방	○전답의 수리화와 농장의 전기화완 성 발표(74) ○자연개조5대방침결정(76.10) ○1976년의 알곡수확량 800만톤 달 성목표	6개년계획기 간
제6단계 : 주체경제 확립기 (1977~86)	1. 곡물증산을 위한 장기적 자 연개조사업 2. 농업의 공업화와 현대화 3. 농업생산의 과학화와 집약화	○기간중 목표(1984년) - 알곡 100만톤 생산 - 밭 관개 완성 - 15만정보 다락밭 건설	제2차 7개년 계획기간
제7단계 : 사회주의 개방기 (1987~)	1. 4대자연개조사업 2. 농촌의 기술혁명강화	○기간중 목표(1993년) - 알곡 1500만톤 생산 - 수산물 1100만톤 생산 - 30만정보 간석지개간 - 20만정보 새땅찾기	제3차 7개년 계획기간

자료 : 「북한법령집」(제2권, 대륙연구소, 1990), 「북한경제자료집」(통일문제연구소 통일문제자료
집 제2호, 1989), 「북한경제통계집」(국토통일원, 1986) 및 「북한개요」(통일원, 1991)를 참
조하여 작성

북한은 1990년도 신년사에서 “30만정보 간척지를 개간하여 서해바다를 기름진 옥토로

전변(轉變)시켜 당이 제시한 농업생산목표를 반드시 실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해 1월에는 1985년이후 5년만에 전국 근로자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30만정보 간척지와 20만정보 새 땅 개간사업에 참여하여 가까운 몇년 안에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2) 북한의 농업생산환경

일반적으로 북한의 농업생산환경은 남한에 비해 자연적 조건이 불리하다. 북한의 총면적은 약 12만km²이다. 전국토의 약 80%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경작가능면적은 200만ha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통일원 등에서 추정된 자료에 의하면 총경지면적 중 논면적은 전체의 30%수준인 약 60만ha~70만ha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70%는 밭으로서 옥수수 재배 등 식량작물을 제외하면 과수원과 뽕밭의 면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에 이르러서도 경지이용과 관련된 공식적인 자료를 거의 발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김일성의 신년사나 노동당 회의자료 등에서 간간히 언급되고 있을 따름이다. 그

〈표 4-2〉 남북한 주요 농업지표 비교('90년 기준)

區 分	北 韓(A)	南 韓(B)	對 比(A/B)
○총 경지면적	2,141	2,109	101.5
-논	645	1,345	48.0
-밭	1,496	764	195.8
• 과수원	300	132	227.3
• 뽕밭	130	23	565.2
○호당 경지면적(ha)	1.34('89)	1.19	112.6
○농가호수(ha)	1,590('89)	1,767	180.5 ¹⁾
○농가인구(천명)	8,094	6,661	—
○농가인구비율(%)	37.8	15.6	242.3
○총인구(천명)	21,412	42,869	49.9

資料：NORTH KOREA：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July 11, 1990.

韓國銀行, 韓國開發研究院, 統一院, 統計廳

註：1) 총인구에 대한 농가호수 및 농업종사 인구로 나눈 비율로 대비

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열거할 수 있을것 같다. 첫째 총국토면적중 농경지의 비율은 미미하나마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농지면적중 논면적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밭면적은 큰 변동없이 대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식부면적과 경지이용율은 1960년대 말을 정점으로 이전의 증가추세에서 다시 하강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세가지 특징은 북한의 농지정책과 결부된 산물이다. 즉 곡물수확고 증대를 위한 경지확장정책, 주곡의 자급도 확보와 농업기계화에 유리한 논면적의 확대, 종래의 간혼작 체계에서 단작체계로의 전환 등에 기인한다.

〈표 4-3〉 북한의 농경지 이용실태와 추이

구 분	총 면 적	농 경 지 면 적				식부면적	경 지 이용율
		계	답	전	답울		
1946	12,330	1,859.9	388.0	1,471.9	20.9	1,934.0	104.0
1953	12,330	1,965.0	477.5	1,487.5	24.3	2,295.0	116.8
1959	12,330	1,811.0	508.0	1,303.0	28.1	2,405.0	132.8
1967	12,330	2,036.0	572.5	1,440.5	28.4	3,350.0	166.4
1984	12,330	2,136.0	640.0	1,496.0	30.0	2,936.0	137.5
1990	12,330	2,141.0	645.0	1,496.0	30.1	-	-

자료 : 「南北經濟綜合對備」, 1991. 통일원

농업기계화는 1970년대 노동력 부족과 “힘든 노동에서 해방”이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의거 농업기계화를 추진하였다. 70년대 중반까지 농업기계화가 상당수준으로 진척되었다는 것이 사실로서 인정되나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농업기계화가 보급된 10년후인 1980년대에는 농기계 사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전반적인 경제사정의 악화로 노후화되었거나 고장난 농기계가 방치되어 있고, 석유의 부족으로 농기계의 가동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모내기, 수확작업 등 대부분의 농작업이 기계대신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실제 목격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농촌지역의 電化率은 이미 60년대에 100% 달성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국과 舊소련으로 부터의 원유공급이 경화결재로 바뀌면서 농촌의 전기사정 역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70년대에 이미 ha당 화학비료 시비량이 1,000kg에 이르고, '80년대에 와서는 '70년대에 비해 2배로 增投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수치는 이웃 일본의 415kg, 남한의 373kg, 필리핀의 63.3kg에 비하면 거의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다. 그러나 북한이 정상 이상으로 과다한 비료투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로 인해 토지의 산성화와 환경오염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의 경제사정은 비료공급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질소 및 인산비료는 자체생산으로 自給이 가능하나 카리비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절대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카리의 결핍은 작물의 결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최근의 농업생산성 부진과 관계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3) 북한의 농업협동화와 토지제도 문제

북한의 농업은 1946년 3월의 토지개혁부터 휴전직전까지는 「耕作地制」를 기초로한 명목상의 個人農時代였으나 그후 사회주의체제의 기본적 논리이며 필연적 과제인 농업협동화가 시작되었다. 1953년 휴전직후인 8월에 그 방침이 결정되면서 1954년 말까지의 시험 단계를 거쳐 1955년부터 전국적으로 농업의 협동화를 시도하면서 소위 사회주의적 定型의 농업경영체제를 형성하였다.

농업협동화의 초기단계에서는 농장당 200호 미만의 규모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1958년 완성단계에서는 300호 이상의 大型化에 중점이 주어졌는데 이는 1個里에 1개의 협동농장이 있는 셈이다. 1960년 이후에는 600호~1,000호의 대형규모도 전체의 5%수준에 이른다. 이는 1953년 이래 面단위를 없애고 郡單位 중심의 협동농장체계를 완성시킨데 크게 연유된다. 1個의 협동농장당 평균 농가호수는 275戶, 경지면적 규모는 466ha정도인데 '88년 현재 3,398個의 협동농장이 있다.

현재 협동농장은 북한 총경지면적의 90%, 농업생산액의 약 80%(나머지는 國營)를 차지하며 북한 식량작물의 생산을 거의 전담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대규모화는 농업노동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산량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데 북한에서의 통계발표는 선전을 목적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성이 많으며 그나마 凶年이나 목표달성에 크게 미달될 시에는 아예 발표조차 하지 않으므로 個人農場과 協同農場의 생산성 비교나 협동농장 규모변화에 따른 生産性의 비교는 할 수 없으나, 북한의 협동농장과 비슷한 中國人民公社制度에서 비교할 수 있다.

中國은 '49년 정부수립후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농경지 160ha 규모에 140~160戶 농가를 단위로 人民公社制度를 '57년까지 실시한 결과 농업부문에서 4.5%, 곡물생산량에서는 7.5%의 성장율을 보았으나 '58~'62년 사이에 5,000농가(4,500ha)를 단위로 하는 대규모 人民公社制度를 도입함으로써 '59~'61년 사이에 농업부문 3.7%, 곡물생산 3.4%라는 負의 성장을 나타내어 농업생산은 '52년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이와 같은 集團農場의 대규모화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저해하여 다시 35~50농가 단위로 축소재편성하여 '79년 人民公社制度가 폐지될때 까지 실행되었는데 그당시인 '66부터 '78년 사이에 농업부문 4.0%, 곡물생산 3.5%의 성장을 나타내었다. 특히 인민공사제도를 폐지하고 個人農家別 生産責任制度(일정량 이상의 생산량은 자유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한 '79년 이후로 그 성장율이 농업부문 7.5%, 耕種部門은 6.4%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또한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경제작물 재배면적은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집단농장(人民公社)에 비해 개인농장에게 어느정도의 결정권을 주었을때 그리고 집단농장의 규모가 소규모일수록 농업생산성이 더욱 향상되고 있음을 우리는 中國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집단농장을 大型化한 북한의 농업생산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集團農場 초기에는 30~50坪정도 개인소유 형태의 소위 「텃밭」을 인정하였는데 처음에는 생산량의 차이가 적었으나 해가 지날수록 개인소유 농지와 집단농장의 생산량은 2~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여러 자료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텃밭」이 북한은 資本主義 殘在라고 '70년대 중반에 15~30坪으로 축소하였지만 이곳에서는 間作과 混作등으로 토지이용율이 매우 높고 생산량도 많다고 한다.

특히 북한은 농업생산성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여타 사회주의 체제와는 달리 성과급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구=자의식=소유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것

이지만 농촌경리 부문에서는 상당정도 생산에 대한 유인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미미하나마 지속적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농촌경리에서 성과급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협동조합관리의 二元化體系를 유지하고 있다. 종래에는 一元化된 협동농장 운영체제만 고려해 왔으나 실제로는 二元化된 운영체제를 갖고있다. 이러한 二元化된 관리체제는 실제로 농촌경리에 얼마만큼의 자극제가 되었는가는 의문시 되지만 북한의 농촌이 적어도 구소련이나 동구사회와는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를 제공했던 것만은 틀림없는것 같다. 즉, 협동농장생산 및 판매체계에 의하면 농민들도 주요곡물 및 가을채소를 제외한 일부 생산물에 대해서는 농민시장과 각지역의 식료상점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하지 않았던 1980년대 이전까지는 이러한 기능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활력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호당평균 15~30평씩 분배된 「텃밭」에서 생산하는 채소, 경제작물등에서의 잉여분의 처리가 농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연속된 흉작으로 주곡인 쌀과 옥수수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러한 기능은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즉, 텃밭을 포함한 모든 경지가 주곡인 미곡과 옥수수생산에 할애되면서 불요불급한 경제작물이나 채소생산의 재배기회를 박탈해 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식량난을 악순환시킴과 동시에 미곡과 옥수수 위주의 생산체제는 자연히 육류, 채소, 과일, 경제작물 등의 副食에 절대적인 결핍현상을 초래,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식량부족의 압박감을 가중시킨다.

4) 북한의 농업생산과 식량수급 문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누차 언급된 것과 같다. 농업생산의 파악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농경지면적, 농업용자재의 공급 등에 대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또는 FAO의 통계치와 통일원 및 미국CIA 등의 추정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결과 북한이 발표한 생산성 및 총생산량과 통일원 등의 추정치는 큰 격차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일기준에 의거하여 ‘옳고’ ‘그름’의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기준의 복잡성과 전제조건의 차이에 따라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은 알곡과 미곡에 대한 각기관의 추정치를 비교가능토록 정리한 것이다. 북한의 직접 발표치가 없는 경우는 FAO의 통계치와 비교하는 것이 비교적 북한의 발표치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농업기술 수준은 열악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米穀과 옥수수 재배를 중심으로 품종개량과 경종방법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金日成이 主體農法을 제시하면서 벼의 冷床苗와 옥수수의 영양단지에 의한 재배방법이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재배기간의 단축으로 서리의 피해를 줄여 단위당 수량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표 4-4〉 북한의 알곡¹⁾ 생산량 추정(조곡 기준)

(단위 : 1000M/T)

년 도	북한발표 ²⁾	FAO ³⁾	미국CIA ⁴⁾	농경연 ⁵⁾	국토통일원 ⁶⁾
1946	1898	—	—	1898	—
1965	4526	4923	3150	3788	—
1975	7700	7035	5400	4869	4953
1976	8000	5629	5600	4962	5032
1979	9000	8585	6300	5331	5177
1982	9500	8985	6700	5715	5996
1984	10000	10183	6600	—	6267
1988	—	11872	—	—	—
1990	—	10405	—	—	—

註 1) 쌀, 옥수수, 맥류, 두류, 잡곡을 합한 수치임.

2) 연도별 김일성 신년사, 朝鮮中央年鑑 및 금일보고(국토통일원, 「北韓經濟統計集」에서 재인용).

3) FAO의 「Production Yearbook」과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음. 단 1970년 자료는 1969~71년의 평균치임.

4) US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국토통일원, 「北韓經濟統計集」에서 재인용).

5) 농경연, 「北韓의 農業生産能力評價」, 1983

6) 1976년까지의 자료는 국토통일원의 「南北韓 營農基盤分析과 生産能力比較」(1977) p. 105에 있는 자료에서 조곡으로 역산한 것이고 1977년 이후는 국토통일원의 「南北韓經濟現況比較」에 나오는 자료를 역산하였음.

이와 같은 과학적 영농에 힘입어 1970년대까지는 식량수급에 큰 어려움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후반 부터는 식량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한다. 북한이 발표하는 산출량수준은 1974년 부터 급증하고 있다. 즉 알곡생산량이 1973년까지만 하여도 평균 500만톤 미만이었으나 1974년부터는 갑자기 700만톤, 2년후인 1976년에는 800만톤, 1979년에는 900만톤에 이르고 있다. 1984년에는 1,000만톤을 돌파하였다고 발표하고, 1993년에 완료되는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중에는 1,500만톤 생산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발표가 비록 어떤 불순한 의도는 차치하고라도 생산량을 精穀으로 計算한 것인지 또는 粗穀으로 환산한 것인지, 그 對象이 穀物 전체인지 또는 穀物로 정의되는 國際基準 以外的 他作物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 할 수가 없다.

현재 북한이 농업생산에 절대적 기초가 되는 농경지면적과 농업기술 수준 및 농업자재 공급 등으로 보아 이러한 생산량은 가공의 수치임에 틀림없다. FAO 등 國際機構에서조차도 북한발표치를 그대로 인용은 하나 이 수치가 신뢰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이 비약된 숫자에는 무엇인가 사실적인 근거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근거로 북한은 알곡생산에 1958년부터 서류생산량을 포함시키면서 통계치를 은폐하여 오다가 '63년부터는 그 면적까지도 알곡재배면적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 薯類에 果樹와 菜蔬生産량을 生體重量이 아닌 乾物重量으로 換算하여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첫째, 북한은 '71년부터 「남새업」項이 신설되었고 둘째, 김일성은 “시레기”도 식량이라는 점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며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은 각종 채소류를 副食이 아닌 실질적인 식량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 일본의 「川田信一郎」의 北韓見聞記에서 「穀物에 있어서 중요한 농산물은 菜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人間生存의 기본적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지상에서 생산하는 모든 可食物은 모두 식량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1963년 이후 북한이 발표한 알곡 총생산량은 비록 斷片的이기는 하나 1973년까지 500만톤 수준내외에서 起伏되어 오다가 1974년에 알곡 총생산량

이 前年度의 5,353千톤보다 31%가 증가한 700만톤으로 갑자기 증가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700만톤 생산으로 이해에는 전례없던 大豊年宣傳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비해 수입이 203천톤이나 많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장된 수치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1973년에 북한이 3大革命小組를 각 공장과 협동농장에 파견하여 金日成·金正日 父子의 직접지도로 이른바 反官僚主義 투쟁이라는 脫權鬭爭으로 金正日의 세습후계 책동을 노골화 시켰던 해일뿐만 아니라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해이다. 또한 '74년을 金日成의 「農業問題 테제」 발표 10주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등으로 보아 정치·경제적 패배의 해소책으로 알곡생산량을 조작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표 4-5〉 쌀생산량 추정(정곡기준)

(단위 : 1000M/T)

년도	북한발표 ¹⁾	통일원 ²⁾	미국CIA ³⁾	농경연 ⁴⁾	FAO ⁵⁾
1970	2761(2974)	—	1400	1480	1722
1976	2480(2671)	—	—	1781	2988
1979	3370(3629)	1760	—	1906	3578
1982	3557(3830)	2017	2500	2040	—
1984	—	2214	2700	—	4010
1987	—	2035	—	—	4464
1989	—	3084	—	—	3960
1990	—	2760	—	—	3960

자료 : 1) 1974년이전 자료는 노동신문(1975. 9. 23)에서, 1974년 이후 자료는 조선중앙연감 각년도판

2) 국토통일원, 「남북한경제현황비교」, 각년도판

3) US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각년도판,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p. 834-288에서 재인용

4) 농경연, 「북한의 농업생산능력평가」, 연구보고 65, 1983, p. 88~p. 97

5) FAO, 「Production Yearbook」, 각년도판

주 : 1) 조곡과 정곡의 환산비율은 72%

2) 북한은 미곡의 총생산량을 발표하지 않고, 다만 이따금씩 1정보당 수확량을 발표한다. 여기서는 후자를 기초로 논면적을 감안 계산한 것이다. 북한발표 1정보당 수확량(조곡기준)은 1971년~1974년은 제1차 6개년계획의 평균치인 5,900kg, 1976년은 5,300kg, 1979년은 7,200kg, 1982년은 7,600kg이다.

3) 북한발표처 계산시 논면적은 65만ha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내 수치는 70만ha를 기준으로 한 값이다.

북한이 발표한 알곡생산 1,000만톤은 과일, 채소 생산량을 乾物重量으로 환산하여 본 결과 예상했던대로 북한발표치와 일치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최근에 발표된 米穀의 정보당 수량은 7.6톤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 수치 또한 精穀인지 粗穀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만약 精穀인 경우에는 북한의 논면적이 70만 정보일때는 532만 톤, 65만 정보일 경우에는 494만톤의 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앞의 여러기관이 추정한 정곡기준 全알곡생산량 550만톤과 거의 맞먹는 숫자이다.

이와 같은 북한 발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전문가 또는 연구 기관의 검토에 의하면 대개 과장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문은 이점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식량(쌀)생산수준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였다.

①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방법

$$Q = a + bT + \epsilon$$

Q : 추정되어야 할 경제변수, T : 시간변수

ϵ : 확률적 오차항, a, b : 추정계수

② 변경지역 실측지를 원용하는 방법

: 북한이 발표하는 경지면적을 주어진 조건 남한의 북한접경지역 생산력과 북한의 중국 쪽 접경지역 생산력을 원용하는 방법.

③ 소비수준을 이용하여 역산하는 방법

: 북한이 발표하는 소비량 분배기준과 수출입 상황을 주어진 조건으로 활용, 북한의 총 생산량을 추정하는 방법.

(1)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방법

1946~62년간 조선중앙연감 자료와 1963~84년간의 국토통일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단 해당자료가 통계수치로 제시되지 않은 년도의 자료는 보간법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표 4-6〉 회귀분석법에 의한 총생산량 추정(정곡기준)

구 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5년
식부면적(만ha)	70.4	71.0	71.7	72.4	74.5
단수(kg/10a)	336	340	345	349	360
총생산량(천MT)	2,365	2,414	2,474	2,527	2,682

(2) 변경지역 실측치를 원용하는 방법

본 분석에서는 延邊지역 실측치의 援用인데 여기에서 民統線인접 3개지역 평균치인 10a 당 443kg을 적용시 북한 畝면적을 65만 정보로 보았을때 미곡 총생산량은 약 288만톤이 생산되고, 북한인접 지역인 中國 吉林省 朝鮮족 자치주 평균수량 335kg 적용시 218만톤, 북한품종의 民統線 인접지역에 栽培時 단보당 수량이 470kg으로 총미곡생산량은 306만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邊境地域의 미곡생산량 비교(1991년 정곡기준)

구 분	10a당 수량	비 고
南韓 전체평균	446kg	일반벼
民統線인접 평균	443kg	西部, 中部 및 東部 3지역의 평균치
西部지역	400kg	판문점 인근 대성마을
中部지역	505kg	철원지역 3개 벼품종 평균치
東部지역	424kg	강원 고성지역
中國 吉林省 朝鮮족 자치주	320~350kg (335kg)	북한인접 연변지역 평균치
北韓, 民統線 인접 북한 품종	470kg	철원지역에 시험재배한 北韓품종 평균치

以上の 수치는 어디까지나 水稻栽培에 南韓의 耕種方式을 채택한 결과이며 이 수치가 마치 북한지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농업생산에 있어서 북한의 기후, 강수량 등 자연조건과 移秧, 耕耘, 施肥 등 경종방식이 다른뿐만 아니라 집단영농과 개인농과의 생산성 차이 등으로 인해 비교는 무리라 판단된다.

(3) 소비수준을 이용하여 역산하는 방법

북한의 연령별·계층별 식량배급기준을 근거로 하여 최대 식량소비량을 구하고, 생산량을 역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8〉 주요곡물의 수요량 추정

단위 : 천톤

	순식용	사 료	가공·종자	감 모	정곡계	조곡계
미 곡	1,344	—	21	62	1,427	1,949
옥 수 수	2,465	2,082 (1,041)	1,300	99	5,946 (4,905)	5,946 (4,905)
기 타 ⁵⁾	285	•	285	396
계	4,094	2,082 (1,042)	1,321	161	7,658 (6,617)	8,291 (7,250)

주 : ()내 수치는 육류생산 톤당 사료소요량을 남한기준 1/2로 적용

(4) 각 추정치의 평가

북한당국의 발표치, FAO통계치 및 각 추정치를 상호비교평가(1990년 기준)한 결과가 다음표에 제시되어 있다. 북한발표치 혹은 FAO통계치와 여타 기관의 추정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 4-9〉 각종 통계치 및 추정치의 비교(1990, 조곡기준)

단위 : 천톤

	미곡생산	옥수수생산	기타 잡곡	총계
북한발표치	—	—	—	15,000
FAO통계치	5,500	4,440	505	10,445
통일원추정치	3,833	3,400	—	—
농경원추정치	1) 3,352	—	—	—
	2) 3,024	—	—	—
	3) 1,949	4,905	396	7,250

주 : 1) 회귀분석법에 의한 추정치

2) 변경지 실추치를 원용한 추정치(65만ha가정시의 평균 수량)

3) 소비수준을 이용하여 역산한 추정치

본연구원에서 추정된 값들 중 회귀분석에 의한 추정과 변경지 실측치를 원용한 추정치는 통일원의 추정치와 비교적 근사한 값을 가진다. 그러나 북한의 소비수준을 근거로 역산해서 추정된 값은 여타 추정치들에 비해 큰 차이가 난다. 북한의 농산물 수출입, 실제생활상, 중국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소비수준을 근거로 역산한 추정치의 값이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0〉 북한의 식량(쌀) 수급과 농지의 과부족 추정

구 분		1990년	2001년	남북통합시 2001년의 예상 수급량
수 요	1인당 연간 소비량	129.9kg/1인 ¹⁾	126.6kg/1인 ²⁾	126.6kg/1인 ²⁾
	인구 ³⁾	2,200만명	2,585만명	2,585만명
	소비량 ⁴⁾	286만MT	327만MT	327만MT
공 급	10a당 수량	220kg/10a ⁵⁾	350kg/10a ⁶⁾	470kg/10a ¹¹⁾
	畝면적	65만ha ⁷⁾	70만ha ⁸⁾	
	생산량	143만MT ⁹⁾	245만MT ¹⁰⁾	329만MT
과부족량		△143만MT	△82만MT	△2만MT
과부족량에 대한 필요경지면적		△ 65만ha ¹²⁾	△23.4만ha ¹³⁾	5,255만ha

주 : 1) 연간 쌀소비량 129.9kg은 남한의 1970년대의 평균치임.

2) 2001년 북한의 1인당 쌀소비량은 1980년대의 남한 평균치임

3) 앞 page의 〈표 4-2〉의 자료출처

4) 1인당 연간소비량×人口

5) 생산량과 양간 1인당 쌀배급량×全人口

* 순식용외 소비량(감모, 가공 등)/7의 추정정지 면적

6) 1990년도 연변지역의 최대생산 가능량을 적용

7) 북한당국과 日本學者의 발표 및 농경연의 추정치에 근거

8) 북한이 발표하는 간척지 개간과 농경연의 추정치 등을 감안

9) 5)×7)

10) 6)과 8)의 결과에 의거 어어진 수치

11) 農經研 食糧室 추정치 및 북한지역 근접 民統線 인근지역에서의 북한품종을 시험재배한 평균 畝收 적용

12) 143만MT을 220kg/10a으로 제한 것임

13) 82만MT을 350kg/10a으로 제한 것임

1990년의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은 그 전제조건으로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을 1970년대의 남한의 평균치인 129.9kg으로 적용하고 10a당 수량은 북한의 쌀배급량을 역추정한 수치 143만톤을 고려한 결과 총 부족량은 <표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량의 100%수준인 143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족량에 대한 필요경지면적은 65만 정보로 현재 북한의 쫄면적과 맞먹는 수치이다. 앞으로 2001년에는 1인당 소비량을 남한의 80년대 평균 소비량 126.6kg에 예상인구와 경지면적 그리고 북한 변경지역인 중국연변자치주의 평균 350kg을 적용한 결과 총쌀부족량은 82만톤이며 필요경지면적이 23.4만 정보이다.

앞으로 남북한 통합시 2001년에 예상되는 쌀수급량을 보면 이시점의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마찬가지로 남한의 1980년대를 적용하고 10a당 수량은 남한추정치 및 북한품종의 휴전선근교 남한지역내에서 재배시험된 단보당 수량 470kg을 적용한 결과 총부족량은 2만톤에 불과하고 부족경지면적도 4,255ha밖에 되지않아 이시기의 식량수급상에는 큰애로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남북한 통합시는 남한의 기술과 경종방법이 북한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이다

4) 林業 및 水産業 현황

가) 林業

북한의 주요 산림정책은 1947년 國有化 조치 이후 “산의 종합적 이용을 통한 산간지대 농민의 생활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지역은 온대 및 한대성 기후지역으로서 150여종의 樹木을 비롯한 1,100여종의 풍부한 식물이 분포하여 있다. 산림면적은 70년 당시 전체면적의 81%인 990만ha이던 것이 1986년에 이르러서는 그간의 다락밭만들기운동과 새땅찾기운동 등의 영향으로 전체면적의 77%인 940만ha로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축적은 '70년의 1억 6천만 m^3 (ha당 평균축적 : 16 m^3)에서 '86년에는 3억 6천 m^3 로 증가되어 ha당 평균축적도 남한의 30 m^3 보다 높은 38 m^3 로 알려지고 있으나 과다 추정되었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별로는 두만강, 압록강 상류지역인 양강도, 자강도 및 함북 등 3개소가 전체 산림면적의 45%와 전체 산림축적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ha당 평균축적도 평균치

를 상회하는 40~70m²에 이르고 있어 이 지역에 산림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林相도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표 4-11〉 지역별 산림실태

단위 : 백만ha, 백만m³

구 분	산 립 면 적('70)		산 립 축 적		평균추정 축적 (m ³ /ha)
	면 적	구성비율(%)	'70조사결과	'86추정치	
함 북	1.5	15.2	27.8	62.6	41.7
함 남	1.6	16.5	17.9	40.3	25.2
양 강	1.4	14.5	43.8	98.6	70.4
자 강	1.5	15.5	36.6	82.4	54.9
평 북	0.9	9.5	13.7	30.9	34.3
평 남	0.9	9.5	13.7	30.9	34.3
강 원	0.9	9.1	6.4	14.4	16.0
황 북	0.6	6.0	3.5	7.9	13.2
황 남	0.4	4.3	0.8	2.0	5.0
계	9.9	100.0	160.0	360.0	36.0

주 : 평균추정 축적 : 산림면적은 70년, 축적은 86년 추정치 기준.

따라서 전체적인 산림상태는 남한과 비슷하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는 황폐산지가 없고 지역별로 임상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북한의 경우는 무분별한 산지개간, 농산촌지역의 임산연료 의존 등에 따라 야산지대 및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산림황폐가 심하여 지역별로 임상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임상이 좋은 자강도와 양강도에서 근간 총벌채량의 65%에 이르는 用材生産 목적의 과도한 천연림 벌채가 집중되고 있어 이곳에서의 산림황폐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연간 木材需要量은 남한의 절반수준인 약 450만m³로서 이는 국내목재생산 300만 m³과 시베리아 산림개발 참여에 의한 150만 m³ 도입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山間地帶 郡에는 3~10개의 林村을 설치하고 임촌별로 70~200가구를 주거토록 하면서 1년에 약 300ha(임목 1만5천 m³) 정도를 벌채토록 하고 있다. 벌채방식은 1

963년부터 循環式 벌채방법(20년을 輸伐期로 하는 擇伐方式)을 도입, 벌채사업기구인 정무원 직속 임업총국 산하의 국가기업소 형태인 임산사업소(전국 60개소)별로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과학적인 벌채와 산림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작업단에 의한 過伐, 濫伐 등 불법벌채가 많아 또하나의 산림황폐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자원보호를 위해서 개인이 入山을 할 경우 入山證을 사전에 교부토록 하고 引火物質의 不所持로 산불발생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는 남한과 유사하여 6개의 자연보호구, 14개의 동물보호구, 14개의 식물보호구 및 희귀동식물 223종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林産工業에 있어서는 각군마다 2개의 소규모 製材所가 설치되어 있고 자강도 등 대량 목재생산지 및 中大도시에는 중규모 이상의 제재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규모의 합판공장 20여개와 수미상의 펄프, 제지공장도 운영되고 있다. 임산공업시설은 1950~60년대에 중국,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이것마저 구식으로 노후화되어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水産業

북한의 수산정책은 타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자립경제 건설과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한 증산일변도의 정책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 수산업의 관리·운영체제는 과거에는 중앙집권적 지도체제로서 국영수산부문과 협동수산부문의 이원적 관리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1978년부터 국영수산부문을 관리하는 수산부와 협동수산부문을 관리하는 협동수산총국을 동격으로 격상시켜 이를 통합·조정하기 위한 수산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수산자원의 분포를 보면 현재 북한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수산동식물은 약 650여종으로 이중 해양수산동식물이 530여종, 내수면 수산동식물은 120여종이 분포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어업자원은 명태로서 북한 발표에 의한 명태자원량은 500~600만톤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그 중 연간 적정어획량은 250만톤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어업생산기반에 있어서 북한의 어선세력은 총 30,600척으로 이중 동력선은 전체의 64%

인 23,000여척이다. 이중 1982년말 현재 3,000톤급 보유척수는 총 32척이고, 1만톤급 이상의 공모선은 3척, 5,000~10,000톤 미만인 10척이다. 북한의 어업은 소련의 기술이전에 의한 과학적 어로방법을 도입하여 이미 60년대 초에 항공기에 의한 어군탐지방법이 시도되었고 이 시기에 각도에 수산종합기계공장을 설치하여 선박기관, 발전기, 어류펌프, 수산물 가공기계 등을 자체 생산하였다. 1963년에는 이미 75마력 이상의 중형어선에 어군탐지기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어법은 명태의 어획을 주대상으로 하는 동해안의 트롤어법(1950년대 소련으로부터 기술도입)과 주로 명태, 가자미, 청어와 서해안의 새우를 주어획 대상으로 하는 기선저인망어법, 서해안의 안강망어법 등이다. 특히 트롤어법은 1960년대 초에 대량건조를 통해 어선현대화에 기여하였고 1969년부터는 3,750톤급 선미트롤어선을 자체 건조하여 원양어선의 규모 확대가 실현되었다.

이외에 양식기술개발도 1970년대에 와서 중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을 통해 해조류 종묘생산과 양식방법의 개선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 수하식, 수평식 해조류양식과 치패의 인공종묘생산 등이 본격화되어 보다 선진화된 集約的 어장이용방법이 도입되었다. 특히 양식어업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연근해어업 자원감소로 잡는어업이 한계에 도달, 1980년 중반부터 수산정책의 최우선순위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생산량은 농산물처럼 공식발표는 하지 않고 있으며 간혹 발표된 수치도 과장되어 있어 정확한 생산량 파악이 어렵다. <표 12>에서처럼 1986년에 360만톤이던 것이 1990년에는 불과 4년 사이에 3배나 증가한 1,100만톤 생산이 가능하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도 농산물처럼 과대 포장된 것으로 거의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그러면 정확한 水産物 生産量은 어느정도일까. FAO와 國土統一院 등에서 추정한 것을 보면 대략 200만톤 수준인것 같다. 통일원 자료에 의하면 1989년의 경우 219만톤으로 이중 해면어업이 46.1%인 101만톤, 양식어업이 48.9%인 107만톤, 내수면어업이 5.5%인 12만톤이었다.

한편 북한의 수산물은 주요 수출품목으로 대표적인 외화획득원이다. FAO 통계에 의한 1980년의 2,929만 달러에서 매년 11.7% 증가하여 1988년에는 7,089만 달러로 1980년에 비해 2.4배 증가하였다.

〈표 4-12〉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

단위 : 만M/T

연 도	北韓발표	FAO ⁵⁾	Valencia교수 ⁶⁾	통일원
1980	200 ¹⁾	140	연평균 236	
1981		150		
1982		155		
1983		160		
1984	350 ²⁾	165		223
1985		170		242
1986	360 ³⁾	170		237
1987		170		212
1988		170		215
1989				219
1990	1,100 ⁴⁾			

주 1) 朝鮮中央年鑑, 1981. p269

2) "DPR Korea's Fisheries Industry", 조선해산물수출입회사, 1988.

3) 朝鮮中央年鑑, 1989. p230

4)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년)의 주요목표, 제8차 北韓 최고인민회의 제2차 회기보고, 이군모.

5) FAO, "Fishery Statistics", 1989. 여기서의 수산물 생산은 해조류가 제외된 것으로 1984년 해조류의 생산을 약70만톤으로 北韓 발표

6) FAO/UNDP 정보를 근거로 하와이대학의 Valencia 교수 추정

〈표 4-13〉 南北韓 어업부문별 생산량 비교(1989년 기준)

단위 : 만톤

구 분	계	해면어업	양식어업	내수면 어업
南 韓(A)	332 (100.0)	244 (73.5)	85 (25.6)	3 (0.9)
北 韓(B)	219 (100.0)	101 (46.1)	107 (48.7)	12 (5.5)
B/A(%)	66.0	41.4	125.9	400.0

자료 :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각년도

국토통일원, 1989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90.

특히 대외개방화를 실질적으로 시작한 1987년부터는 그 규모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1988년의 북한 수산물수출은 당해년도 남한의 수산물 수출금액 19억 달러의 약3.7%

에 불과하다. 북한의 주요수출품목은 1980년대 후반부터는 연체류 및 갑각류의 수출이 주종을 이루었다. 1989년의 경우 이들 품목이 전체수출의 57%인 4천만 달러에 이르렀고, 그 다음이 어류의 신선·냉장·냉동품으로 2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수산물의 90% 이상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북한의 수출시장 구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많은 품목이 중국 및 남한과 경합관계에 있다.

최근에 와서 남북한간 교역은 1988년 이후 1991년까지의 수산물 반입승인 물량이 총 2,800만 달러로 전상품 승인실적 2억달러의 13.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작년 한해의 수산물 반입승인금액은 철강·금속부문 다음으로 많은 2,500만달러로 1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수산업은 1970년대 전반까지는 생산조직체계의 정비와 어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비교적 높은 성장속도를 유지해온 것으로 예상되나 1977년 미국·소련의 200마일 경제수역선포에 의한 북양어장의 축소와 70년대 후반과 80년대초에 걸친 2차례의 유류과동으로 인하여 어로어업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1980년대에 진입하여서는 沿近海漁業의 자원고갈로 인한 전반적인 어획부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마. 要約 및 結言

1980년대 후반 부터 최근에 이르는 4~5년의 기간은 이데올로기가 종언을 고하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다. 동서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구소련과 동구가 변화하고, 중국과 베트남 마저도 개방과 개혁의 정책을 가속시키고 있는 이시점에서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유물사관에 입각한 경제의식, 중앙계획당국이 주체가 되는 철저한 계획경제질서, 원칙상 모든 물적 생산수단의 국유화 또는 집단화 등 전통적 사회주의 원리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김정일 후계체제와 연계되어 때로는 더욱 경직된 형태로 표출되기도 한다.

북한은 위와같은 철저한 사회주의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1947년 제1차 1개년계획을 시

작으로 오늘에 이르기 까지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1940년 중반 부터 시작한 사회주의화 과정이 1950년대 후반에는 완성단계에 들어갔다.

둘째, 自力更生 원칙에 입각한 중공업 우선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셋째, 산업구조상 1차산업과 제조업(그중에서도 중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 및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매우 미약하다.

넷째, GNP 대비 군사비의 비중이 매우 높다.

다섯째, 북한의 수출품 가운데 농수산물과 광산물 등 1차산품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여섯째, 북한의 국민소득, 생산성 등 주요경제지표는 1970년대 초반의 남한수준과 유사하다.

이와같은 경제전반의 흐름과 연계되어 북한의 농정이 수행되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6년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이 공포된 이래 1950년대 후반까지는 농림수산부문의 사회주의화가 완성되었다.

둘째, 1964년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면서 이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농촌에서의 3대혁명(기술, 문화, 사상)의 수행과 1970년대 초반 농업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가 추진되었다. 이 기간 동안 실질적인 성과가 두드러졌으며,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이 적극 홍보되었다.

셋째, 1970년대 후반 부터는 농림수산부문의 정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정체성의 극복을 위하여 1976년 「자연개조5대방침」이 결정되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간척지개간, 새땅찾기운동 등이 활발히 추진된다. 그러나 성과는 발표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산림 훼손과 자연과피의 부작용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최근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가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난, 특히 외화부족에 기인한 원유의 공급부족과 농업생산의 저위성에 기인한 식량부족이다. 본문은 농업과 관련된 북한의 식량사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에 의한 추정, 변경지역의 실측지를 원

용하는 방법 및 북한의 소비수준을 이용하여 역산하는 방법 등 세가지 방법으로 북한의 주곡인 쌀에 대한 생산량 추정을 시도하였다. 이 결과 앞의 두 방법은 종래 통일원 등에서 추정된 값과 근접해 있으나 북한의 실제상황을 설명하는데는 부족하였다. 마지막 방법인 북한의 소비수준을 이용하여 역산하는 방법은 앞의 두방법에 비해 생산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즉 앞의 두 방법이 10a당 생산량이 1990년 기준 각각 340kg과 320kg 이었던데 비해 후자는 220kg으로 추정되었다.

북한의 논면적과 실제 소비량 자료가 정확하다면 마지막 방법이 가장 설명력이 높다고 보고, 남북한의 통합에 대비하여 식량수급을 추정하는데 사용하였다. 그 결과 1990년 기준 북한의 공급량은 총수요량의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고, 따라서 약 65만ha의 논면적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만약 今世紀末 이전에 남북한의 경계가 통합되고 남한의 생산성 수준이 북한지역에도 적용된다면 적어도 쌀에 대해서만은 심각한 부족현상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결국 어떤 요인에 의해서이건 북한의 주곡부족은 생산성이 낮는데 원인이 있음을 밝혀준 것이다.

북한은 토지개혁을 시작할 당시에는 개인농의 경영권을 완전히 인정하였으며, 1950년을 전후로 생산성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그리고 농지의 집단화가 시작된 후에도 초기에는 30~50垧정도 개인소유형태인 「텃밭」을 인정하였다. 이 「텃밭」에서의 생산수준은 집단농장의 생산과 비교할 때 생산량이 2~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 「텃밭」은 '70년대 중반에 자본주의잔재라 하여 15~30垧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 「텃밭」에서 생산하는 채소, 경제작물 등 잉여분을 한달에 10일 간격으로 세번있는 농민시장과 각지역의 식료상점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 식량사정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이것이 1980년대 초 이전까지의 상황이며,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주민의 생활에 상당한 활력소로 되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연속 흉작과 생산성 저하 등으로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텃밭」을 비롯한 모든 경지가 주곡인 미곡과 옥수수 생산에 할애되면서 불요불급한 경제작물이나 채소생산의 재배기회를 박탈해 갔다. 이는 자연히 육류, 채소, 과일, 경제작물 등 副食의 절대적인 결핍현상을 초래,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식량부족의 압박감을 가중시켜, 때로는 과대포장되어 외부로 전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북한과 아주 유사한 과정이 중국에서도 있었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토지개혁을 실시하면서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공평히 분배하였다. 그결과 3년이 지난 1952년에는 농업생산성이 이미 戰前 최고수준에 도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후 「互助組제」, 「初級合作社」 및 「高級合作社」制, 「人民公社」制 등을 거치면서 토지의 국유화,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생산성은 크게 떨어져 식량은 부족하였다. 「문화대혁명(1966년~1976년)」이 끝나고, 1978년 「三中全會」 이래 「책임생산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종류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지난 10년간 약 30%~60%의 생산성이 증가했고 소맥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량이 자급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1990년 부터는 식량부족이 더이상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전세계 경지면적의 7%에서 전세계 인구의 22%를 원만히 부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의 경제개혁에 대해 많은 학자들을 동원하여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傳聞에 의하면, 금년 봄 「인민회의」 소집시 식량문제와 경제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격심한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농지의 국유화 혹은 집단소유를 완화하여 「책임생산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심도있게 거론되었고, 대내외적 충격을 감안하여 발표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심각한 식량난의 해소와 경제의 돌파구 모색을 위한 마지막 수단의 선택이라 보여진다.

〈 토 론 〉

제1토론자 : 도 준 호(조선일보 북한부장)

- 초기 사회주의 단계에서 사회주의의 집단주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중국·구소련의 지원과 토지개혁으로 인한 노동력 동원이 손쉬웠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점과 경직성, 이에따른 개인의 창의력 무시와 이운동기 유발의 부재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하락 등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성으로 북한의 식량·농업문제는 계속 정체된 상태로 있을 것이다.
- 경제류 및 물적교류로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며 정부에서는 양쪽의 정부수매 유지 및 농업구조조정 정책에 있어 통일후를 염두에 두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제2토론자 : 윤 여 창(서울대학교 교수)

- 통일후 북한의 농업문제는 농민과 토지의 두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농민은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남한의 농민과는 다른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
- 즉, 북한의 농민은 경영주체로 볼 수 없으며, 이에따라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이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북한의 농업생산성 저하의 극복을 위해서는 농민에게 다시 경영주체로서의 기능을 주어야 한다.
- 통일후 현재 북한의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의 체제를 시장경제적 측면에서 능동적인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 협동농장의 기업화, 즉 법인화를 추진 농민에게 농지소유권을 인정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축척을 유도하여야 함.
 - 이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간의 정보교류, 농업과 관련된 문제조정을 위한 준비와 농민의 재교육이 필요
 - 남한농업의 현장견학, 이주에 의한 교류등이 시장경제체제의 적응성 촉진을 위한 방법이 될 것임.

- 북한의 농민은 전체인구의 약 1/4로 통일후 많은 농민들의 전직에 대한 고려가 필요
 - 남한의 가격지지정책이나 수매제도는 통일후 북한농민의 전직과정을 늦추는 효과를 나타낼것임.
- 현재 산림의 기대가 국민전체에 대한 효용이 확대될 수 있는 공익적인 측면에 더큰 가치를 부여하는 현실을 감안 국유화된 북한의 산림을 계속 국유림으로 하여 국민전체를 위한 공익적 기능의 증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회자 : 연 하 청(KDI 북방경제연구센터 소장)

-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으로 농업, 토지,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매우 낮아 통일후 농림수산부문의 정책개발이 주요한 과제임.

2. 북한의 농지이용 실태와 농업생산능력

발표 : Dr. Schulz, Karl-heinz
(전 동독해외농업 및 농업사
연구소 소장, 독일)

번역 : 김 지 용

가. 서 론

지난 10년간 북한의 농지이용과 농업생산력은 모든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위치를 크게 신장시켰으며, 농업정책의 목적이었다. 농업부분은 국가 수입의 16%이며 노동인구의 37%가 농업에 관여하고 있다. 즉 농업은 북한경제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 농업정책의 장기적인 방침은 식량과 농업생산구조에서 부족한 제조산업을 위한 농업원료의 최대한의 자체 공급이다. 이러한 방침의 논리적인 결과는 외국시장으로부터 매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술의 양도에 큰 제약을 가져왔다.

이 국제적협정과 노동배분의 유리한 점은 단지 북한의 자원이용의 효과와 농업구조의 발전이 국제적 수준의 식료공업을 위해 무한히 확장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한후 북한의 지속적인 고립은 북한을 다른 영역으로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농업은 북한의 생산물만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1960년 10.8만명, 1990년 21.8만명)에게 식량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성공했다.

1979/81년에서 1990년까지 총식품생산량은 127.39%로 증가했으며 1인당 식품생산은 106.84%로 증가했다(표 1, 2).

1985년에서 90년사이 농산물 수입은 1억5천7백6십만불로 증가했으며 이는 127%의 수준이다. 이기간동안의 농산물 수출은 4억5천4백8십만불 감소했으며 40%의 수준이다. 이러한 농업에 있어서의 적지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요즘 식량의 부족을 겪고 있으며 1990년과 91년 남한으로부터의 제3국을 통한 쌀수입을 종결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1인당 곡물생산량이 1979/81년대비 1990년 97.19%로 낮아진 사실을 숨기려 하는데 있다

(표 2). 불행하게도 국가적인 통계와 현재 상황에 대한 출판물의 부족이 북한에 있어 정확한 농업발전을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제적인 단체의 평가와 1989년 10월 연구를 위한 북한방문때의 경험을 기초로하여 작성되었다.

북한의 농업아카데미에 게스트로 있을때 농업경제와 연구의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것은 북한의 농업발전과정을 살펴보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을 내릴순 없었다.

나. 생산의 자연환경—토지이용과 관개

북한의 농업경제는 자연환경에 크게 의존한다.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나 지질학적인 토대때문에(국토의 80%가 산이나 고지대) 단지 영토의 240만ha(20.3%)만이 농업생산에 이용될 수 있다. 농경지는 주로 서쪽 평야지대(모든 곡물생산 면적의 62%)와 동쪽평지에 있다. 벼는 따뜻한 평지와 강가에서 자라고있다. 모든 경작지는 농경지(94.2%, 2백31만ha), 다년생작물(3.8%, 과일농장 제외), 목장(2.0%)로 이용된다. 농경지는 밭(48%), 논(33%), 과수(15%)이며 이와같은 좋은 자연조건 때문에 여러가지 작물재배가 가능하며 특히 벼와 야채류가 더그러하다.

경작지는 매우 부족하여(0.12ha/人) land pool의 보존과 증대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1976년 경지면적을 넓히는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자연개조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목적은 밭의 관개, 10만ha의 개간, 15~20만ha의 계단식 밭 조성, 간척지의 개간, 조림과 물의 관리계획이다.

1987년부터 93년까지 이 계획의 목표는 약 30만ha의 간척지 개간으로 1991년에는 6,200ha가 대동만에 개간되었다. 이 계획의 하나는 대동강을 가로지르는 8km의 댐을 포함한 서해안에 뚝공사이다. 개간외에도 뚝은 육상과 해상수송의 문제를 푸는데 기여할 것이며, 농장과 산업에 사용하는 물을 공급 할 것이고, 전기를 발생하며 물고기 양식장을 공급한다. 개간된 토지의 대부분은 쌀의 증산에 이용될 것이다. 경작가능한 land pool은 74년과 89년사이에 15만ha가 증가했다.

기후에 따르면 북한은 대륙성기후와 해양성기후의 영향안에 위치해 있다. 여름과 겨울 사이의 온도변화는 남쪽지역에서 북쪽지역으로 갈수록 더 심하다. 겨울에는 몬순과 같은 대륙성공기가 온도를 -40°C 까지 떨어뜨린다. 여름몬순때문에 여름에는 따뜻하고(최고온도 40°C) 비가 많다. 지역간 강수량의 차이는 많아 700~1300mm이다. 아주 북쪽에서는 여름은 단지 2개월이고 작물이 자라는 기간이 매우 작다. 좀더 남쪽에서는 작물이 자라는 기간이 적어도 4개월이다.

FAO의 자료에 따르면 1974년부터 1989년까지 관개지역은 6십만ha에서 1백4십만ha로 증가하였다. 1990년초에는 40,000km에 달하는 관개수로와 저수지, 관개용 연못으로 북한 경지면적의 70%가 관개되었다. 이것은 경작가능면적의 87.5%에 관개시설을 설치 할 계획이었다. 1989년 북한의 서부해안을 따라 대동강의 흐름을 돌리는 400km의 긴 수로공사가 시작되었다. 관개시설의 한 부분으로 이 수로는 농촌과 새로 개간된 간석지에 물을 공급할 것이다. 1960년대 후반 농촌지역의 전화는 관개를 위하여 미리 필요한 만큼 공급되었다(모든 마을은 에너지망으로 연결되었다).

다. 농업의 물적·기술적 장비

큰농장들의 존재는 현대적 생산수단(기술) 효과적인 이용에 있어 좋은 구조적 상황을 제공한다. 약 3,800개의 집단농장은 평균적으로 500~600ha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으며 총경지면적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0개의 국영농장은 1,000ha의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경지면적의 8%를 차지하며 종자의 생산과 가축을 육종하여 마을과 산업 지역에 공급하는 주요목적을 실행하고 있다.

농업기반에 대한 FAO의 분석은 트랙터수는 1978/81년에 44,333대에서 1989년 72,000대로 증가하였다. 1984년 북한은 평야지의 집단농장에는 100ha당 7대의 트랙터가 있었으며, 고지대와 산간지역에는 100ha당 6대의 트랙터가 있었다. 1980년대 쌀생산의 경우 95%의 기계화가 이루어졌고 1990년초는 100ha당 5.5대의 이앙기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제초기와 콤바인의 수는 작아 국제적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주요한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계는 북한에서 자체생산한다. 내 경험에 의하면 농업기계나 장비의 기술적 수준

은 1990년대 현대농업의 필요조건에 맞지 않는다. 1989년 모든 기계와 기구는 180개의 기계와 트랙터 창고에 모여있었으며 국가재산으로 일정된 기간동안 농장에 대여된다. 기계화 정도가 작은 것은 토지구획이 매우 크기 때문이며, 큰 수노동의 힘이 가능한 것도 기계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벼 재배와 경사면에서의 옥수수재배는 100m²와 4,000m² 사이의 작은 구획). 그리고 기계화 단지의 산출량이 적고 낡은 기계와 장비 폐기율은 높게 나타나는데, 1984년의 트랙터의 비율이 1990년의 공식적인 보고와 같다는 사실은 기계화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비료의 사용은 농업생산물에서 화학화의 초점이다. 광물질 비료(N,P)의 생산은 “비료는 곡물이고 곡물은 사회주의다”라는 구호에 따라 증대되었다. 78/79년부터 89/90년까지 광물질 비료의 생산은 수출물량이 약 16,000톤으로 변동없는 수준을 유지하며 667,000톤에서 797,000톤으로 19.5%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광물질 비료의 수입은 114,000톤에서 34,000톤으로 29.8% 감소하였다.

북한은 질소와 인산비료는 100%, 광물질 비료는 약 95%를 국내생산하고 있다.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칼륨비료는 수입해서 쓰고 있다. 칼륨비료의 수입은 78/79년 104,700톤에서 88/89년에는 30,400톤, 89/90 7,500톤으로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이러한 사실은 곡물생산의 발전에 확실한 영향을 줄 것이다. 78/79년부터 89/90년까지 광물질 비료의 소비는 6.25% 증가했다. 1980년대 후반 광물질비료의 소비는 경작지 1ha당 324.5kg이었었다. 이 숫자는 질소 248kg(76.4%), 인56.1kg(17.3%)와 칼륨 20.5kg(6.3%)를 포함한다. 비료화는 의무적인 영양분석을 기초로하고 있다. 1977년 논과 밭의 1ha당 평균적인 비료의 사용량은 1.3톤과 1.2톤이었으며, 1989년에 논에는 1ha당 2.0톤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광물질 비료의 사용은 종합적인 경작때문이다. 광물질 비료의 사용외에 퇴비를 잘 이용하는데 농촌의 모든농가는 퇴비생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1980년대 부터 살충제와 제초제의 사용이 증가경향에 있는데 제초제는 쌀생산지의 97%에 사용되었다. 요약하면 북한의 농작물산출량 증가전략은 기계화와 전력화, 깊은 경운, 밀식과 집중적인 비료사용이다. 이와 덧붙여 이미 이룩한 적지않은 성과의 관개개혁의 초

점은 논에서 부터 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략과 결과는 1990년대초 북한의 농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숨기지는 못한다. 김일성에 따르면 작물재배방법들은 충분하지 못하며 ha당 생산량은 만족하지 못한다. 농업기술적인 문제, 비료의 부족, 생육환경의 불충분과 노동의 부족은 생산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라. 농업생산물의 증산

국제통계는 북한이 1980년대 농업생산이 연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1990년 농업생산은 79/81년 수준과 비교하여 128.27% 증가했다. 이와 같은 수준에 비추어 보면 가축생산은 곡물생산(125.23%)보다 매우 빠르게(148.01%) 증가했다(표 1).

식물생산은 단지 몇가지 농작물에 집중되어 있다. FAO 통계를 기초로하여 농작지를 계산해보면(1988~90년 평균), 곡물 68.3%중 쌀 29.0%, 옥수수 30.5%, 뿌리와 괴경작물 8.2%중 감자 6.7%, 두류 15.2%중 콩 14.7%이며 경작지개발, 곡물생산량, 총산출량은(표 3)에 나타냈다.

곡물생산은 식량이나 사료원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79/81년부터 90년까지 곡물재배면적은 1,508백만ha에서 1,582백만ha로 74,000ha가 늘어나 105% 증가했으며, 옥수수(44.4%), 쌀(42.4%)로 곡물생산면적의 가장 큰 부분이었다.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가축생산의 증가를 기초로 매우 강력하게 확대되었다. 쌀과 옥수수는 1988~90년대 평균 8,160kg/ha와 6,312kg/ha로 가장 높고 산출이 확실한 곡물이었다. 1980년대 곡물생산은 8,980만톤에서 10,417만톤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지면적의 확대와 곡물생산량이 639kg/ha로 11% 증가한 결과이다.

다음 중요한 곡물로는 밀, 보리, 기장, 수수, 귀리, 호밀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쌀은 중요한 수출원이었는데 같은기간 상당한 양의 밀이 수입되었다. 곡물중 감자의 생산은 2백만톤이상으로 상당히 많은데, 감자의 재배면적은 약 7%증가했으며 1인당 생산량은 약 100kg이다. 콩도 증가경향을 보여주는데 340,000ha로 경작지의 14.7%로 증가하였다. 콩은 주곡인 쌀을 보충하는 영양생리 측면에서 유용하다. 같은기간 콩은 가축을 위한 사료원

으로 Soybean mwal 추출을 위한 생산으로 점점더 중요하게 되었다. 채소는 온도, 일조량, 습도등 좋은 기후조건에서 잘자란다. 모든 채소는 관개된 밭에서 재배된다. 채소재배지는 60,000ha~70,000ha이다. 1년에 2번 혹은 3번 수확한다.

주요채소로는 무(40%), 배추(25%), 시금치(10%)와 양배추(5%)이다. 1990년 FAO 통계는 아주적은 채소류를 보여주고 있다. 토마토, 오이, 호박과 양파가 18,000ha에서 재배되고 있다. 북한에서 배추는 총생산 150만톤으로 매년 약 2백만톤의 채소생산량중 중요한 부분이다. 가능한 최대한의 면적과 기초식품으로서 자급자족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배추는 겨울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한다). 이곳에 맛있는 야채를 생산하는 것 같지 않다. 남한과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비교하면 FAO는 1990년 북한이 쌀(131%), 옥수수(134%)를 더 생산한다는 주목할 만한 보고를 하였다. 물론 높은 수준의 경작방법과 수작업의 풍부함이 필요한 작물의 생산량은 남한에서 주목할 만하게 낮다: 감자 75%, 양배추 17.4%, 토마토 49%, 호박 49.4%, 오이 42.7%, 양파 31% 담배 72.6%이다.

과일재배는 과일만 생산하는 농장이나 경작지에 집중되어 있다. 경사면이나 작은 과수원에서의 과일생산은 주로 지방시장에 공급된다. 총 300,000ha의 과일생산지중 2/3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대추, 살구, 밤, 서양오얏이 생산되며 나머지 100,000ha에 밤이 재배되고 있다. 생산물과 생산물의 질은 기계화, 비료, 방제 등 경작기술에 의해 증가되며 1993년의 연간산출량은 2백만톤으로 계획되었다. 농작물의 좋은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저장기술, 방법의 부족은 지속적인 과일의 공급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중요한 성장은 동물성 단백질 식품과 제조업원료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동물생산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가축은 모든 국영농장과 협동농장과 사유재산의 기초로, 각 농가에서 사육된다. 가축의 수는 매우 적어 1987년 Reiher의 통계는 목장 100ha당 소 29.1두, 젖소 1.4두, 양과 염소 2.8두이며 경지 100ha당 15.3두의 돼지나 닭 3.2수가 있다. 79/81~88/90년 기간중에 가축의 수는 증가하였는데 돼지 50%, 양 30%, 염소 22%, 가금 11%이다. 소는 5.8%로 매우작은 증가를 보였는데 젖소의 경우는 50% 증가하였다(표 4). 이와 같은 사실은 목초지와 풀을 재배하기위한 가능한 토지의 양이 적기 때문이다.

육류생산은 179%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가축수와 생산능력의 증가가 이와 같

이 발전한 주된 이유였다. 우유생산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150%나 늘어난 소의 수에 기인하며, 두당 우유생산량은 1990년에 2,378kg이었는데 이는 두당 우유생산량이 약 7% 증가한 것이다. 계란의 생산도 130.5% 증가하였다(표 4).

이와같은 축산물의 증가는 곡물의 자가생산이 증가한데 이유가 있으며 단백질사료의 산업적 생산의 시작과 확장, 사료원의 수입에 있다. 이와 같은 산출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육류, 우유와 계란의 수요는 양과 질, 종류에서 충분하지 못하다. 두당 연간 우유생산량(5,879kg)과 두당도체중(200kg)의 실현은 정부의 지정지역이 가축당 생산력 증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마. 전 망

세계적인 사회변화과정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 북한은 농업정책과 농업경제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생산의 자연환경과 현재의 농장구조는 생태학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생산적인 농업을 위해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농업경제의 진보는 어떻게 국제적 상황을 받아들이며, 생산력 증가를 위하여 현재의 농업구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발전을 위한 기본은 북한의 해외시장의 개방, 시장경제 구조의 적용과 이윤분배의 재구성을 준비해야만 한다.

생산성 증가를 위한 일반적인 선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 산출물이나 효과면에서 최고의 증가를 할 수 있는 지역적인 잇점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국내나 국제적으로 노동의 분배를 고려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을 지방화하는 것이다.
- 높은생산력과 에너지-효율적인 기계, 도구와 이를 사용하는 기술로 농업과 식품산업을 준비
- 효과적인 농업기술, 비료화, 방제 등의 기술로 식물종류에 대한 특정한 연구와 가능한 모든 잠재력을 산출물에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최적의 사양과 보전으로 육종의 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 높은 산출량의 식물종류와 많은 생산력의 동물육종을 도입해야 한다.
 - 경작후의 효과적인 기술에 의한 저장 수송을 통해 수확물의 손실을 줄여야 한다.
 -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북한농업구조의 재편과정을 위한 농업과학학술연구소의 설립과 농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결과의 도입과 서방의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 농업과 식품산업에서 농부들의 참여로 좋은 생산물을 생산한 결과 사람들이 이윤을 가질수 있어야 한다. 사적인 이윤을 기초로, 농장과 공장의 경제결과와 노동과 보수의 일치를 통하여
 - 일반적인 하부구조와 중간그룹 산업의 설립 발전을 통한 마을사람들이 일과 생활하는 공간과 주요농업생산물의 현대화에 따라 자유롭기를 기대하는 노동자의 고용을 위한 상황인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
- 남북통합이나 국교회복의 과정에서 농업경제의 발전잠재력의 고려가 가능할 것이다. 독일재통합의 구조속에서 선택된 농업의 현장의 특별한 상황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설명을 줄 것이다.

북한의 농업식량생산 지표(1979~81=100)

	1979	1985	1988	1989	1990
식료품생산	98.15	115.45	123.84	124.57	127.39
농업식품생산	98.08	115.85	124.55	125.41	148.27
축산물생산	95.21	125.28	140.42	144.43	148.10
농작물생산	95.88	115.46	122.57	123.95	125.23
곡물생산	95.47	110.45	114.96	116.13	115.86

자료 : FAO Prod. Tear Book 1990. Vol. 44

북한의 1인당 식료품생산 지표(1979~81=100)

	1979	1985	1988	1989	1990
식료품생산	99.33	106.00	107.77	106.43	106.84
농업식품생산	99.86	106.36	108.39	107.15	107.57
축산물생산	96.97	115.05	122.23	123.43	124.16
농작물생산	97.64	106.03	106.69	105.92	105.05
곡물생산	97.23	101.43	100.07	99.24	97.19

자료 : FAO Prod. Tear Book 1990. Vol. 44

	1979~1981			1988~1990		
	수확면적	수확량	총생산량	수확면적	수확량	총생산량
	1000ha	kg/ha	1000t	1000ha	kg/ha	1000t
곡류	1,508	5,958	8,988	1,579	6,597	10,417
밀	49	2,487	123	52	4,076	212
쌀	635	7,453	4,733	670	8,160	5,467
보리	72	1,979	142	60	2,500	150
귀리	44	1,673	73	32	2,000	63
옥수수	633	6,043	3,833	705	6,312	4,450
수수	13	1,328	18	10	1,500	15
기장	62	1,065	66	50	1,200	60
괴경작물	153	12,486	1,909	190	13,458	2,557
그중 감자	125	12,289	1,535	155	13,172	2,042
유채작물	330	840	280	351	12	320
그중 콩	300	1,133	340	340	1,297	441
야채와 메론			2,222			3,215
야채(메론제외)			851			1,278
양배추	24	13,656	330	32	12,865	412
토마토	3	13,217	38	5	13,600	68
오이	3	11,398	38	5	12,800	64
호박	5	10,400	54	8	10,250	82
양파	2	12,711	25	3	15,333	46
담배	36	1,241	45	40	1,600	64

축산물생산 현황

사육두수

	\bar{X}	\bar{X}	1979/81=100
	1979~81	1988~90	
소(천두)	945	1,277	105.8
돼지(천두)	2,100	3,148	149.9
양(천두)	292	379	130.0
염소(천두)	238	290	121.8
가금(백만수)	18	20	111.1

생산량

	\bar{X}	\bar{X}	1979/81=100
	1979~81	1988~90	
육용우와 송아지(천두)	204	290	142.2
소고기(천톤)	31	44	141.9
양(천두)	94	131	139.4
양고기(천톤)	1	2	200.0
염소(천톤)	74	110	148.6
염소고기(천톤)	1	2	200.0
돼지(천두)	2,317	3,243	139.9
돼지고기(천톤)	113	168	148.7
가금육(천톤)	18	20.3	112.8
유우(천두)	24	36	150.0
우유생산량(천톤)	55	86.3	156.9
연간두당우유생산량(kg)	2,244	2,307	106.8
계란(천톤)	103.	140.7	135.5
비단(천톤)	2.	4.0	148.1
소가죽(천톤)	4.	6.1	141.8
양가죽(천톤)	0.24	0.33	137.4
염소가죽(천톤)	0.15	0.22	146.6

〈 토 론 〉

사회자 : 문 팔 용(건국대학교 교수)

- 북한연구에 있어서 통계자료는 분석전에 검토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농업통계는 일관성을 살펴야 한다. 즉, 예를 들면 농기계, 비료, 농약사용 등 생산투입요소의 시계열량과 생산량의 시계열 자료의 모순점이나, 생산투입요소가 다른나라와 이상한 점은 없는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제1토론자 : 강 봉 순(서울대학교 교수)

- 북한의 농업은 생산통계자료의 과대발표로 인한 신뢰성 문제로 농지이용, 농업생산성 등의 객관적인 파악이 어렵다.
- 최근 북한의 쌀생산량은 550만톤으로 발표하고 있어 북한의 인구가 남한이 절반수준임을 감안할 때 200만톤 정도는 수출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하고 있으며 식량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과잉추계의 증거라고 생각됨.
- ha당 쌀생산량이 8톤이상으로 이를 위해서는 벼생산 기술에서 획기적인 생산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나 현재 북한은 단지 육묘기술분야의 냉상묘법의 확대만 있을 뿐이며, 품종개량된 최다수확 품종인 애자, 효도 등도 북청시험포장에서 6.2톤의 생산수준이며, 용성 1호와 용성 18호는 4톤 내외로 이를 기준으로 추정하여 보면 조곡기준으로 ha당 수량은 5톤내외로 총 350만톤 수준임을 판단 할 수 있음.
- * 조총련 동포의 추정은 추수부터 탈곡시 전혀 손실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4.5톤/ha(1984) 수준임(이때 FAO 통계는 8.6톤).
- 옥수수의 경우 FAO에서도 북한보고의 절반수준으로 발표
- 농산물의 자급율을 바탕으로 농업발전의 성과를 논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즉 북한농업이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를 자체적으로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나 자급율을 논하면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국민의 식품소비의 질적내용이라 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자급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축산물 소비증가에 의한 사료원

으로 사용되는 곡물의 수입증가로 농업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식량부족을 겪었던 60년대말 자급율이 굉장히 많아 농산물의 자급율로 농업발전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으로 영농의 규모화가 일찍부터 이루어져 기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총노동인구의 37%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 사실상 농업기계화의 효율이 발휘될 수 없으며, 이는 농업기계화의 효율이 발휘될 수 없는 여건에서 기계화가 진행되어 지나친 기계화, 규모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 기계화로 대체된 노동력의 흡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영농의 규모화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오히려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잉여노동력이 영농의 집약화에 활용된것으로 판단되나 노동집약적 농산물의 토지생산성이 남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노동집약적 농산물의 경우 개인의 영리,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곳에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며 협동농장 등에서는 불리한데 기계화에 의해 대체된 노동력이 투하된 것은 기계화에 의해 대체된 노동력의 이익분이 기계화 추진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 같다.

○ 북한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필요함.

제2토론자 : 전 흥 택(KDI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 텃밭이 농업부문, 특히 축산물이나 채소부문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텃밭농사에 대한 정보와 느낀점은?

○ 북한농업의 90년대 진행 방향은 어떨것이라고 생각하나?, 즉 재산권의 개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경제의 대외개방, 개별농가나 생산책임제로의 개혁등 북한농업의 개혁전망 어떠한가?

○ 농업생산지수 통계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품목간의 가중치가 필요한데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한국에서는 사용을 안하는데 FAO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답 변〉

- 통계자료의 문제는 인식하고 있으며 1989년 북한 방문시에도 정보획득의 어려움이 있었다. 협동농장의 방문시 들을 수 있었던것은 김일성의 방문시 한이야기가 주된내용이었으며 지역사회 사람이나 연구기관 종사원과 접촉할 수 있다면 추가적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북한방문시 방문했던 평양근교의 협동농장을 살펴보면
 - 전체 500ha 중 100ha 쌀, 300ha 옥수수, 40ha 과일, 60ha 담배를 경작하고 있었다.
 - 11개 집단에 870명이 종사하는데 7개 그룹은 곡물생산, 3개 그룹은 담배생산, 1개 그룹은 기계를 전문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음.
 - 각 그룹은 트랙터 2대와 8마력소형트랙터 7대를 이용하고 있음.
 - 생산량을 살펴보면 2,500Mt의 곡물중 옥수수 1,800Mt, 쌀 700Mt이었으며 담배 200Mt이었으나 검증은 불가능 하였으며 담배생산은 농가경제의 주요한 소득원으로 옥수수에의한 수입은 2,400원/ha인 반면 담배에 의한 수입은 45,000원/ha이었다.
 - 각 농가는 5수의 닭을 사육하며 공동가금류 농장이 있었다. 또한 각 가구당 1~2두의 돼지를 사육하며 사료는 농장에서 공급함. 양은 5마리가 있으며 방목하고 있었음
 - 협동농장의 문제점은 토양의 질이었으며 비료의 사용이 집약적이며 퇴비의 이용이 많아 각 협동농장에는 퇴비생산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 북한의 농업과학원은 16개의 연구소와 여러개의 실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3,000명의 과학자와 12,000명의 기술진이 있다.
 - 쌀, 곡류, 채소, 섬유곡물 등의 연구소와 토양분석, 농산물 가공처리, 작물보호, 기계화, 가축, 약물, 농업경제 등 여러분야의 연구기관이 있음.
 - 그러나 시설의 부족과 연구기관과 산업간의 교류가 없다.
- 경제와는 관계없이 주요식량에 관해서는 자급자족을 추구하고 있다.
 - 사견으로는 자급자족이 비효율적이며 국제적 무역협력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3. 북한사회주의 농업의 특성과 농정변화

발표 : 任 明(중국 길림대 조선연구소)

해방후 조선농업은 비교적 곡절적인 발전도로를 걸어왔다. 해방후 첫 20년대에는 조선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침을 채택하고 게다가 조선전쟁으로 인한 파괴로 말미암아 농업생산의 발전이 느리고 오래동안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60년대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에서는 점차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여 농업의 발전이 빨랐으며 또한 점차적으로 거치른 경영(粗放經營)으로부터 집약화경영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농업은 여전히 그리 발전하지 못하였다. 90년대 조선농업은 반드시 많은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요소의 제약으로 조선농업의 현재의 면모를 짧은 기간에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가. 조선농업의 발전과정

해방후 조선농업의 발전과정은 대체로 아래의 세 단계로 나눌수 있다.

1) 해방초기(1945.8~1950.6월)

이 시기 조선에서는 주로 토지개혁과 농산물의 생산을 늘리는 두가지 과업에 농업정책의 목표를 두었다.

해방전 조선농가의 구성을 보면 고농, 빈농이 전체 농가호수의 80%를 차지하고 지주가 4% 차지하였으며 부농과 중농이 15%가량 차지하였다. 토지소유사정을 놓고 말하면 빈농이 전체 토지의 30%가량 차지하고 지주가 58.2% 차지하였다. 토지가 없거나 모자란 농민들은 지주의 토지를 소작하였는데 토지세가 높고 소작료가 안정되지 못하여 지주와 소작인들과의 마찰이 아주 컸다.

이러한 사정에서 북조선 전체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였다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1946年 3月 5日 《토지법》을 공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 (1) 일본인, 매판자본가의 토지, 종교단체 및 5정보이상을 계속 소작 주는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며
- (2) 몰수한 토지를 무상으로 고농과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분배하는데 농가호의 인구와 노동력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배하며
- (3) 지주의 건축물, 가축과 농구 및 기타 생산재를 몰수하여 그 대부분을 고농과 빈농에게 나누어주며
- (4) 분배한 후의 토지는 매매(賣買) 또는 소작을 주지 못하여
- (5)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기 어려운 과원, 관개설비 산림 및 일부 토지는 국유화한다는 것이다.

토지개혁의 결과 조선에서는 100여만 정보의 토지(총경지면적의 53%, 원 소작토지의 95%)를 몰수하여 그중의 98만정보의 토지를 무상으로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농가호 총수의 70%이상 차지함)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14,477개의 건축물을 몰수하여 그중 대형의 건축물을 학교·기관과 사회단체에 분배한 외에 그 나머지 건축물과 4,772마리 가축 및 농구들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2,692정보의 과원, 1,185건의 관개시설 및 3,510,630정보의 삼림을 국유화하였다.

조선의 토지개혁은 20일만에 순조롭게 실현되었다. 이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크게 일으켜 농업생산의 복구와 발전을 촉진시켰다. 1948년 조선의 식량생산량은 266.8만톤에 달하였는데 이는 일제시기 식량생산량이 제일 많았던 1939년보다도 0.4% 성장한 것이다. 1949년에는 1946년보다 농업총생산이 51% 성장하였는데 그중 種植業(종식업)이 47%, 가축업이 85%, 잠업이 193% 성장하였다.

2) 조선전쟁과 경제복구시기(50.6~60.12)

조선전쟁시기 농업생산기반이 많이 파괴되어 농민들의 생활이 극히 곤란하였다. 전쟁중 37만정보의 토지에 파편이 박히고 그중 9만 정보의 토지는 경작할 수 없었으며 가축과 농기구들이 절반이상 손해를 보았다. 1953년에는 1949년에 비하여 식량생산량이 88% 떨어졌으며 남새는 58%, 목화는 23%, 과일은 72%, 농업생산총량은 76% 감소하였다.

전쟁후 조선정부에서는 농민들을 방조하여 농업생산을 복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노동력과 가축이 모자라는 사정에서 많은 지방의 농민들은 자원적으로 호조조 또는 농업생산합작사를 조직하여 농사를 지었다.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 것은 조선사회주의 농업의 목표이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고 농민들의 개인영농이 발달한 후에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려 한다면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전후시기를 농업협동화의 가장 좋은 시기로 보고 힘있게 추진시켰다.

조선에서는 당시 사회정치와 경제상황,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에 근거하여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데서 저급으로부터 고급에로의 세가지 형식을 취하였다. 첫번째 형식은 고정적인 노동호조조를 조직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토지는 여전히 개인한테 속하게 하고 노동만 공동으로 하며 생산물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하게 한다. 두번째 형식은 토지를 집중시켜 공동으로 경영하는데 여기서도 토지소유권은 여전히 개인에게 있고 연말결산때 노동일과 본인 토지수량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한다. 세번째 형식은 토지, 가축과 기타 생산재를 합작자의 소유로 만들고 집단적으로 노동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 1958년 8월 조선의 농업협동화운동은 순조롭게 실현되어 전체 농민이 모두 세번째형식의 합작사에 가입하였다.

농업협동화시기 조선정부에서는 농업을 많이 지원하였다. 게다가 농민들의 생산 적극성도 낮지 않아 농업생산의 복구가 빨리 진행되었다. 1958년 조선의 식량생산량은 370萬噸(만톤)에 달하였는데 이는 1946년의 3배이다. 목화생산량도 1953년의 3배 육류생산량도 1.3배 늘어났으며 과일, 잠업 및 기타 경제작물의 생산량도 많이 늘어났다. 따라서 농민들의 생활수준이 많이 올라갔는데 현금수입이 1953년에 비하여 4배, 식량분배량이 근2배 늘어났다.

그러나 농업협동화후의 60년대 중반기까지는 농업생산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 점은 60년도의 조절기를 예로 들수 있는데 1959년이후 조선에서는 농업의 발전이 공업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여 할수 없이 1년기간의 조절기를 내왔다. 그 원인은 주로 농민들의 사상의식 수준이 협동화를 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데서 찾을수 있는데 이 문제는 조선에서 오늘에도 존재한다.

3) 경제발전기(1961~現在)

이는 조선에서 농업발전이 제일 빠른 시기이다. 이 시기 조선에서는 농촌기술혁명을 크게 벌려 농업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조선에서는 이미 수리화를 기본으로 실현하였다. 현재 조선에서는 농업에 사용하는 인공호 8만개, 저수지 1,700여개, 양수기 23,700여개, 구멍뚫는 기계(打井机) 94,700여개를 가지고 있어 관개 총거리가 4萬km에 달한다. 그리고 남새(채소)와 2모작을 할 수 있는 토지에 분수식 관개체계를 보편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수리화는 평원지구로부터 구릉지구와 산지까지 확대하였는데 논관개는 철저히 완성하고 밭관개도 기본상 실현하였다.

농업기계화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1977년 매 100정보당 평균 트랙토르(트랙터)보유수는 평원지대는 6대, 산지와 구릉지대는 5대이며, 매 100정보당 평균 1대의 짐실는 자동차는 30%, 종합탈곡기는 40%, 모심는 기계는 50%, 가을걷이 기계는 50% 늘어났다. 이리하여 농촌에서 제일 어려운 밭갈이, 풀뽑기, 시비, 농약치기, 가을걷이, 운수 및 탈곡등 작업들은 거의 모두 기계로 일을 한다.

농촌전기화는 1969년에 이미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전기가 농업생산중 널리 기계동력과 열원(熱源)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에서의 농업용 전기 사용량은 아주 높은 수준에 달하였는데 1년에 대략 22억도의 전기를 사용한다.

화학화는 조선농촌기술혁명의 중요한 조성부분중 하나이다. 1984년 평균 매 정보당 화학비료 시비량은 2톤을 초과하였다. 현재 논은 이미 보편적으로 풀을 없애는 화학비료(제초제)를 사용하고 밭농사에서는 60%이상 제초제를 사용한다.

조선농촌에서는 또한 지대와 기후에 맞게 농사를 짓는 원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농사짓고, 경작제도로 많이 고쳤다. 예를 들면 새로운 육묘(育苗)와 모내기 방법을 바꾸었다든가 토지와 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고친다든가 등등이다.

조선에서는 이렇게 여러가지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유효한 기술조치를 취하며 과학적으로 농사지으므로써 불리한 기후와 자연조건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중반기까지 식량생산에서 해마다 풍년을 가져왔다. 조선에서 공개한 수자에 의하면 1970년 식량생산은 600만톤

에 이르고, 1976년에는 800만톤에 이르렀으며, 1984년에는 1,000만톤에 이르렀다 한다. 그러나 필자가 조선의 유명한 농업전문가로부터 조사한데 의하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식량생산 1,000만톤을 넘어본적이 없다는 것이다.

과일업도 아주 큰 발전을 가져와 現在 과일면적은 30만정보에 달하며 1984년 과일생산량은 150만톤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수출되고 인민들의 수요에는 너무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목축업은 조선농업부문에 제일 약한 부문이다. 지금 조선에서 생산하는 육류 계란과 우유등은 완전히 인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정책 및 조치

조선에서는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적극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조선농업이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보장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 정책과 조치를 대체로 보면,

1) 농촌에서 기술혁명,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깊이 벌려 농업생산력을 크게 발전시키는 토대하에서, 노동자계급과 농민간의 차별을 없애고, 집단적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이 전시켜 농민들의 노동계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2) 국가가 농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하는 것이다. 조선에서 농업에 대한 지원은 여러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먼저 농업현물세를 폐지한 것이다. 토지개혁이후 조선에서는 농업현물세제를 실시하였는데 세율은 25%였다. 조선전쟁후 평균 20% 내렸으며, 1958년에는 또 84% 내렸다. 그리고 1964~1966년간에는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인 것이다. 1959~1963년의 5년간 국가에서 농업 기본건설에 대한 투자는 기본 건설투자총액의 15.8% 차지하고, 1964~1980년간에는 19.8% 차지하였으며, 1980~1985년간에는 10%정도 차지하였다. 現在 조선에서는 일부 소형 농기구를 내놓고는 농촌기본건설은 대부분 국가에서 도맡아 하고 있다. 각종 농기구와 시설들은 국가에서 투자하여 협동농장들이 사용하게 하며, 협동농장들은 다만 경영관리비만 부담한다. 관개비는 설비수리비만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농민들의 살림

집 건설을 부담하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살림집을 건설한후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집세도 받지않고 집수리비도 협동농장의 공공기금에서 부담한다. 농촌의 학교, 탁아소, 병원, 상점등도 모두 국가에서 투자하여 건설한다. 1964~1980년기간 조선에서는 농촌에서 95.7萬호의 새 살림집을 건설하였다.

3) 농산품의 가격을 높이고 공산품가격을 내려 농민들의 수입을 늘이는 것이다. 협동농장들에게 생산한 식량중 종자, 사료와 비축할 식량을 내놓고 농민들에게 분배한다. 그들은 매 사람당 식량 400kg(학생 300kg, 어린이 150kg)를 농민들에게 분배한 다음 그 나머지는 모두 국가에 판다. 국가에서는 바로 이 부분의 농산품에 대하여 두가지 가격(雙重價格)정책을 실시한다. 다시말하여 높은 가격으로 농산품을 사들여 낮은 가격으로 도시 주민들에게 팔며 그 가격차는 국가재정에서 부담한다. 예를 들면 조선에서 입쌀의 수매가격은 1kg 당 60전인데 판매가격은 kg당 8전이며, 통의 수매가격은 56전인데 판매가격은 70전이다. 동시에 조선에서는 공산품에 대하여 낮은 가격정책을 실시한다. 1961~1970년기간 국가에서는 모두 10차례나 공산품가격을 내렸다. 1974년 조선에서는 천, 참직품, 신발류 및 기타 일용 공업품 2萬여종에 대하여 평균가격을 30%를 내려놓았다.

4) 발면적을 부단히 확대하고 토양을 개량하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발면적을 확대하는데서 무엇보다 먼저 나라의 산지가 많은 특징에 근거하여 농민들을 동원하여 산지를 이용개발하고 제전을 만들어 과일나무와 강냉이 등을 심는다. 다음으로 간석지를 개간하여 바다를 막으면서 밭을 만든다. 1978~1984년기간 조선에서는 10萬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여 이미 이익을 보기 시작하였다. 예측하건데 1993년까지는 30萬정보의 간석지와 20만정보의 새땅을 찾을것 같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조선에서는 일부 도시공업用地 및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적지 않은 밭을 점하였다. 그러나 새 땅을 부단히 개간함으로써 발면적이 적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946년의 180만정보에서 1984년엔 200만정보로 늘어났다.

5) 농업에 대한 기업식경영을 강조하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소위 농업에 대한 기업식경영이란 공업적 방법으로 농업도 경영하는 것인데, 이는 주로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농업경영활동을 계획화 조직화하게 하는 것이다.

다. 조선농업의 주요한 문제점

60년대 중반기 이래 조선농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놓고 말하면 조선농업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수준이 여전히 그리 높지 못하다.

現在 조선농업중 존재하는 주요한 문제는 아래와 같다.

1) 농업현대화 수준이 그리 높지 못한 것이다.

지금 조선농업의 물질 기술적토대는 과거보다 아주 많이 튼튼하여졌다. 그러나 표준 요구보다는 아직 적지 않는 차이를 두고있는 것이다. 조선의 허다한 농가일은 아직도 기계화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여 모내기, 논밭갈이, 가을걷이 등 주요한 농가일의 절반정도는 손으로 하는 것이다. 조선에서 생산하는 농기계 품종도 그리 다양하지 못하는데 조선에서 완전히 기계화를 실현하려면 2,00여종의 농기계가 수요되지만 80년대에 1,000여종밖에 생산하지 못하였다. 화학화의 차원에서 조선의 화학비료소비량은 원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여러 지방의 토양여건의 차이가 커서 화학비료질이 높지 못하고 품종이 많지 못하다. 조선의 화학비료는 주로 알곡작물에 시비하는데, 적지 않는 작물들에 화학비료를 시비하지 못하여 매우 큰 곤란을 느끼고 있다. 살충제, 제초제의 생산량도 그리 높지 못하다.

2) 농업생산이 불안정한 것이다.

막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농업노동의 생산물은 자연여건과 연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농업생산은 공업생산과 달라 그리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세계 그 어떤 나라들의 농업생산도 이 점은 면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농업생산의 불안정성은 정상적인 사정을 초과하였다. 조선농업생산의 파동은 너무도 빈번하다. 1959~1960년간, 1977~1979년간, 1986~1992년간 조선의 식량생산량은 여러번 그 전년도에의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였다.

조선농업생산이 불안정한 직접적인 원인은 객관적 사정도 있다. 예를 들면 자연기후여건이 불리하다든가, 노동력이 모자란다든가, 화학비료가 부족하다든가 등등, 그러나 농

업생산의 불안정성의 원인을 완전히 이 點에 미룰수는 없는 것이다. 朝鮮의 한 학자의 견해를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조선에서 농업경제성장속도가 근년에 정지 혹은 내려가는 것은 불리한 객관적 원인에도 있겠지만 그 주요원인은 농업경영체제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농업경영체제가 영활하지 못하여 늘 변화무쌍한 自然여건에 適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농산품생산이 수요를 너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現在 조선농업생산의 성장속도는 너무도 수요의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을 보면 첫째, 근년에 공업과 기타 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농산품의 수요량이 많아진 것이다. 예를 들면 목축업이 발전함에 따라 사료에 대한 수요량이 많아졌다. 지금 조선에서는 돼지, 닭같은 목축업을 발전시키려 하더라도 사료가 없어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외에서 수입하자니 외화가 문제로 되고 있다. 둘째는 도시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주민들의 화폐수입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그들이 농산품, 특히 축산품에 대한 수요량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해방후 조선의 도시인구는 전국인구의 20%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60%를 차지한다. 동시에 도시주민들의 화폐수입도 몇배 늘어났다. 근년에 농업노동보수의 성장속도는 계속 농업노동생산물의 성장속도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간의 모순을 초래하여 시장에 대한 압력을 증가한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데 의하면 현재 조선 주민들의 식량공급은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육류는 일년내내 거의 구경할 수 없는 것이다. 식용유 공급도 아주 긴박한 실정이다.

조선농업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첫째, 국민경제의 기타 부문의 발전에 커다란 제약 역할을 하였다. 조선에서는 농업부문에 대량적인 기본건설투자를 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기타 부문의 투자를 감소시키며 이 부분들의 기본건설규모를 제약한다. 농업생산의 낮은 효율은 기타 부분에 더욱 많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게 하고 농산품생산의 부족과 불안정성은 소비품생산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 둘째,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 농산품생산의 부족으로 인한 시장공급부족상태는 주민들의 소비에 직접 영향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서와 노동의욕을 크게 손상시

킨다. 농업생산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늘 조선지도자들로 하여금 인민들에게 충분한 복지 정착을 실현하지 못하게 한다.

라. 조선농업의 발전전망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現在 조선정부의 절박한 과업이다. 최근 몇년 동안 조선의 주요한 지도자들이 명세한 바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절박성 그리고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아 농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다.

김일성주석은 1992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식의주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서는 농업과 경공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지금 조선에서는 아직까지 식량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에는 농업을 더욱 크게 발전시킬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므로 이후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조선농업경제체제의 기본동태

지금 조선에서의 현존의 농업경제체제를 개혁할 그 어떤 현상도 보이지 않으며 반대로 더욱 강화하고 있다. 1991년 11월 조선농업과학원의 한 인사가 이야기하기를 “중국과 소련식개혁은 북조선과 상관없다”고 하였다. 1991년 10월 조선의 한 관원이 도문강지구개발 문제를 언급할때 말하기를 “조선에서 외자도입을 하는것은 우리나라 계획체제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일성은 1992년 신년사에서 농업문제를 언급할때 “계속 주체농법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금후 농업생산에 대한 전망

가) 조선의 농업생산은 잠재력이 있고 발전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농업은 몇십년의 발전을 거쳐 물질기술적 토대가 초보적인 규모를 갖추었다. 기계화만 좀더 높은 수준에 이르면 노동력이 부족하다든가 등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농업화학화의 차원에서조차 농업용 화학비료, 식물보호용 약제들만 많이 생산한다면 농산품의 증산잠재력은 아주 큰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에는 비교적 강대한 농업과학기술역량을 가지고 있다. 농작물과 가축들의 우량(優良)품종의 발견, 각종 선진기술 등 이러한 것들은 모두 농업의 발전에 크나큰 촉진역량을 할 것이다.

나) 농업생산의 낮은 효율과 불안정성의 현상은 짧은 기간내에 개선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

농업의 발전은 반드시 정책에 의거하여야 한다. 정확한 정책이야말로 사람들의 적극성을 발휘시킬 수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 장기적으로 형성된 집단경영체제는 아주 고치기 어려울 것 같으며 짧은 기간내에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것이다. 이는 조선농업생산의 낮은 효율과 불안정성을 나타낸 근본원인이라고 필자도 여긴다.

〈토 론〉

제1토론자 : 김 영 철(전국대학교 교수)

- 근래 북한농업의 정체는 식량부족으로 연결되어 경제발전의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 북한농업의 정체가 농업기계화의 부족으로 농업생산성이 낮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농업부문에 私利益이 없는데서 기인한 농업의 정체는 아닌가?
- 농업기자재의 부족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상품의 과부족시 가격기능에 의해 조정되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생산자재 공급면에서도 원활한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것이 농업정체의 원인은 아닌가?
- 1946년 토지개혁 실시 3년후 농업총생산액이 51% 증가했는데 신기술수용의 어려움, 주요 농용자재 보급의 어려움 등으로 이러한 급속한 농업생산의 증가는 힘든데 이와 같은 급속한 증가가 일어난 중요한 이유는?
- 쌀에대한 2중곡가제 실시에서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차이가 약 7배인데 이는 도농간 소득격차가 크기때문이 아닌가?
- 콩의 경우 수매 56전, 판매 70전으로 이는 콩의 부족으로 콩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 남북경협을 전제로 할때 농업이 할 수 있는 남북경협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 변〉

- 농업생산성 저하의 문제는 사회체제의 문제점, 농업기계화와 화학화의 미발전, 물질적·기술적 기반의 약화를 들 수 있다.
- 상품생산은 가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국가의 계획에 의해 생산됨.
- 북한의 발표자료이므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비슷하리라 본다. 그당시 농민들의 생산의욕은 매우 높았는데 이는 토지가 없던 농민이 자기토지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며

또한 국가에서 농업에 많은 지원을 하였고 풍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됨.

- 2중곡가제에 대한 재원은 국가에서 부담하며 도시민들의 생활수준이 농민보다 빠른 속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념상 다같은 수준이어야 함으로 실시하며, 콩의 경우 양식생산 우선정책으로 옥수수의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콩의 생산량이나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한 의도이며 84년 천만톤 쌀생산에 옥수수가 포함되어 있다.

제2토론자 : 임 양 택(한양대학교 교수)

-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가 존속되는 전제하에서
 - 농업기계를 수입함에 있어서 남한의 농업용기계를 수입할 의사는? 또한 자금이 문제가 있다면 남한의 부족한 부존자원인 망간, 마그네슘, 철광석등과 교환할 가능성은?
 - 북한이 두만강경제특구나 국제기구를 통한 외자도입이 가능하다면 농업과 경공업 중 투자우선순위는?
 - 비무장지대의 비옥하고 광대한 유휴지에 목축업을 발전시켜 비료문제와 육류공급 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견은?
-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가 변화한다는 전제하에

<답 변>

- 남북간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북한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 모든것을 농업에 투자할 수는 없으며 국방이나 공업부문에 투자할 것이며, 김일성이 북한농업의 낙후성을 알고 있으므로 일정부분 농업에 투자할 것이다.
- 경제개혁이나 정치개혁은 현체제하에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예로부터 자립경제의 토대위에서 대외경제를 발전시키려 했다.

4. 북한의 식량사정과 소비행태

발표 : Dr. Trigubenko, Marina Evgenievna
(러시아과학원 아시아연구센터 주임)
번역 : 김 지 용

가. 사회구조 농지소유권과 경영

농업은 북한 GNP의 25%이며 북한인구의 40%가 종사하는 북한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1958년 이래 북한의 농업은 소유권이 완전히 협동농장으로 되었다. 3,700개의 협동농장이 있는데 1개 농장에 평균 500ha의 경작지와 300호의 농가가 있다. 국영농장은 경작지의 5%이며, 생산량도 거의 같은 수준이다. 1964년 정부에 의해 경영단위당 하나의 합병을 만들려는 노력에 거대한 기업적국영농업으로 집단농장을 합병하였으나 농업생산을 증가시키지 못했으며 무익한 일이 되었다. 모든 협동·국영농장과 새롭게 형성된 농기업적 합병농장은 각지역의 local bodies of administration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여기서 행정구역은 농업위원회로 바뀌었다. 최고기관은 농업위원회로 북한에서 관리위원회로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물론 협동농장을 형식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가지며 자재는 북한의 구조에 따르는 데 사실상 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

농업기계, 비료, 관개와 운송의 수단, 분배, 생산계획과 국가 구입단체를 통한 계획된 專有는 중앙집권적인 방법으로 실행된다.

현재 협동농장원은 생활원리에 따라 호당 240원의 금전상의 보수를 받는다. 생산물 배분후에 각호당 260kg의 곡물과 배추, 무와 약간의 물고기를 받는다. 연금수혜자는 월당 30~50원의 연금을 받는다.

1977년 북한은 농가호당 20~30명의 텃밭을 가지고 있다. 농가는 1년에 닭고기나 토끼고기의 형태로 100kg을 정부에 바치며 물론 사료는 분배되지 않는다.

나. 노동자원과 물질적·기술적 토대

1953년부터 1987년까지 농촌인구는 1백만명이하의 증가를 보인 반면 도시인구는 10백만 명이상으로 팽창하였다. 1953년 82.3%를 차지했던 농촌거주자는 1987년 40%로 급속히 하락했다. 1987년 도시인구는 11.5백만명이고 농촌인구는 7백8십만명이었다. 북한의 인구증가는 1992년 21백만명으로 되었으며 8.4백만명이 농촌거주자 였다. 1987년 리콜라스 에베스타드의 보고에 의하면 1987년 농업고용수는 3,167,000명으로 남자 1,312,000명, 여자 1,855,000명이었으며 북한경제 전체의 총고용인구는 12,141,000명이다.

산업화 기간동안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농업기계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아무리 긴시간동안의 수작업 일지라도 높은 생산력의 산출은 힘들다. 이와함께 농부들은 개인적 이윤은 적었으며 생산물을 처분할 수 없다. 경지면적이 적은(1인당 0.12정보) 농민들이 협동농장을 만든후 농업생산에 있어서 이의 강화는 더욱 강조되었다.

1960~70년 사이에 국가예산의 40%가 농업의 물질적·기술적인 기반의 구성을 위해 지출되었으며, 관개계획이 최우선이였다. 80년대 중반 논의 관개면적은 650,000정보였으며, 스프링쿨러에 의해 총 950,000정보의 건조한 골짜기에 관개가 시작되었다.

경작가능면적의 부족은 북한이 막대한 자금을 황해까지의 배수에 투자하게 하였다. 300,000정보의 간석지와 200,000만정보의 계단식 밭을 만들었다. 1990년까지 불모지를 개간하는 전국적인 운동이 벌어진 이후 8km의 긴뿔과 남포근처의 저수지가 황해안을 따라 관개를 하기위해 세워졌다.

1990년초 경작가능면적중 1,400,000정보가 관개되었으며 1,700개의 저수지가 가동되었다. 관개수로의 총길이는 40,000km이며, 기양, 평안, 오지등이 큰 관개시설이다.

간석지와 새땅찾기는 북한의 경지가능 면적을 25% 증가시켰다. 이와 같은 성과는 산업화 기간동안 농업의 기계화를 가능케하여 식물생산에있어 중요한 경지의 60%가 농업기계화에 의해 경작되고 있으며 산간지대의 700,000정보 이상의 혹은 경작지의 35%만이 기계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100정보당 15마력 트랙터 6~7대가 경작에 사용되고 있다. 물론

적어도 50%는 수작업이 차지한다.

국영화학산업의 성취는 농업에 있어 충분한 양의 광물질비료의 공급을 보장했다. 화학비료의 1년간 생산은 3,700,000~3,800,000톤이다. 경작지 1정보당 요소 1,500kg을 투입한다. 인산과 칼륨은 부족되어 수입하고 있다. 제초제는 논외 방제에 97%가 사용된다. 북한의 농업은 전기에너지가 심각하게 부족하여 관개시스템의 작용에 역효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전력생산 능력은 300~320만kw로 농업은 보다 중요목적에 의해 공급받고 있다.

다. 농업부문의 대략적인 특성

북한의 자연조건과 기후조건은 관개농의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선결하게 하였다. 총농업생산의 75%가 농산물이며, 가축사육과 산업곡물의 재배가 20%이며 원예 5%가 차지한다. 북한의 산악지형 때문에 전영토의 단지 1.6%, 혹은 2백만ha만이 경작되고 있다.

쌀은 주요한 농작물로 전체 경작가능지의 20%에 재배되고 있다. 대체로 같은 면적이 옥수수재배에 이용되고 있다. 쌀과 옥수수는 전체 곡물의 80%를 차지하며 물론 고량, 밀, 보리, 귀리, 수수류, 호밀 등이 재배된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정보당 산출량이 평균 쌀 700kg, 옥수수 600kg이라고 하는데 러시아 전문가가 추정하기엔 평균 400~500kg이다.

총곡물수확량은 식민지때와 비교하여 2.2백만톤에서 2.8백만톤으로 증가했다. 북한은 1년에 15백만톤의 곡물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1991년 북한은 5백만톤의 곡물을 수확했다. 정부의 자료(10백만톤)는 러시아전문가(5~7백만톤)의 분석과 매우 큰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통계연감은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8~9백만톤이라고 밝히고 있다.

콩은 경작지의 12%를 차지하며 연간 40만톤을 생산하며 총농업생산의 현저한 특징이다. 채소, 배추, 무, 양파, 오이와 토마토는 경작가능지의 7.1%에 경작된다.

식량작물의 경작지 부족때문에 산업작물의 재배는 제한되어 있다. 그들은 식량작물의 열사이와 논두렁이나 산의 경사면 계단식 밭에서 재배된다. 경제작물로는 담배, 대마, 호프, 뽕이 경작된다. 연간 생산량은 누에고치 450,000톤, 담배 45,000톤, 대마 3,000톤, 면화 3,000톤이다.

농산물 생산량

품 목	단 위	1960*	1970*	1980*	1985*	1990*	1991**
쌀	m. ton	1.5	2.4	4.8	4.1	5.0	5.2
옥수수	m. ton	0.95	1.45	2.2	2.1		
호밀	thou. ton	7	40	50			
보리	〃	230	300	380			
귀리	〃	47	100	130			
고량	〃	300	430	440			
수수	〃	50	115	130			
콩	〃	215	255	340			
고구마	〃	201	272	375	370		

자료 : *) Statisticcal Year Book for Asia and Pacific, 1981. p. 409.

**) 북한 중앙통계국의 통계자료

한국은 과수원예로 유명하다 즉, 맛있는 사과, 배, 복숭아, 살구, 서양오얏이 생산된다. 사과는 수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사과생산은 과일리에서 생산하며 소련으로 수출하고 있다. 과수원에는 30만정보의 경작지와 연간 40만~50만톤의 과일을 생산한다.

전통적으로 재배되는 인삼은 개성근처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35,000ha의 경작지에서 연간 1~2톤의 생삼을 생산한다. 이것은 약재, 인삼즙, 크림을 만드는데 사용되며 모두 경화를 벌기위해 세계 각국으로 수출된다.

목초지와 식량곡물과 경작지의 부족으로 사료용 곡물의 생산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소사육은 부차적이다. 그러므로 브로일러 농장은 중요한 부분이다. 젖소는 전체 가축수의 10% 미만이며 역우가 대부분이다. 소두수는 95만두, 돼지 2백만두, 양 3,000,000두, 염소 25만두, 가금 2천만수이다.

북한은 육류와 육제품이 매우 부족하다. 연간 육류생산은 18만~20만톤이며 돼지고기 50%, 쇠고기 20%, 가금류 20%이며 특수한 육류로 개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동물성지방과 육제품의 생산은 보잘것 없다.

나타난 바와 같이 농업생산력은 협동농장 후에 증가하였다가 1980년대에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북한경제의 침체는 농업발전에 불리한 효과를 주고 있다. 89~91년 3년동안 주요 경제지표는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축산물 생산량

품목	단위	1960*	1970*	1980*	1985*	1990*	1991**
육류	thou. ton	75	170		181	195	200
우유	thou. ton	10.6	16	57	51	50	50
계란	m. ton	113	700	2,500			

심각한 식량문제는 1986년 부서의 곡물과 밀가루 수입의 증가로 알 수 있다. 1~2백만톤의 식료품이 경화로 구입되었다. 쌀과 밀을 소련과 바꾸는 관행은 중단되었다.

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변동 추이

	1989	1990	1991
국민총생산액	-5.3	0	-3
산업총생산액	-10.6	0.5	-5
농업총생산액	+1	-1.1	+2

1980년의 연평균 1인당 식료품 생산량은 식량의 부족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곡물 350~370kg 중 쌀생산 200kg, 감자와 고구마 18~20kg이며, 채소 170~180kg, 사과 20kg, 육류 9kg 과 우유 2.5리터이다.

라. 생산물의 소비와 분배

북한주민을 위한 산업소비재와 식료품공급은 유통파트(Ministry of trade)와 식량파트(Main Department of Grain)으로 구성된 인민봉사위원회(Committee for People's Serving)에 의해 중앙집권적 방법으로 운영된다. 식량파트는 오로지 각지방의 중앙적 분배에만 관계한다. 다른 소비재와 식료품의 도매무역은 유통파트가 관장하고 있다. 즉 유통파트의 주요목적은 자금계획과 각지방에 같은 상품의 공급으로 요약된다. 식량파트와 무역파트의 중앙부서는 지방의 곡물부 도매유통파트를 경유하는 시스템을 관리한다. 즉, 지방수준의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가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

주민에대한 곡물의 직접적인 분배와 도매무역은 지방인민위원회(Provincial People's

Committee)에 의해 관리되며 지방행정위원회(Local bodies of administration)의 감독하에 있다. 물론 생산분배의 형태는 다음에 의한다. 각지방의 생산물—유통파트나 식량파트의 도매시스템에 의해 판매—각 지방배당량의 분배—지방인민위원회에서 상품의 분배—주민에게 상품의 소매.

중앙집권적인 비울책정의 체계는 단지 쌀과 다른 곡류의 결과에 따라 유지된다. 곡류의 비율은 노동형태의 성격에 따라 1일 1인당 700 g -1kg이다. 예를 들어 광산 노동자나 쇠를 다루는 노동자는 높은 곡류배당율을 보인다. 곡류에 첨가하여 한가구당 90kg~100kg의 김치와 200kg~250kg의 대구류의 물고기를 받는다. 매년 정부는 1kg 당 8원의 소매가격으로 부터 발생하는 부족액을 메꿀수 있는 보상금을 할당하는데 매입가격은 64원이다.

최근에 자치권은 주었지만 지방행정위원회는 지역상점과 분배소의 연결망을 통해 각각의 행정구역의 그들이 비축해온 재고품을 독립적으로 분배한다. 일종의 생산물, 예를 들어 고추와 약간의 다른 야채, 과일은 수확기간중 지역상점과 분배소의 관리에 의해 직접 분배된다. 각 지방은 중앙통제적인 방법하에 사과와 배를 공급하고 있다. 유통파트는 각지방에 동물성지방과 해산물의 균형적 분배를 통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찍 생산된 야채의 계획적인 배달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루어진다. 도매가격이 계절에 따라 오르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소매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모든 수송과 저장경비는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다.

생산물의 공급에 있어서 유통파트와 식량파트는 되도록이면 동일한 생활수준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그들의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거주민의 수에 상응하는 생산물을 항상 같은 양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평양과 소수의 중앙에 위치한 지방은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반면에 해안지역은 조업기간중 물고기의 분배에 있어 유리하다. 남쪽지방의 주민들은 과일과 채소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유리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북한은 소비자가 생산물을 살 수 있는 곳에 Trademark shops 체인을 개설했는데, 예를 들면 신선한 해산물은 유통파트의 중앙도매점이나 해당지방위원회의 도매상점으로부터의 분배센터나 해산물인도상점보다 수산회사로부터 직접 인도받는다. 이경우 유통파트는 약간의 양도물만 취한다. 북한의 모든 무역량 가

운데 농민시장 거래의 몫은 유통파트에서 개의치 않아 매우 보잘것없다. 그들은 10일에 한번씩 모이며, 큰도시는 상설시장이다.

텃밭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거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닭, 계란, 물고기, 후추, 각종 조미료, 빗자루, 가마니 등이다. 이 상품들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도하기에는 어렵다.

평양의 외국인 전용상점과 경화상점은 유통파트 보다 평양인민위원회(Pyongyang People's Committee)에 소속된 유통파트(Main Department of Trade)가 관리한다. 이곳은 식료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생산품을 제공한다. 경화를 위한 수입품의 이용은 불법적인 암시장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식료품과 소비재, 북한의 공급구조상 공급불가능한 것들이 높은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식량문제는 연간 약 2%의 인구성장율과 비교하여 곡물생산량이 훨씬 낮아져 있다. 식량의 부족은 북한의 정책이 인구통계학적 정책으로 바꾸게끔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단은 어린이의 육성은 미래에 “군인은 혁명이다”라는 것처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원조하던 반면에 출산율을 조정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방법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젊은이들 사이에 두자녀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데서 찾을 수 있다.

마. 농업의 개발계획과 투시도

북한농업의 분석은 북한농업이 난관에 처해있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지도부는 사영에 의한 토지의 판매와 사영에 의한 기업가정신의 시작을 통한 시장경제요소의 발전과 경제의 재편보다 북한경제의 광범위한 발전속에서 북한경제의 미래를 본다.

1981년부터 시작된 자연개조사업은 만병통치약으로 취급된다. 자연개조사업은 30만ha의 간석지 개발과 20만ha의 새땅, 남포뎀건설, 대천의 수력발전소 건설에 첫번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간석지는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도와 서쪽해안지대에 조성되었다. 광대한 경작가능지는 황해남도에 있다. 간석지는 18,000~50,000km²의 분할지로 조성되었다. 전체 길이가 1,000km이며, 넓이가 최소 10m~30m인 댐과 갑문은 간석지 개발을 위해서 세워졌다.

간석지의 개발은 주로 쌀의 경작에 이용될 것이다. 이계획의 성공적 이행은 쌀경작가능지의 40%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주로 칩식적이고 불모지인 협곡과 언덕인 새땅의 개발은 모든 지방에서 실질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이땅은 주로 담배와 유채작물의 경작에 사용된다.

남포에 세워진 길이 7,846m, 높이 30m의 댐은 2,700,000cu. m의 물을 관리하기 위한 저수지로 만들어졌다. 대천의 66만kw의 수력발전소는 뒤에 2백만kw 생산이 기대되었으며 정천과 태룡은 580만cu. m의 저수량을 가진 태룡저수지로 부터 서로 흐르게끔 계획되었다. 이저수지는 압록강으로 물을 공급받을 것이며, 신의주 가까이에 댐을세워 저수능력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뒤에 여러 측면의 수로와 터널이 저수지와 강을 연결하기위해 파여질 것이다. 북한에서 저수용량은 전체 2천만cu. m 인데 자연개조사업의 수행은 저수총량을 42.5% 증가시킬 것이다.

농토확장과 더불어 이 계획의 수행은 북한이 영토를 바꿀 것으로 예상되며 봄이 빨리오는 것과 같이 기후를 보다 유용하게 만들며 연간 15백만톤의 곡물생산에 필요한 상황을 창조한다.

이 계획의 2번째 목적은 수로망과 갑문망의 개발로 북한에서 강물의 수용력을 증가시키고 서부와 동부해변을 물로 연결시키는데 착상되었다. 남포갑문은 남포항이 현재 3만톤과 비교하여 5만톤, 송임항 2만톤, 평양 1만톤의 접안능력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 계획들은 대동강과 동부해안의 강을 수로에의해 연결시켜 결과적으로 남포항과 홍남을 연결시켰다. 다른물길은 황해의 해주항과 동해를 연결시킬 것이다. 이 건축에 사용된 인력은 주로 다음세가지인데 ① 남포갑문을 건설한 종업원 ② 산업노동자와 고용인 ③ 이곳에 큰 희망을 건 학생들이다. 총 10만명이 건설계획에 종사하였다. 건설은 특수건설팀에의해 실행되었으며 자연개조국에 소속되었다. 우리의 분석에 의하면 자연개조사업의 수행은 총 1,000만톤의 시멘트가 필요한데, 연간 140만톤 혹은 북한의 연간 시멘트생산량

의 20%이다. 이계획은 또한 4~5십억원의 투자 혹은 연간 6억원이 요구되며, 이는 북한전체 수입금의 10%이다. 이 개간지는 경작지보다 40~50% 낮은 추수율로 수확될 것이다. 우리의 분석에는 북한을 다만 연간 10백만톤의 곡물생산이 가능할 것인데 이는 필요한 쌀의 계산에 반이다. 결과적으로 자연개조계획은 우선 필요한 연간 1,500만톤의 곡물생산을 어렵게 공급할 것이다. 연간 2%의 인구증가율을 계산하면 북한은 연간 1인당 500kg의 곡물이 필요하다. 이것은 식량문제의 해결이 향상되도록 한 것보다 드라마틱하게도 낮다.

〈토 론〉

제1토론자 : 김 병 주(서강대학교 교수)

-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500~700만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치의 근거는?
- 북한지역에서 도시화가 빨리 이루어졌는데 그원인은 행정구역 지정시에 주거인구 기준으로 도시로 된 지역이 있는 것은 아닌가?
- 농촌지역의 연령분포와 성별분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북한의 텃밭에서 생산되는 품목과 생산물은 전부 자가소비되는가 그렇지 않고 농민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율은 얼마인가? 또 농민시장은 무엇인가?
- 농민들이 연간 국가에 바치는 100kg의 육류의 사료 구입문제는?
- 북한정부가 연간 가구당 현금 240원씩 지불한다는데 이의 사용처는 어디인가?
- 북한의 화폐개혁시 교환액이 1인당 399원 이었는데 4인가족기준 약 1,600원으로 이는 가구당 240원씩 지불한다면 약 6개월분으로 문제가 없을텐데 이 399원이 가구당인지 개인별인지?

제2토론자 : 유 병 서(성균관대학교)

- 쌀의 생산량이 700kg/정보 이면 굉장히 적은 양으로 이를 단보당 조곡으로 환산하면 가능하다. 자료의 추출방법을 설명해달라.
- 1958년 이후 북한의 농업이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으로 기업적 농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효과가 없었으며 자연개조사업등 농업생산성을 높이려고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원인인 것 같은데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발전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답 변〉

- 곡식생산량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추정치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농업분야는 열악하며 특히 농촌은 더 그렇다.

-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650~670만톤 정도밖에 될 수 없으며, 북한의 정부와 전문가들이 외국에 전하는 것은 과장되어 있으며 북한의 경제정보는 외부에 폐쇄되어 있어 실상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 북한의 협동농장은 농공단지화 되어있으며, 집단농장보다는 사유농업에서 더 많은 생산을 나타내고 있다.
- 자유시장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있어 농업분야에 대한 개혁은 불가능하며 자유시장이 계획시장에서 개방시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北韓의 農產物 貿易 現況과 展望

발표 : Mr. Murooka, Tetsuo
 (일본 무역진흥회 해외조사부 중
 국 아시아팀 연구원)
 번역 : 김정호, 김종수

머 리 말

본고에 주어진 과제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지금까지 北韓(北朝鮮)의 對外經濟 政策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속에서 貿易量이나 構造가 어떻게 變化하여 왔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北韓의 農林水產物 貿易이 어떠한 變化를 거쳐왔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하에서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서술한 다음, 對外經濟 政策과 貿易, 그 다음으로 農林水產物 貿易의 向後 展望에 대해서 서술하기로 한다.

가. 北韓의 對外經濟政策 變化와 貿易 動向

1991년, 蘇聯은 北韓과의 무역을 長期協定과 精算制度에 근거하는 방식으로부터 交換可能通貨·國際價格에 근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것은 소련경제의 악화, 나아가서 聯邦의 崩壞와 맞물려서 北韓의 對貿易과 國內經濟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초래하였다. 그것은 그 직전, 즉 1980년대 후반에, 北韓 經濟가 소련으로부터의 의존(解放後 혹은 「祖國解放戰爭」의 시대를 제외하고)을 전례없이 높여왔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1980년대 후반은 蘇聯邦 崩壞 後에 있어서 北韓의 對外關係를 이끌어내갈지도 모르는 몇가지 새로운 움직임이 발견된 시대이기도 하였다. 그것들은 資本主義諸國과의 經濟關係 容認(重視라고는 하지않더라도), 對外經濟關係發展의 수단으로서 外國과의 合營·合作 開始, 또는 輕工業의 潛在性에 대한 着眼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현시점에서의 북한의 대외무역이 처해있는 문제와 장래의 가능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먼저 1980년대의 對外貿易 動向과 對外經濟 政策에 대하여 돌이켜 보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1) 1980年代 後半의 對外經濟 重視政策

1984년의 북한은 1980년대 전반에 소위 「10大 展望目標」의 達成과 비생산적인 「記念碑的 創造物」 建築에 대하여 자원 노동력의 동시동원을 행한결과, 그해에 완료해야 할 「第2次 7個年計劃」의 수행이 정체되고, 차기계획을 책정할 수 없는 사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것은 金正日비서 자신이 그해(1984년) 2월의 본인 생일에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의 責任幹部에게 행한 연설 「人民生活을 보다 向上시키기 위하여」 중에서 「人民에게 빈 食器를 내주고 社會主義 制度가 훌륭하다고 敎育하는 것으로는 그들은 社會主義 制度의 正當한 優位性을 깊이 認識할 수가 없다」¹⁾고 危機感을 나타낼 수 밖에 없을 정도였다.

1984년 1월의 제7기 제3차 最高人民會議에서 채택된 「南南協力和 對外經濟事業을 強化하고 貿易을 한층 發展시키기 위하여」라고 하는 결정(이하「南南協力決定」)은 향후 5~6년 이내에 社會主義 諸國과의 貿易額을 현재의 10배로 한다고 하는 야심적인 목표를 세워²⁾, 사회주의 제국과의 경제관계를 가장 중시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제국이 「平等과 和解,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입각한 階級的 兄弟」³⁾ 라고 하는 명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해(1985년) 2월과 4월의 『勞動新聞』의 論說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社會主義 諸國과의 經濟交流 擴大가 있으므로서 비로소 北韓의 經濟計劃 策定과 遂行이 保障될 것이기 때문이었다⁴⁾. 그리고 1984년 5~6월의 金日成 주석에 의한 蘇聯 및 東歐社會主義 諸國巡訪⁵⁾, 익년의 소련과의 무역·경제협력발전에 관한 협정서(1986~1990년)체결⁶⁾, 나아가

-
- 1) 金正日 「인민생활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협의회에서 행한 연설(1984년 2월16일)」 『月刊朝鮮資料』 제30권 제2호(1990년 2월), 12면.
 - 2) 『月刊朝鮮資料』 제24권 제3호(1984년 3월), 14~24면. 이 결정은 그 밖에 전문수출공장을 더욱 많이 건설하도록 하고, 또한 비철금속, 철강재, 시멘트등의 생산이 증가한 결과 북조선의 지불능력이 높아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 3) 崔貞根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대외무역」 『勤勞者』 1984년 제8호, 48면.
 - 4) 김형규 「계획적 발전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 『노동신문』 1985년 2월 12일. 이철복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대외경제 관계의 확대발전」 『노동신문』 1985년 4월 7일.
 - 5) 예를 들면 崔貞根, 전계서에서 47면은 김일성의 순방이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 제국과의 경제관계를 「새로운 한계를 열었다」고 칭찬하고 있다.
 - 6) 김복신 부총리겸 대외경제위 위원장, 최정근 무역부장, 정송남 대외경제사업부장, 안봉기 국가계획위 부위원장 등이 동행. 「강성산 총리의 방소에 관련한 조소공동공무니케(1985년 12월27일)」 『월간조선자료』 제26권 제2호(1986년 2월) 10~12면.

서 1986년 9월 中國과의 長期貿易協定(중국측의 보도로는 主要貨物 相互供與協定, 1987~1991년) 체결을 거쳐서, 다시 말하면 全計劃「完了」로부터 2년의 調整期間을 거쳐 겨우 1987년부터 第3次 7個年計劃이 개시되게 된 것이었다.

1984년은 또한 資本主義 諸國과의 經濟 關係를 容認하고 또한 그것에 기대를 걸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였다. 앞서 기술한 「南南協力決定」은 優先順位를 社會主義 諸國, 非同盟·發展途上國 보다 낮게 설정하고, 또한 「우리(북한)의 自主權을 尊重하고 우리나라와 經濟 關係를 縮結할 것을 바라는 경우」라고 하는 條件을 붙이고 있었으며, 명확하게 자본주의 제국과의 경제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언급하였다⁷⁾. 더욱이 대외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책으로서 合營 合作이 強調되기 시작하였다. 동년(1984년 9월에 제정된 「合營法」 자체가 中國의 對外開放 政策의 影響을 받은 것이라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⁸⁾, 자본주의 제국으로부터의 투자에 기대하는 것이었다. 사실 「合營法」 제정 직후에 中央人民委員會 經濟政策委員會 尹基福 부위원장은 북한이 사회주의 제국 뿐만 아니라 「日本, 美國을 비롯하여 자본주의국의 會社, … 個人을 合營의 대상으로 하며, 그들에 대하여 특별히 制限을 한다거나 差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부러 명시하였다⁹⁾.

앞서 검토한 1984년의 김정일 연설은 또한 人民生活 向上을 위해서는 輕工業의 發展이 不可缺하다고 하는 認識을 표명하고, 경공업이 外貨 獲得의 手段으로서 重要하다는 것을 認定하였다. 소련과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도 경공업 분야에서의 협력, 예를 들면 소련으로부터 기계, 재료등을 수입하여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제품으로 만들고, 다시 소련으로 수출한다고 하는 방식이 강조되었다. 이것은 소련측에서 보면, 過去의 經濟援助가

-
- 7) 1980년의 黨 第6次 大會의 金日成 報告에서도 국제관계 항목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에게 우호적으로 접근하는 자본주의 제국과도 친선 관계를 맺으며, 경제 및 문화교류에 발전을 꾀할 것입니다」라고 쓰여져 있다. 김일성 朝鮮勞動黨 第6次 大會에서 행한 中央委員會의 活動報告 전제서, 55면.
 - 8) 예를 들면 河合弘子 「北朝鮮의 『開放政策』과 日朝貿易」 小此木政夫 편 「岐路에 선 北朝鮮」 일본국제문제연구소, 1987년, 180~183면.
 - 9) 尹基福 「자립적 민족경제에 기초한 자주적인 합영법」 『月刊朝鮮資料』 제24권 제12호(1984년 12월) 24면. 이것은 1984년 10월 6일 윤기복이 평양방문중의 在日朝鮮同胞訪問團과의 會見에서 발언한 내용의 요지.

北韓에 重工業·鑛業을 중심으로한 內向의 産業構造를 만든 결과, 輸出能力 내지는 債務辨濟 能力의 確立이 追求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한 反省에 근거한 것이며, 북한을 자국에 부족한 消費財 供給基地로 位置시키려는 것이었다¹⁰⁾.

한편, 資本主義 諸國과의 關係에서도 이를테면 合營법이 제정된 다음해에 朝鮮을 방문한 日本의 經濟交流團에 대하여 북한측은 水産業 등과 아울러 輕工業의 合營·合作事業을 다수 提案했던 것이다. 그러나 社會主義 諸國과의 經濟關係 緊密化라는 最優先 目標가 充足되면서 자본주의 제국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었다. 그것은 일본 등 서방 제국과 경제합작을 진행시키게 되면 반드시 겪지 않으면 안되는 貿易債務 問題(1970년대 중반에 발생)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日本 등 西方 民間企業이 아예 북한과의 합영 합작에 참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1986년 2월에 김일성 주석 자신이 在日本朝鮮人 總聯合會(총련) 傘下의 商工人에게 合營事業을 더욱 積極化시키라고 명한 「2.26 敎示」를 계기로, 1988년에 이르기까지 재일 상공인과의 사이에 100건 남짓한 합영계약이 체결되게 된다. 이에 따라서 小規模이지만 合營의 形態로 日本의 技術과 機械 등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다¹¹⁾.

2) 1980年代 後半의 貿易動向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제국을 무역상대로서 가장 중시한 1984년 이래의 방침이 무역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림1은 北韓의 貿易總額, 輸出額, 輸入額, 貿易收支를 각각 나타낸 것으로, 이에 의하면 북한의 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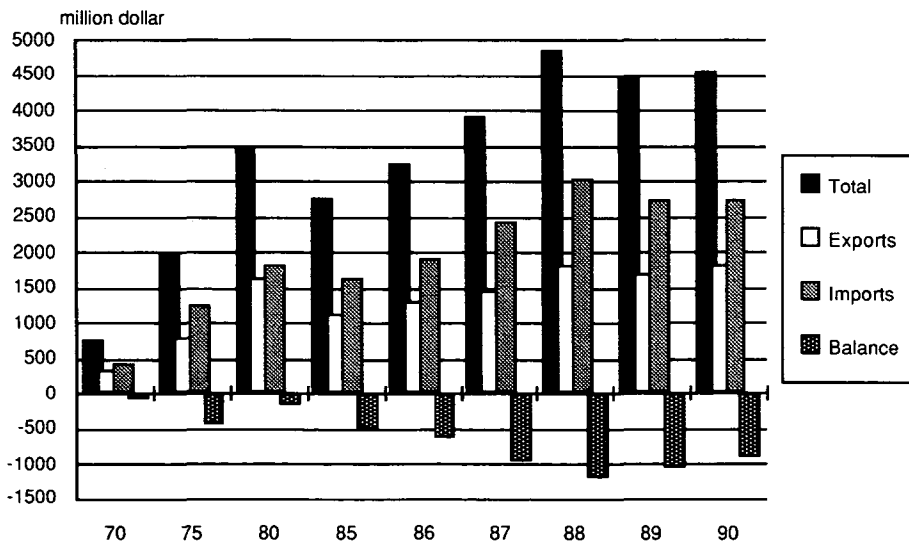
10) 1986년 12월, 朝蘇政府間에서 輕工業 分野에 대한 2000년까지의 長期協力協定이 체결되었다. 1988년 5월에 평양을 방문한 소련공산당 대표단도 경공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시대의 조소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Valentin I. Moiseyev, "USSR-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and Marina Ye. Tribunenکو, "Industry of the DPRK : Specific Features of the Industrial Policy, Sectoral Structure and Prospects," papers for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North Korean Economy(co-sponsored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Korea Economic Daily), September 3-October 2, 1991, Seoul, 참조.

11) 宮塚利雄 「북조선에 있어서 합병사업의 전개에 대하여」 『북조선의 경제와 무역의 전망-1992년판』 일본무역진흥회, 1992년 114~115면 참조.

易總額은 1980년에는 34억 7,800백만달러 (수출16억 4,600만달러, 수입 18억 3,200만달러) 정도 였으나, 1985년에는 약8할의 수준(27억 6,800만달러, 수출 11억 3,000만달러, 수입 16억 3,800만달러)으로 되었다. 특히 輸出의 減少가 顯著하여 1980년의 7할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그후 수출은 1988년에는 18억 2,870만달러로 1985년의 약1.6배로 증가하고(연평균 신장율 17.4%), 수입은 16억 3,800만달러에서 30억 2,570만달러로 약1.8배나 증가하였다(연평균 신장율 22.7%). 이와 같이 수입의 신장율이 수출의 신장율을 능가한 결과, 1985년 시점에서 5억 800만달러였던 貿易赤字는 1988년에는 2배나 되는 11억 9,700만달러로 늘어났다(여기서 그림1은 무역 상대국측의 통계를 기초로 한 추계이다. 따라서 대북한 무역통계를 공표하지 않는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후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대소련분이 달러환산하면서 過大評價되어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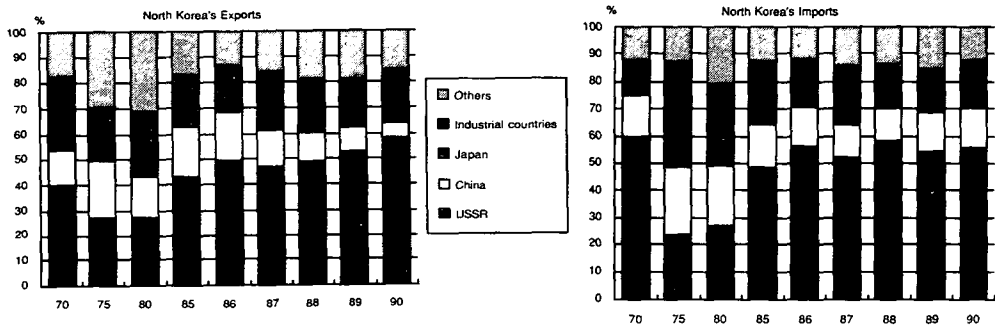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2에서 貿易相對國別 比重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全體 輸出에서 차지하는 蘇聯의 比重은 1980년의 26.6%에서 1985년에는 42.9%로, 1989년에는 52.3%로 되었다. 全體 輸入에서 차지하는 소련의 비중도 1980년의 26.6%에서 1985년에는 48.0%로, 1986년 이후는 50%이상이 되었다. 이들은 朝蘇經濟關係가 긴밀한 가운데 蘇聯이 그동안의 貿易擴大에 크게 影響을 미친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북한의 소련에 대한 貿易依存

그림 1. 北韓의 對外貿易 動向



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을 의미하고 있다. 급격한 貿易赤字擴大도 주로 蘇聯으로부터의 輸入이 增加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赤字의 放任은 소련에 의한 「隱蔽된 援助」였다. 더욱이 무역의 상대적 비중을 볼 때, 소련의 압도적인 신장율이라는 그늘에 감춰져 눈에 띄지는 않지만, 蘇聯 以外の 國家들과의 貿易도 1985년이후 1988년까지는 빠른 속도로 증가를 계속하였던 것이다(부표 Table A-1. 참조).

그림 2. 北韓의 主要輸出入 相對國別 比重



3) 對蘇經濟關係 變貌下의 對外經濟政策

1988년경부터 北韓에서는 대외경제 정책의 재차 수정이 시작되었다. 韓國에서는 노태우 정부가 발족하여 소위 「7.7 宣言」 가운데 남북간의 교역을 포함한 문호개방을 일방적으로 선언함과 함께 北方外交를 積極的으로 展開하여, 소련 동구제국과의 경제교류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관계도 구축하여 나아갔다. 또한 다음해인 1989년에 東歐 社會主義 諸國에서는 改革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1988년 9월의 공화국 창건 40주년 기념경축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은 오랜만에 對外經濟關係의 重要性에 대해서 언급하고, 黨 理論雜誌 『근로자』도 대외경제를 논하는 論文을 앞다투어 게재하게 된다¹²⁾. 특히 전년(1988년) 10월에 對外經濟委員長兼 貿易部長에 취임한

12) 그 호서는 鄭松男 「합작을 비롯한 제국과의 경제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형태」 『근로자』 1988년 11월호이다.

金達玄이 1989년 2월과 4월의 짧은 기간에 2편의 논문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었다¹³⁾. 이 두 논문을 비교하여 읽어보면 그동안의 정세 판단에 변화가 있었던 것을 느끼게 된다. 2월의 論文에서는 社會主義 市場을 가장 重視한다고 하는 종래의 방침이 반복되고 있지만, 4월의 論文에서는 蘇聯 아울러 中國의 重要性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동구 사회주의 제국이 격동하는 가운데 북한의 中國에 대한 期待感을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4월의 논문은 東南亞細亞, 中近東에서의 市場 開拓을 強調함과 함께, 종전의 「(북한에) 우호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라고 하는 전제조건 내지는 자본주의 제국과의 무역을 발전시켜서 「世界市場으로 進出」을 꾀하려고 하였다.

1990년 1월의 勞動黨 中央委員會 第6期 第17次 全員會議가 대외무역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과제에 대하여 「提起」하는 가운데, 「貿易活動의 體系를 한층 秩序整然하게 整備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對社會主義諸國 經濟關係의 變化에 對應한 體系의 再編成이 必要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¹⁴⁾. 어떤 일본의 저널리스트에 의하면 당시 食糧·水産物의 輸出을 制限하여 이를 國內로 돌리고 人民生活을 向上시킨다고 하는 것이 對外貿易과는 서로 矛盾되는 決定을 내렸다고도 한다¹⁵⁾.

1990년 11월에는 소련과의 사이에 앞에서 기술한 새로운 決濟方式을 다음해부터 도입하기 위한 협정이 조인되었다. 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먼저 취해진 것이 물론

13) 金達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보」 『근로자』 1989년 2호, 同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춰 대외무역을 보다 발전시키자」 『근로자』 1989년 제4호 60~65면.

후에 두만강 개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UNDP조사단에 대하여 金正宇 對外經濟事業部 副部長은 1988년부터 특구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을 밝히고 있다. M. Miller et. al.,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Mission Report, UNDP, 1991.

14) 青木和雄 「89년의 日朝貿易」 『북조선의 경제와 무역의 전망—89년의 회고와 90년의 전망』 일본무역진흥회, 1990년, 89, 91면은 1989년의 동구개혁 영향을 받아서 북조선이 계획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더욱이 1990년도의 사회주의 제국과 경제교류·무역거래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국가예산 편성이 대폭 지연되며 무역기관이 재편성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5) 五島隆夫 「냉전에서 탈피하는 조선반도」 齊藤志郎 外編 『신세기의 아시아』 サイマル出版會, 1991년, 199면. 青木和雄 「89년의 일조무역」 전에서, 91면에서도 「수산물, 농산물 등의 식량관계 품목은 북조선이 국내소비 우선정책을 개시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蘇聯과의 關係를 持續하려는 努力이었다. 이 새로운 협정에 따라서 새로 체결된 貿易議定書는 雙方이 義務的으로 供給해야 할 商品을 列擧하는 舊시스템의 색채가 남은 과도적인 것이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原油 등 重要物資의 供給繼續이 明記되었다¹⁶⁾. 또 하나는 앞서 기술한 김달현의 4월 논문에서 기대한 바와 같이 中國에 대한 依存이다. 1990년 11월에 延亨默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朝中經濟 協力協定」이 체결되었으나, 중국측에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中國이 北韓에 대하여 經濟 元祖를 提供하는 協定(中國政府向朝鮮政府提供經濟援助的協定)」이라고 불렀던 것이다¹⁷⁾.

나아가서는 西方側과의 關係改善이다¹⁸⁾. 韓銖吉 무역부 부부장은 『근로자』 1991년 4호에서 「國際情勢의 急變이(북한의) 對外經濟 關係에 많은 影響을 미치고 있다」고 솔직하게 현상을 총괄하였다¹⁹⁾. 그리고 김달현이 쓴 논문의 노선을 답습하여, 아시아 제국과(우호적인) 자본주의 제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외화 수입을 늘리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생각한대로 구입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제국과 경제관계 확대를 하면서, 그에 따른 國內의 影響을 最小限으로 막는 方策으로서 함경북도의 「自由經濟 貿易地帶」를 설치하는 것이 동년 연말에 정식으로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劃期性 혹은 限界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토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실제로, 蘇聯과의 貿易方式 改訂後 북한의 대외무역은 어떻게 되었을까? 실은 1992년에 들어와서부터 발표된 소련의 무역통계(1990~1991년의 2년간이 게재되어 있음)는 商業換率에 기초한 「外國通貨루블」로 되어 종래의 통계와는 전혀 정합성이 없게 되어버렸다. 따라서 이하에서 나타내는 1990~1991년의 북한 무역액 추정에서도 지금까지 기술한

16) Moiseyev, 전게서 참조

17) 중화민국공화국 외교부 외교사편집실편 『중국의외교개람 1991』 북경, 세계지식출판사, 1991년 383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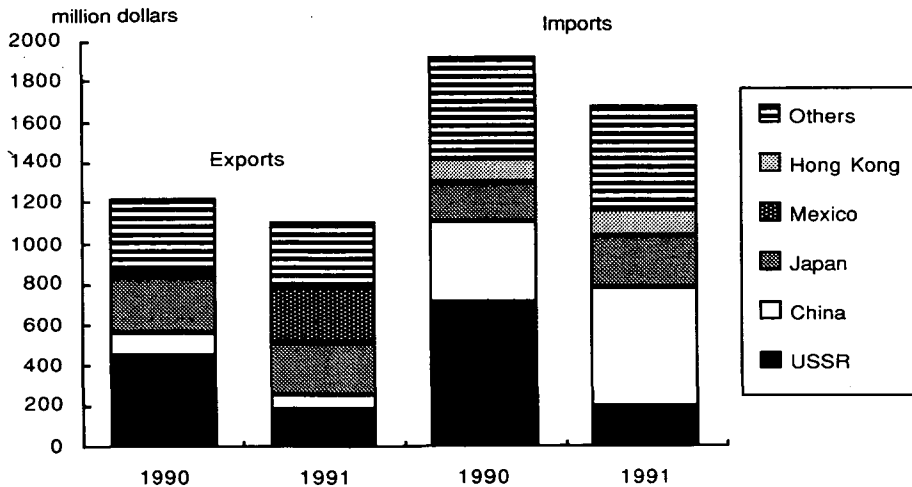
18)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0년 9월에 金丸信 訪朝團에 대하여 김일성 주석은 국교정상화 교섭의 개시를 제안하였다. 또 하나는 한국과의 경제관계 의존에서 예를들면 1989년 1월에 정주영씨를 초청했던 것이다.

19) 韓銖吉 「대외무역의 발전은 경제건설에 있어서 절실한 오늘의 요구」 『근로자』 1991년 4호. 室岡 「북조선의 대외무역」 전게서, 76~81면 참조.

추정액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1991년의 北韓의 輸出은 전년의 12억 1,770만달러에서 9.3% 감소한 11억 490만달러가 되었다. 輸入은 마찬가지로 19억 1,070만달러에서 12.6% 감소하여 16억 6,910만달러가 되었다. 가장 큰 원인은 對蘇輸出이 61.2% 減少(비중도 36.2%에서 15.5%로), 對蘇輸入이 72.4% 減少(비중은 36.7%에서 11.6%로)로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특히 최근 수년간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資本財, 部品·材料,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높여왔기 때문에 수입의 격감은 커다란 충격이었다고 이해된다. 다만 소련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수출은 7억 7,720만달러에서 20.2% 증가한 9억 3,380만달러가 되고, 수입도 12억 920만달러에서 22.0% 증가한 14억 7,540만달러로 되었으며, 대소 무역방식 격감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貿易 相對國의 多角化에 노력한 연유를 알 수 있다. 특히 수출에 있어서는 멕시코가 1,133%의 신장을 나타낸 것이 최대의 특징이었다.

그림 3. 北韓의 貿易動向(1990~91年)



4) 貿易構造의 變化

이상에서 1991년에 대소무역이 격감하기까지 1980년대에 제시된 새로운 방침 하에서 북한의 대외무역이 급속한 확대를 달성한 것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무역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北韓의 貿易 相對國 統計를 종합하여 品目別로 分析하는 것이 理想的이기는 하지만, 資料 入手上의 制約이

나 時間的 制約, 게다가 各國間的 統計分類의 統一性 缺如(특히 소련), 換算換率의 問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① 蘇聯(1980~90년), ② 中國(1982~91년), ③ OECD諸國(1980~90년) 및 홍콩·싱가폴(1980~91년)을 나누어서 보기로 한다¹⁹⁾.

먼저, 1980~90년에 걸친 對蘇貿易의 構造變化이다. 수출에서는 금속 및 광물가공품(구체적으로는 마그네시아크린카와 압연강재 등)이나 식료품과 같은 전통적 상품의 비중이 저하한 점, 그 반면에 섬유제품 및 기계류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림 4 참조). 수입에서는 석유 석유제품의 금액이 1986년 이후 감소한 점, 기계류의 금액이 매년 변동은 하였지만 증가 경향에 있는 점, 섬유재료가 증대한 점, 「기타」에 분류되는 물품이 1985년 이후 증가하고 그 시기로부터 대소련 수입이 다양화한 점 등이 특징이다. 명확하게 纖維材料의 輸入 增大와 纖維製品의 輸出 增大가 관련되어 있고, 또한 輸入되는 機械類 중에서 纖維機械의 比率이 높아진 것으로부터 朝蘇兩國間的 輕工業 分野에 대한 協力の 進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으로부터의 기계류 수출이 증가한 것도 소련의 협력에 의한 것이었다²⁰⁾.

다음은 중국이다. 北韓의 中國에 대한 輸出額이 1982년부터 1991년에 걸쳐서 4분의 1정도로 저하하는 가운데 북한의 傳統的 產品인 원료별 제품(非鐵金屬, 鐵鋼 등)의 상대적 비중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그림 5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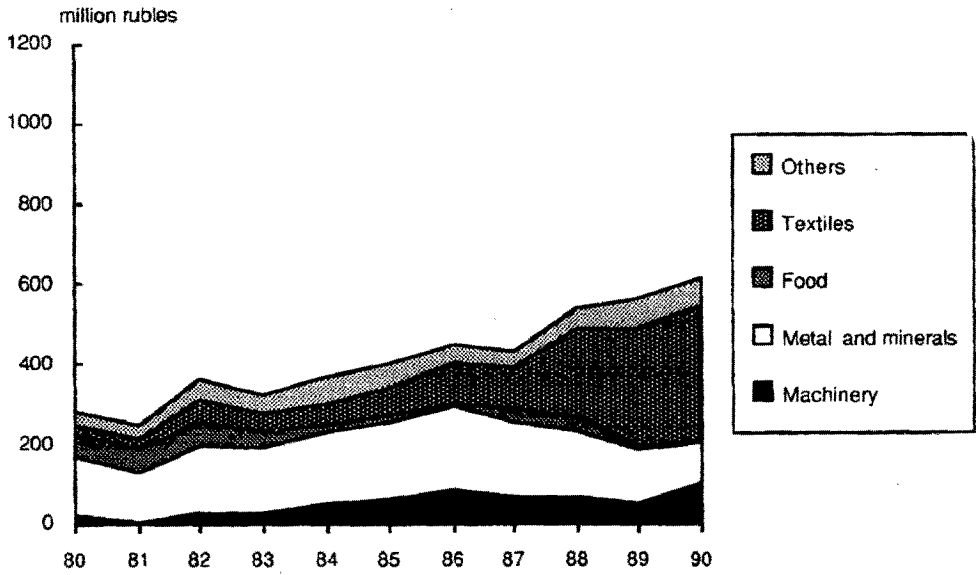
수입이 198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90년부터 91년에 걸쳐서 급격하게 팽창한 것은 소련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원조를 제공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원조협정이 체결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수입은 1982년 시점에서는 鑛物性 燃料가 전체의 87.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기계류(7.3%), 1991년에는 광물성 연료가 43.1%, 원료별 제품 12.5%, 식

19) 여기서 한국의 産業研究院 崔信林 研究員이 198089년에 있어서 55개국에 대한 대북조선 무역통계를 종합하는 방대한 작업을 하였으며, 그 중에서 소련, 중국, OECD제국, 홍콩 및 싱가포르의 통계를 종합함으로써 거의 2% 이하의 오차로 북조선의 무역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신림 『북한의 무역구조』 산업연구원, 1991년 54~55면.

20) Moiseyev, 전제서 참조

그림 4.北韓의 主要 品目別 對蘇聯貿易 動向

North Korea's exports



North Korea's im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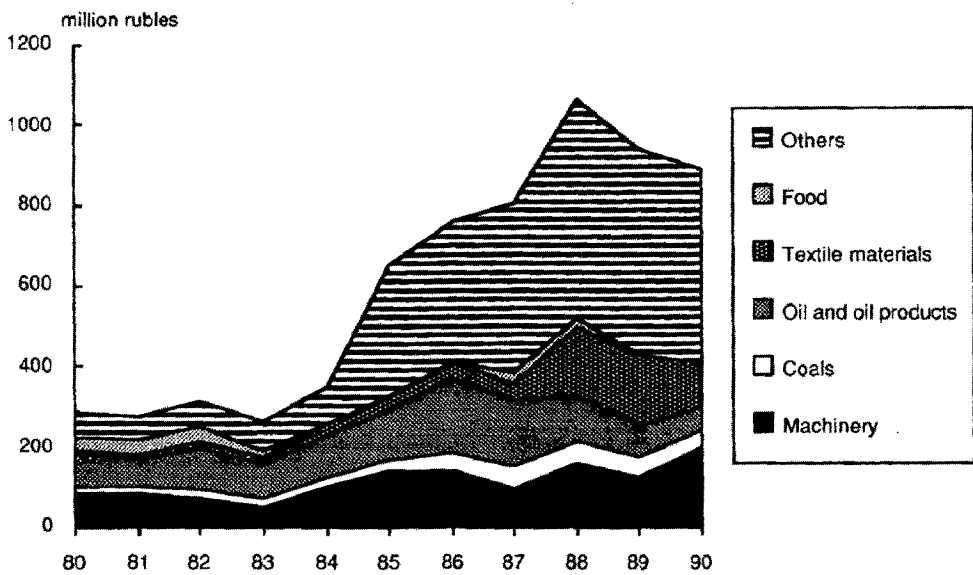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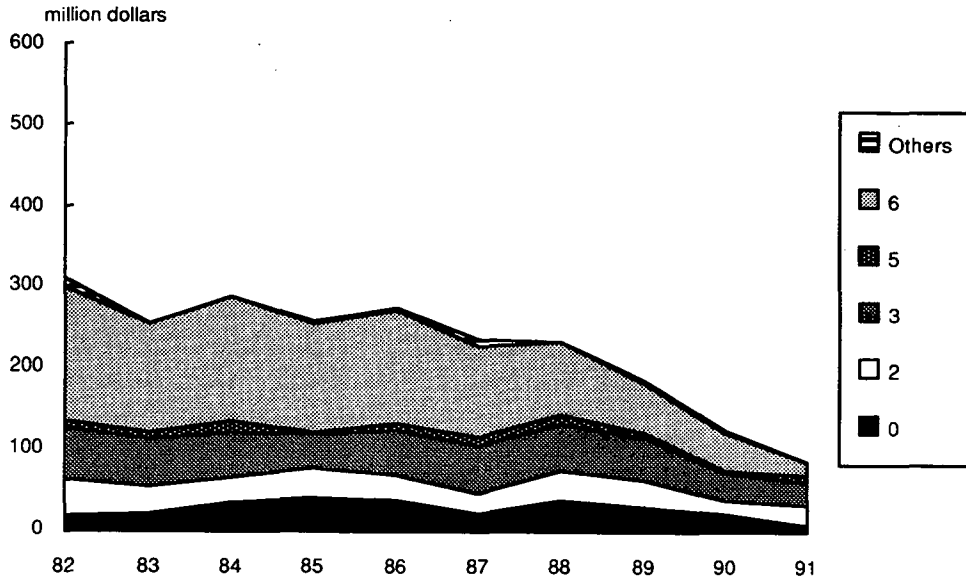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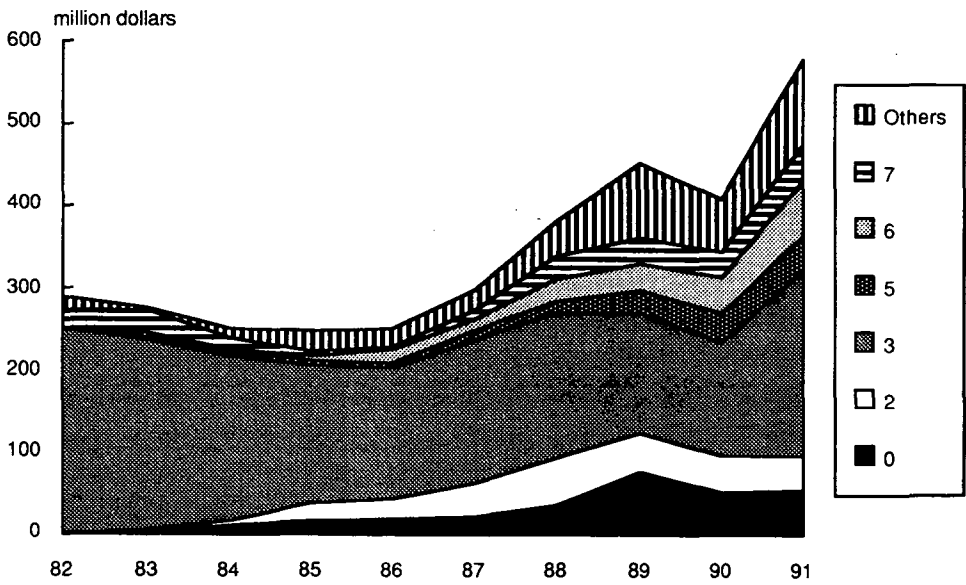


그림 5.北韓의 主要 品目別 對中國貿易 動向

North Korea's exports



North Korea's imports



료품 10.5%로 되었으며, 이 기간에 전체의 절대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약간 輸入 品目이 多樣化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OECD제국, 홍콩, 싱가포르와의 무역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북한의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중에서 원료별 제품, 비식용 원료가 점유율 및 금액면에서 모두 저하하고 있는 한편, 食料品과 雜製品=輕工業品이 主要品目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輕工業과 合營·合作의 聯關性에 대해서는 특히 일본시장에서 北朝鮮合營工場製 洋服의 신장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기계류가 33% 전후를 차지하는 구조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금액은 정체되었다(그림 6 참조).

어떻든 이 기간중 전통적 상품의 침체와 외국과의 합영·합작과 관련된 경공업품의 상승은 후자가 불충분한 것이기는 하나, 外國과의 經濟協力이야말로 經濟發展에 必要하다는 肯定的인 認識을 北韓 指導部에게 주었다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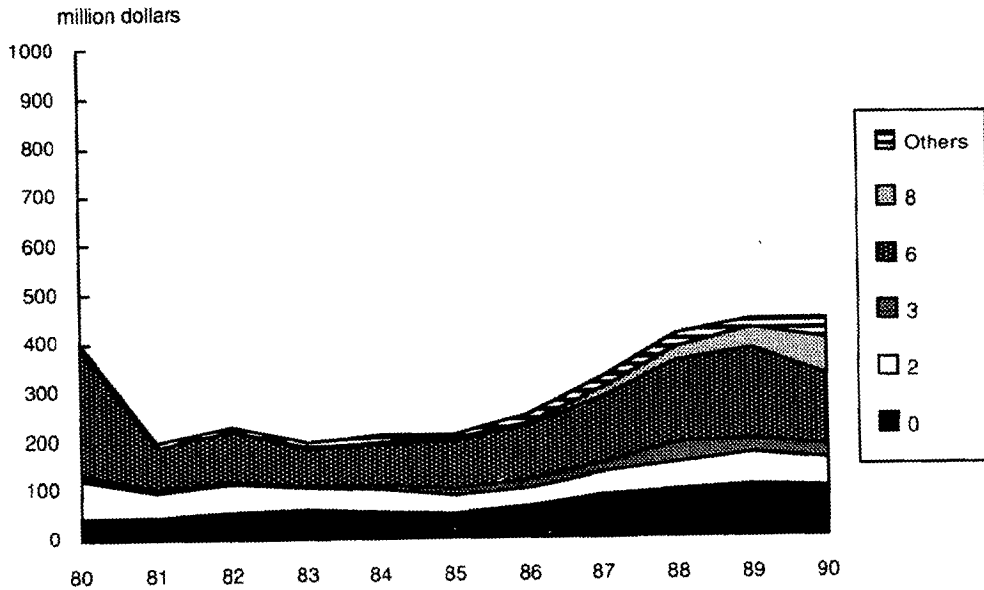
나. 北韓의 農林水產物 貿易

여기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통계의 종합에 따른 곤한 때문에 소련(금액을 제외), 중국, OECD제국, 홍콩, 싱가포르와 무역을 종합하고 농림수산물 중에서도 주요 부문인 식료품(SITCO)으로 범위를 좁혀서 1980년대부터의 동향을 보기로 한다. 또한 農林水產物 貿易을 취급한 國際統計로는 FAO Yearbook이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추정치가 게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로 한다. 단, FAO 추정치는 상대국별로는 알 수 없으며 추정의 근거도 상세하지 않다. 또한 식료품의 수출입 증감은 북한 국내의 농업·식량 사정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輸出入의 變化를 나타내는 것에 한정코자 한다. 또한 아래 그림의 원래 자료는 별표 TABLE A. 2에 게재하였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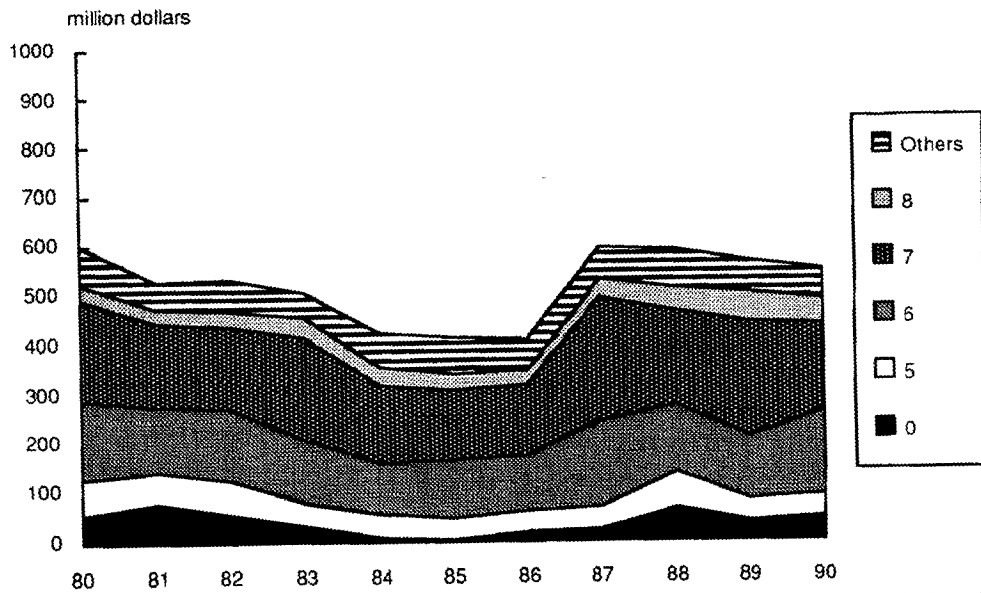
먼저, 그림 7은 중국, OECD제국, 홍콩, 싱가포르의 무역통계에 나타난 북한의 식료품 수출입 동향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수출이 1989년까지 거의 견실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서, 수입은 1984년을 최저로 하여 침체되어 갔으며, 그 이후 특히 1988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國家에 限定하여 말하면 北韓의 食料品 貿易은 黑字基調이다.

그림 6. 北韓의 主要品目別 對 OECD·홍콩·싱가폴 貿易動向

North Korea's ex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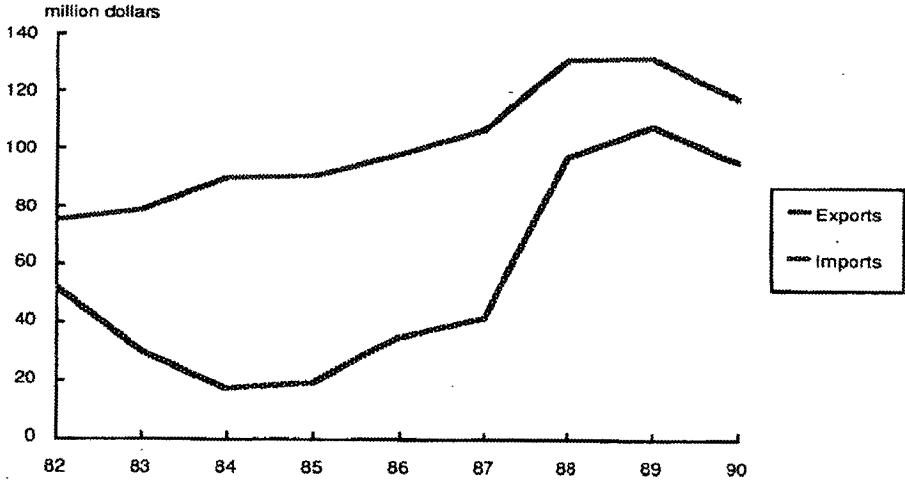


North Korea's imports



(出所) OECD Series B(Trade by Commodities by Countries). Hong Kong Trade Statistics, Singapore Trade Statistics, various years. ただし, 香港, シンガポールについては現地通貨建てをドル額換算した.

그림 7. 北韓의 對中國·OECD·홍콩·싱가폴 食料品 貿易動向



수입은 곡물이 60~8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육류가 그 다음이다. 국별로는 中國의 比重이 50% 전후로 가장 높고, 다음은 1986년 이후에 오스트레일리아로 30% 전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서 輸出 및 輸入 順으로 主要品目の 動向을 보기로 한다.

1) 輸 出

① 魚貝類

어패류의 수출은 중국, 일본 방면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림 8은 중국, 일본 방면의 수출에다 FAO에 의한 북한의 어패류 수출량 추정치(1984~89년)를 나타낸 것이다. 중국과 일본을 합친 것만으로도 FAO의 추정을 상회하는 수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징으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량이 1985년의 13만톤에서 1991년에는 1.2만톤으로 10분의 1로 격감된 것이다. 이것은 燃料 不足과 蘇聯領海로부터의 逐出로 인해 遠海漁業이 곤란하게 된 것을 말하는 지도 모른다²¹⁾. 또한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민생활을 증시하

21) 연합통신 모스크바발=공동통신 1991년 9월 9일. 전년 5월에는 북한국기를 부착한 일본 어선 12척이 소련해역에서 조업하다가 나포되었다.

는 관점에서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²²⁾. 다만, 일본에 대한 수출량은 1988년에 3.1만톤에 도달한 후, 1990년에는 2.1만톤으로 약간 감소했으나, 1991년에는 2.6만톤으로 증가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제일 조선인이 합영·합작의 형태로 설립한 양식회사가 몇 개 있으며, 그 성과에 따른 수출(예를 들면 광어)도 있다²³⁾

食料品 輸出의 內容을 보면, 1980년대를 통하여 魚敗類가 50~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野菜·과일(비중 15~35%)이다, 국별로는 일본이 1987년의 경우에 점유율 77.3%로 수위를 차지하고, 다음이 중국이다. 2개국을 합치면 90%이상의 점유율이 된다(별표 TABLE A.2 참조)

② 穀 物

곡물류에서는 소련에 대한 쌀 수출이 최대로 1981년에 21.8만톤이 수출되었으나, 1984년과 85년 양년도는 수출이 전무하였다. 그리고 1988년에는 19.9만톤이 수출되었으나, 1990년 이후 다시 제로로 되었다. 더구나 이 쌀은 소련의 小麥과 바터制로 去來되었다고 한다. 중국에 대한 쌀 수출량이 분명하게 된 것은 1985년부터이다. 1985년의 8.1만톤, 1989년의 6.6만톤을 피크로 감소하여, 1991년에는 겨우 1.1만톤이 수출되는 것에 그쳤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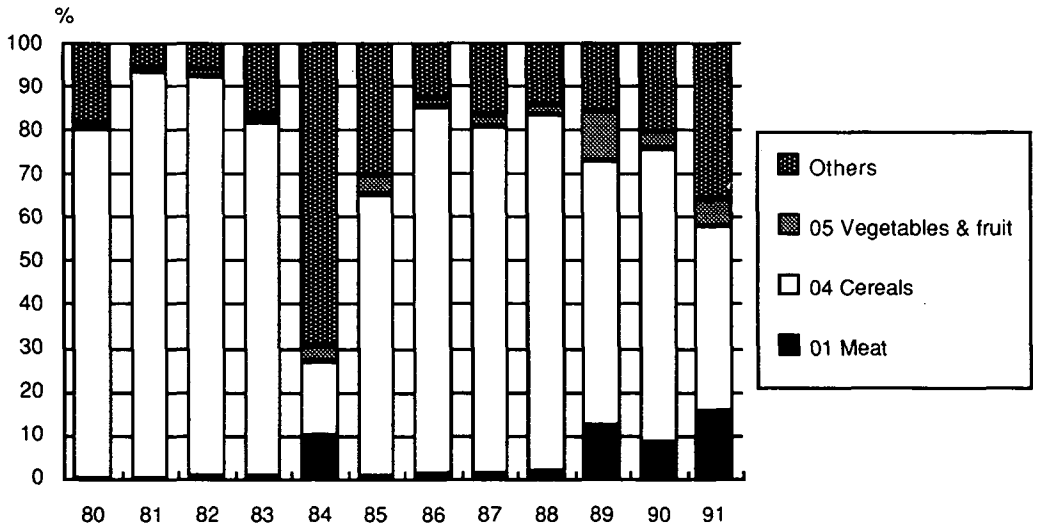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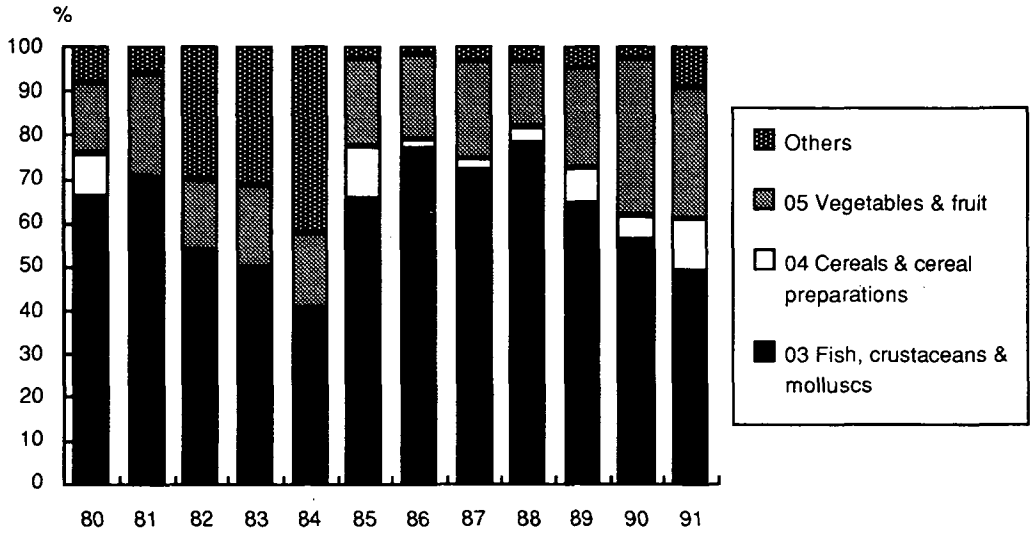
③ 野菜·과일

야채의 수출은 蘇聯 쪽이 최대이며, 토마토와 과일(사과 등)을 합쳐서 1980년에는 2.1만톤(그 중 과일이 1.9만톤)이 수출되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그 양은 격감하여 1990년에는 겨우 2,000여톤이 수출되는 것에 그쳤다. 日本에 대해서는 송이버섯과 냉동야채 등 매년 2,000톤 전후로 수출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1991년 잣이 1,000톤 정도 수출되었다.

22) 1992년 7월 중순, 북한당국은 귀향 조선족에 대해서 해산물의 반출을 금지했다고 한다. 『經濟新聞』 1992년 9월 22일. 또한 宮塚利雄 「중국연경무역의 설정에 대해서 두만강의 교역장을 방문하여」 『중국경제』 1992년 1월호. 근간, 8월에 중국 질림성에서 7월 15일부터 그러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23) 宮塚利雄 「북조선의 합병사업의 전개에 대하여」 전계서는 제일조선인계합영·합작기업 68사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중 5개가 수산업이다. 또한 神戶市の 일본인 기업이 「いかなご」의 개발수입을 기획하고 있으며, 빠르면 1993년부터 연간 400~500톤을 수입하려고 하고 있다. 『日經産業新聞』 1992년 8월 5일. 또한 島根縣, 鳥取縣에서는 그에 관한 합작을 희망하고 있다.

그림 8. 北韓의 對中國·OECD·홍콩·싱가폴 食料品貿易 品目別 比重



(出所) 別表(TABLE A.2) による. 1984年以前は中國, 1991年はOECD會んでいないことに留意

그림 9. 北韓의 魚敗類 輸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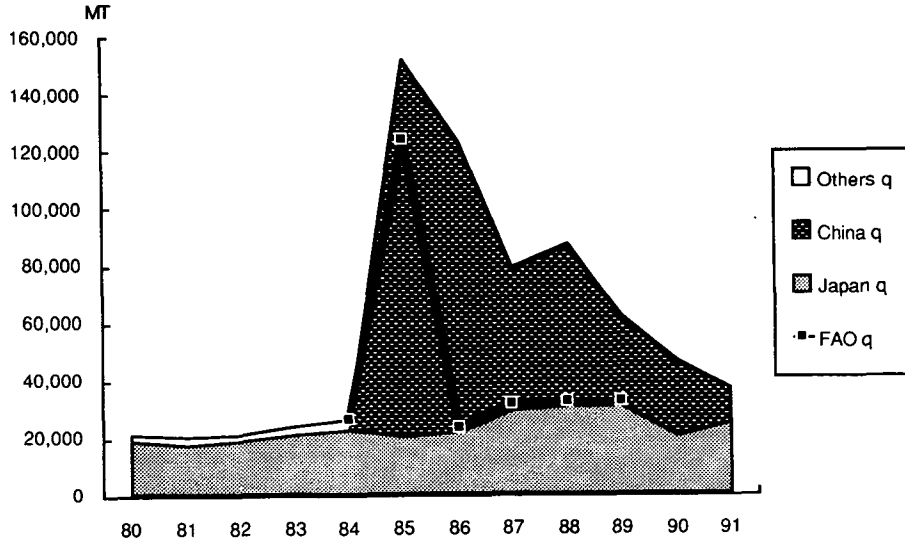


그림 10. 北韓의 穀物 輸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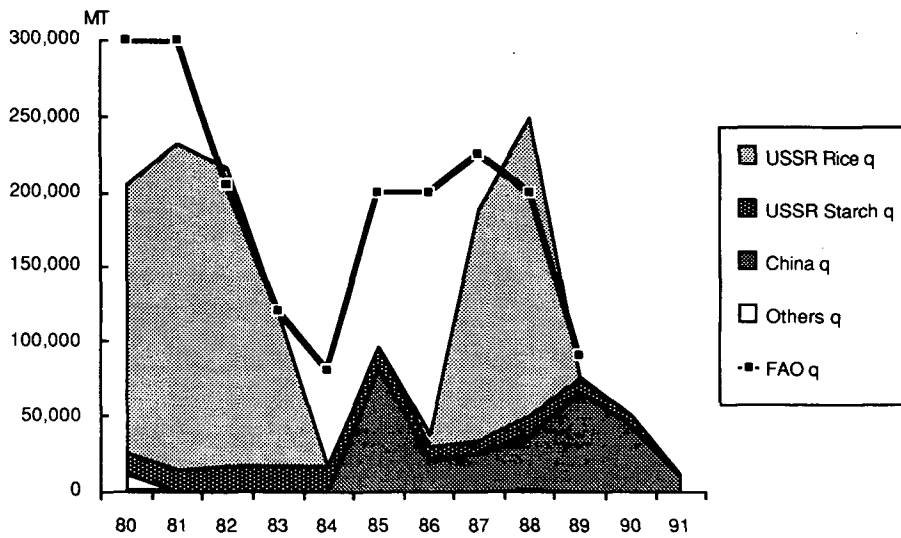


그림 11.北韓의 蔬菜·과일 輸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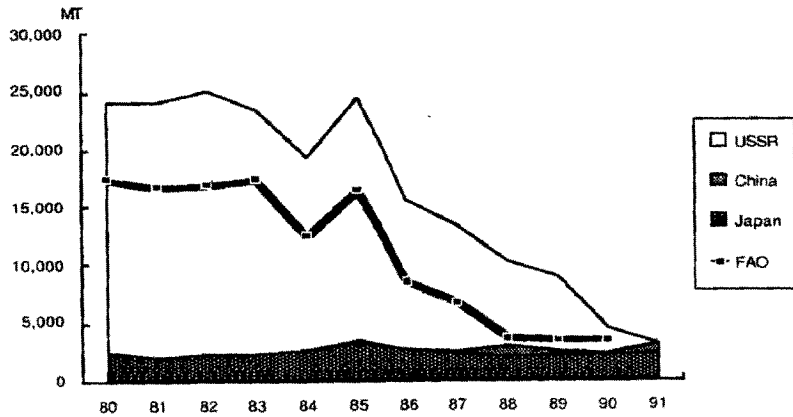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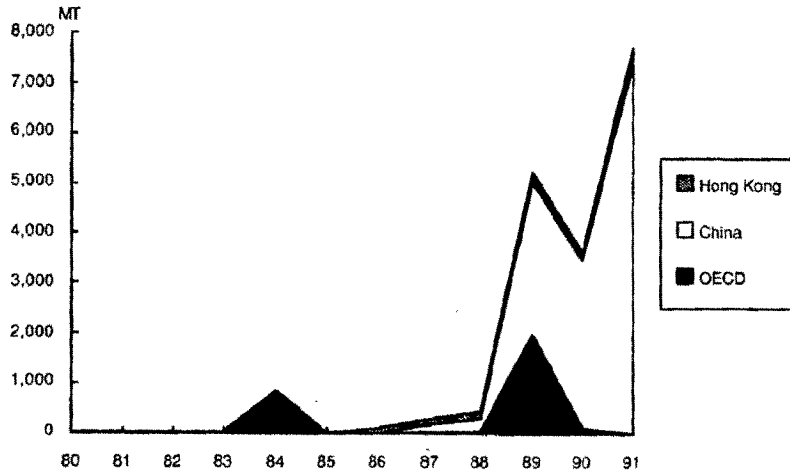


그림 12.北韓의 肉類 輸入



2) 輸 入

① 肉 類

육류 수입은 최근에 중국을 중심으로(1991년 7,000톤, 주로 돼지고기) 급격하게 증가 있다. 1991년에는 덴마크에도 육류통조림의 거래 조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양은 호지 않다. 또한 중국은 1991년 4월의 김일성 주석 생일을 기념하여 돼지고기 400톤이라고 하였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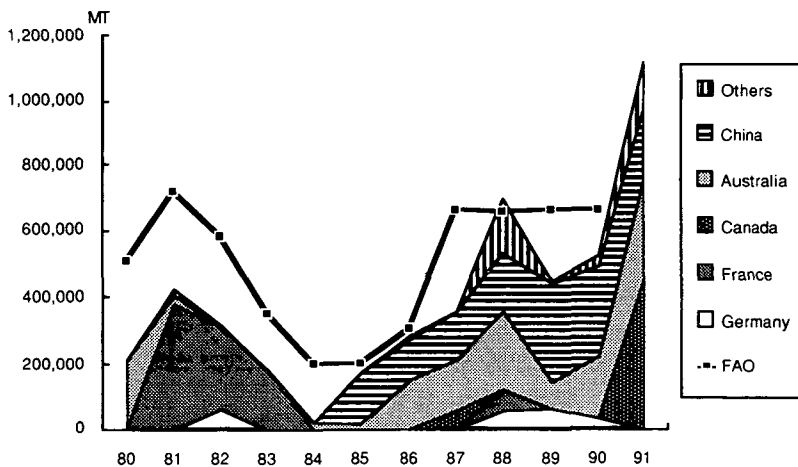
24) 新華社電『每日新聞』1991년 4월 6일

② 穀 物

곡물 수입의 특징은 선진국으로부터 계속해서 대량의 소맥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초에는 프랑스로부터 도입하였고, 동년대 후반에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최대의 공급자로서 정착하였다. 이러한 종래의 공급자에 추가하여 1991년에는 새로이 미국으로부터 15만톤, 캐나다로부터 4.5만톤이 추가되었다. 중국으로부터의 옥수수는 1986년의 12.7만톤에서 1991년에는 21.7만톤으로 증가 경향에 있다. 이것을 모두 합치면 1991년에는 적어도 110만톤 정도의 곡물이 도입된 것이 된다. 여기에 태국으로부터의 쌀(1.5만톤) 등을 합치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²⁵⁾. 다만, 1991년 1월에 연형묵 총리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각국을 순방하면서 향후 2,3년간에 100만톤의 쌀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해야 할 것이다²⁶⁾.

더욱이, 1984년경에는 곡물수입이(수출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북한이 연간 穀物生産量 穀物 1,000萬톤을 달성했다고 한 것과 관계되는 지도 모른다.

그림 13. 北韓의 穀物 輸入



25) 이 수입량(적어도) 110만톤이라는 숫자는 『통일일보』(1991년 5월 14일)가 한국의 익명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의 연간 곡물 소요량은 620만톤, 생산량은 510만톤, 부족량 110만톤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26) 연형묵 총리의 방문시 이미 태국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달려 부적으로 수출시장으로서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The Nation, February, 1991, 1987년에 북한은 자국산 아연과 인도의 소맥을 바터제로 거래하려고 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곡물 이외로는, 중국으로부터 야채의 수입이 1990년의 1,604톤에서 1만 2,920톤(이중 감자 1만 1,652만톤)으로 급증한 것이 된다.

다. 今後의 展望

1980년대 중반의 북한은 經濟의 停滯를 打破해야만 했으며, 對外經濟 關係의 發展을 重視하게 되었다. 제3차 7개년 계획 책정을 위하여 북한이 소련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해가는 가운데 對蘇貿易, 특히 輸入의 伸張에 이끌려, 1988년에 이르기까지 대외무역 전체도 급증하였다. 그러나 대소의존이 극단적으로 높아진 결과—이는 북한경제의 소련경제에 대한 「後屬」이라고 해도 좋을지 모른다—1990년 전후의 蘇聯·東歐의 變革, 社會主義 體制의 崩壞는 북한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게 하는 충격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은 또한 대외경제 관계 발전의 방책으로서 資本主義 諸國과의 經濟關係 容認, 소련을 포함하는 外國과의 合營·合作事業, 특히 輕工業 分野에 있어서 協力の 重要性이 提起되던 시대이기도 하였다. 북한은 대외관계에서 소련과의 관계를 우선시킴으로써, 또한 債務問題 解決의 節次를 제시하지 않았던 점도 있기 때문에 西方諸國과의 全面的인 經濟交流 發展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蘇聯과 在日 朝鮮人 企業家와의 合併·合作事業은 어느 정도 북한의 무역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즉, 수출의 주력은 광물 가공품이었으나, 수출 품목에 섬유제품 등이 추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소련이 없는 앞으로의 북한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1988년경부터 시작된 소련과의 관계 변모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입안자에게 西方側과의 經濟關係 擴大없이 향후의 경제발전이 성립할 수 없음을 결단시키기에 이른다. 자본주의 제국과의 교류를 확대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自由經濟 貿易地帶」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농수산물, 특히 狹義의 食料品の 貿易에서는 최근 수년간에 수출이 감소되는 한편, 곡물 등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이것은 間接的으로나마 國內의 食糧自給이 성립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금년에 있었던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가 인민생활 향상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했던 것도 기억에 새로운 바이다. 그것을 이어

방아서 8월의 중앙인민위원회는 토의를 거쳐 야채, 과일, 생선, 해초의 人口 1人當 1日當 供給量 目標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아직 기본적인 식료품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었다²⁷⁾.

농림수산물 무역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근본적으로 국내의 농업생산을 어떻게 신장시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본고의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中國과 베트남의 農業開革의 經驗에 비추어 말한다면, 궁극적으로 個人農의 創出없이 農民의 生産 意慾을 高揚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 체제가 이것을 허용하는 것도 또한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수산업에서는 양식, 원양어업 등의 분야에서 외국과 협력을 하고, 수출에 공헌해 나아가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일동포에 의한 합영·합작의 경험이 있으며, 또한 UNDP에 의해서도 양식(물론 농업도)에 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평양에서 全國 地方貿易部門 活動家 熱誠者大會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지방무역이 1976년에 김일성 주석이 수립한 획기적인 체계이며, 김정일 비서의 열성적인 지도하에 각지방에서 「輸出源을 大衆의으로 探究動員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공헌할 것을 칭찬한 것을 칭찬함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방도가 제시되지 않는다²⁸⁾. 이것은 1982년에 있었던 김일성 주석의 시정연설 「全社會를 主體思想化하기 위한 人民政權의 課題」의 일절에서 「부족한 것은 찾아내고 없는 것은 만들어내며, 우리들의 힘과 자원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제문제를 훌륭하게 수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계속 살아있음을 상기시킨다. 이 사례에서 대표되는 바와 같이 「새로운 轉換」을 고무시키면서도 종래의 經濟運營 思想·體制도 병존하고 있다는 것이, 合營·合作 등에 의한 效果를 限定的으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本稿는 筆者의 個人的인 見解에 의한 것이며, 筆者가 勤務하는 日本貿易振興會(JET-RO)의 見解를 反影하는 것은 아님.)

27) 『민족조선』 1992년 8월 7일.

28) 조선중앙통신 1991년 12월 19일 『朝鮮通信』 1991년 12월 19일.

TABLE A.1 NORTH KOREA'S TRADE BY MAJOR PARTNERS(CONT'D)

	North Korea's Total Trade						
	85	86	87	88	89	90	91
Industrial Countries(22)	604.6	564.2	834.5	840.9	742.2	842.0	854.4
Canada	1.4	1.4	7.0	8.8	1.9	0.6	57.6
Australia	24.7	31.4	40.3	47.9	36.6	97.8	25.0
Japan	435.3	358.0	455.3	556.0	483.3	464.9	496.5
France	12.6	18.0	38.3	26.1	28.5	25.3	20.3
Germany	83.0	106.8	234.2	85.1	106.9	119.4	118.4
Italy	15.4	20.4	19.1	23.1	23.8	26.0	27.5
Spain	4.9	3.6	8.2	8.0	9.0	23.9	25.6
Developing Countries(71)	860.2	924.5	1,091.8	1,335.6	1,272.5	1,156.0	1,295.5
Afica(23)	15.6	14.6	16.5	24.6	25.1	17.1	17.5
Asia(15)	683.9	766.5	833.8	1,021.7	1,013.7	921.6	1,055.8
Bangladesh	24.8	19.3	13.9	20.2	12.3	15.6	18.4
China	485.5	536.0	519.5	592.0	565.2	515.6	660.9
Hong Kong	73.7	102.1	145.9	156.9	181.1	144.2	173.8
India	11.5	27.8	37.9	45.2	68.1	34.8	36.5
Indonesia	21.2	7.9	21.2	23.1	46.8	84.8	40.3
Malaysia	1.8	3.2	3.3	21.9	4.1	18.9	11.1
Singapore	31.0	34.2	52.8	113.5	97.7	46.3	51.4
Thailand	20.1	21.5	14.2	34.6	25.4	38.6	46.6
Europe(8)	121.0	111.5	150.0	163.8	156.3	145.7	146.6
Czechoslovakia	34.2	25.3	21.6	27.9	26.0	43.2	54.7
Hungary	10.8	9.4	38.8	26.5	39.9	20.8	22.8
Poland	34.2	41.0	49.0	56.6	50.5	46.7	51.4
Romania	38.4	34.8	38.2	41.3	29.5	19.4	5.9
Middle East(6)	21.1	19.1	10.6	10.0	6.8	15.7	16.1
Egypt	14.0	14.4	8.1	7.7	2.3	0.0	0.0
Saudi Arabia	3.3	1.4	2.0	1.7	2.3	13.0	13.7
Western Hemisphere(19)	18.7	12.7	81.0	92.7	65.1	44.5	319.0
Mexico	0.0	0.0	63.2	85.4	47.0	32.2	300.6
93 Countries' Total	1,497.4	1,515.3	1,962.1	2,220.1	2,064.7	1,986.5	2,409.3
(Change, %)		(1.2)	(29.5)	(13.1)	(-7.0)	(-3.8)	(21.3)
USSR Old	1,270.6	1,720.6	1,947.6	2,634.3	2,382.6	2,563.7	
USSR New						1,141.9	363.7
93 Countries + USSR Old	2,768.0	3,235.9	3,909.7	4,854.4	4,447.3	4,550.2	
(Change, %)		(16.9)	(20.8)	(24.2)	(-8.4)	(2.3)	
93 Countries + USSR New						3,128.4	2,774.0
(Change, %)							(-11.3)

Source : Compiled by the author from IMF, Direction of Trade Yearbook, 1992; The External Economic Relations of the USSR, various issues; and the Mexican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s trade statistics.

TABLE A 2. NORTH KOREA'S FOOD TRADE

NORTH KOREA'S EXPORTS

v=thousand dollars, q=MT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0 Food & live animals	v	45,525	42,702	74,824	78,931	89,784	90,292	98,092	107,190	131,661	132,684	118,213	11,562
chiefly for food													
OECD	v	39,878	38,053	50,367	51,757	49,604	46,792	55,930	83,123	89,487	100,399	96,486	
Japan	v	35,494	37,786	50,282	51,610	49,465	46,527	55,830	82,820	89,348	99,549	95,720	
Hong Kong	v	4,991	4,290	4,437	4,404	4,640	2,783	4,060	3,420	3,677	3,492	1,363	2,972
Singapore	v	656	359	462	755	812	210	380	171	157	63	74	60
China	v			19,558	22,015	34,728	40,507	37,721	20,476	38,340	28,730	20,290	8,530
03 Fish, crustaceance	v	30,100	30,118	40,094	39,469	36,538	59,273	75,357	77,332	102,767	85,443	65,980	5,642
& molluscs	q	20,982	20,797	21,648	23,965	26,882	151,933	123,189	79,279	87,342	62,277	43,386	11,881
OECD	v	25,870	25,864	35,627	35,231	31,783	26,448	35,538	56,331	68,230	66,911	51,902	
	q	19,015	18,770	18,786	21,206	22,774	20,724	22,100	29,825	31,318	31,761	21,021	
Japan	v	25,682	25,662	35,619	35,227	31,695	26,200	35,500	56,068	68,213	66,123	51,380	
	q	18,826	17,895	18,784	21,204	22,722	20,517	22,080	29,709	31,313	311,295	20,859	
Hong Kong	v	3,869	3,912	4,040	3,755	4,150	1,994	2,837	2,991	2,561	1,764	875	330
	q	1,851	1,937	2,768	2,592	3,907	495	994	771	316	150	88	28
Singapore	v	361	342	427	483	605	120	201	168	49	0	0	0
	q	116	90	94	167	201	52	123	98	27	0	0	0
China	v						30,711	36,782	17,642	31,927	16,768	13,203	5,312
	q						130,662	99,972	48,585	55,681	30,366	25,276	11,853
FAO	v					33,336	27,954	35,930	61,552	70,835	68,175		
	q					26,508	123,609	23,295	31,410	32,262	32,45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04 Cereals & cereal	v	4,459	0	129	13	0	10,638	2,367	2,566	5,439	10,880	6,791	1,428
preparations	q	11,600	0	0	59	0	81,175	20,387	25,655	38,043	66,409	43,281	11,434
OECD	v	4,161			13					116			
	q	10,000			59					936			
Hong Kong	v	22	0	129	0	0	0	0	0	0	0	0	0
Singapore	v	276	0	0	0	0	0	0	0	0	0	0	0
	q	1,600	0	0	0	0	0	0	0	0	0	0	0
China	v						10,638	2,367	2,566	5,323	10,880	6,791	1,428
	q						81,175	20,387	25,655	37,107	66,409	43,281	11,434
(04 Cereals & cereal													
preparations, cont'd)													
USSR	q	194,046	231,694	216,829	118,341	16,240	14,895	17,575	162,418	210,860	9,801	6,946	
Starch	q	14,046	14,008	16,070	16,776	16,240	14,895	8,761	8,680	12,187	8,370	6,946	
Rice	q	180,000	217,686	200,759	101,565			8,814	153,738	198,673	1,431		
FAO	v	129,000	135,000	75,000	42,000	27,000	70,000	66,000	63,000	60,000	23,000		
	q	300,000	300,000	204,400	120,000	80,000	200,000	200,000	225,000	200,000	90,000		
05 Vegetables & fruit	v	7,352	9,931	11,859	14,658	15,342	18,161	18,914	23,641	19,233	30,108	42,426	2,434
	q	2,525	2,148	2,356	2,459	2,666	3,460	2,674	118	3,073	2,452	2,341	721
OECD	v	6,567	9,723	11,805	14,152	14,930	17,506	17,804	23,390	18,303	28,603	42,084	
	q	2,525	2,148	2,356	2,459	2,666	3,304	2,593		2,143	2,196	2,239	
Japan	v	6,535	9,709	11,757	14,108	14,928	17,495	17,755	23,375	18,235	28,588	42,012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q	2,474	2,123	2,281	2,362	2,664	3,282	2,550		2,082	2,180	2,181	
Hong Kong	v	785	208	54	506	412	655	1,110	251	930	1,505	342	2,434
China	v						67	37	51	455	291	145	1,008
	q						156	81	118	930	256	102	721
USSR	q	21,620	22,083	22,921	21,043	16,618	20,993	12,923	10,921	7,301	6,449	2,084	
Tomato	q	2,513	2,770	2,885	1,462	635	2,476	1,970	662	594	498	511	
Fruit	q	19,107	19,313	20,036	19,581	15,983	18,517	10,953	10,259	6,707	5,951	1,573	
FAO(Tomato+apples)	v	6,150	5,400	5,650	5,380	3,580	6,300	4,100	3,450	2,020	1,980	2,200	
	q	17,500	16,800	16,900	17,500	12,400	16,500	8,500	6,700	3,600	3,500	3,500	
1 Beverages & tobacco	v	755	537	336	223	178	2,323	2,641	6,388	682	1,046	461	30
OECD	v	755	530	336	220	175	174	303	1,508	511	459	412	
Japan	v	287	166	217	175	154	157	294	218	392	234	366	
Hong Kong	v	0	7	0	3	3	0	2	0	0	482	36	30
China	v	0	0	0	0	0	2,149	2,335	4,880	171	105	13	0
11 Beverages		287	173	217	180	161	157	305	218	392	675	416	12
OECD	v	287	166	217	177	158	157	303	218	392	234	367	
Hong Kong	v	0	7	0	3	3	0	2	0	0	441	36	12
China	v											13	
12 Tobacco	v	468	364	119	43	17	2,166	2,335	6,170	290	372	45	18
OECD	v	468	364	119	43	17	17	0	1,290	119	225	45	
Hong Kong	v	0	0	0	0	0	0	0	0	0	42	0	18
China	v						2,149	2,335	4,880	171	105	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22 Oil seeds & oleaginous	v	109	32	112	30	146	112	23	58	42	15	47	67
fruit	q	189	71	234	80	65	9	67	16	0	0	1	0
OECD	v	109	32	112	30	27	5	23	15			1	
	q	189	71	234	80	65	9	67	16			1	
Japan	v	87	29	66			5						
	q	173	66	164			9						
Hong Kong	v	0	0	0	0	119	107	0	43	42	42	46	67
FAO(Soybeans)	v	0	0	0	0		0	1,500	0	3,900		7,500	
	q	0	0	0	0		0	6,800	0	13,500		2,500	

NORTH KOREA'S IMPORTS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0 Food & live animals	v	51,626	77,934	51,610	29,549	16,462	19,498	34,827	41,855	97,475	108,699	96,109	62,052
chiefly for food													
OECD	v	42,650	74,029	48,941	25,521	5,411	2,551	15,911	20,977	60,877	29,573	40,633	
Japan	v	1,088	790	1,071	1,086	960	1,228	1,150	2,406	4,008	3,275	2,745	
W. Gemany	v	193	49	8,834	55	2	3	1	34	4,978	7,791	4,593	
France	v	455	64,586	37,718	23,914	4	10	1	0	6,269	4	334	
Belgium & Luxembourg	v	0	3,365	0	0	0	0	5	0	543	746	5,199	
Holland	v	7	101	135	0	4	282	151	25	8,300	252	2,317	
Denmark	v	5	75	9	4	52	0	23	2	208		296	
Turkey	v	0	0	80	42				0	5,671	31	1,296	
Australia	v	39,956	5,622	124	1	4,338	967	13,421	13,865	29,246	17,154	23,426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Hong Kong	v	8,976	2,137	1,214	2,747	1,776	1,625	1,359	1,064	1,904	3,293	3,058	6,525
Singapore	v	0	1,767	1,455	0	0	52	174	66	344	73	1,738	537
China	v			0	1,281	9,276	15,269	17,383	19,749	34,350	75,760	50,680	54,990
01 Meat & meat	v	43	74	57	85	1,638	44	307	458	1,552	12,860	7,620	9,605
preparations	q	10	16	21	14	856	7	102	289	419	5,223	3,620	7,693
OECD	v	27	74	52	79	1,631	42	11	51	35	4,131	313	
	q	5	16	18	11	853	6	1	23	18	1,950	113	
(01 Meat & meat preparations cont'd)													
Hong Kong	v	16	0	5	6	7	2	296	198	283	455	287	534
	q	5	0	3	3	3	1	101	107	133	213	180	301
China	v						0	0	209	1,234	8,274	7,020	9,071
	q						0	0	159	268	3,061	3,327	7,392
03 Fish, crustaceans	v	13	40	59	49	47	22	121	780	1,457	1,807	1,162	357
& molluscs	q	1	10	29	10	32	18	160	906	1,941	1,770	1,110	83
OECD	v	9	27	5	15	33	13	119	760	1,429	1,227	1,093	
	q	1	9	2	1	32	18	160	906	1,934	1,702	1,106	
Japan	v			2	14	18	13	118	672	1,412	1,216	859	
	q			1	1	11	18	160	890	1,933	1,701	1,072	
Hong Kong	v	4	13	54	34	14	9	2	20	22	577	65	203
	q	0	1	27	9	0	0	0	0	1	65	2	28
China	v						0	0	0	6	3	4	154
	q						0	0	0	6	3	2	5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04 Cereals & cereal	v	41,409	72,886	47,543	24,025	2,793	12,691	29,350	33,335	79,640	66,374	65,211	26,336
preparations	q	211,280	426,446	318,027	181,735	21,066	166,370	287,490	356,804	695,122	445,810	529,104	221,090
OECD	v	41,340	72,848	47,485	23,936	2,780	1,278	14,501	18,312	56,653	21,473	33,999	
	q	211,241	426,414	317,991	181,644	21,059	14,336	157,180	212,736	525,600	142,694	259,280	
Germany	v	0	0	8,813	0	0	0	0	0	4,925	7,662	4,569	
	q	0	0	62,848	0	0	0	0	0	54,503	58,295	32,504	
UK	v	0	0	925	0	0	0	1,054	0	1,479	0	0	
	q	0	0	4,656	0	0	0	10,500	0	25,420	0	0	
France	v	447	65,560	37,714	23,914	4	0	1	0	6,226	0	251	
	q	1,840	382,738	250,472	181,629	17	0	5	0	60,744	0	2,000	
Belgium & Luxembourg	v	0	3,365	0	0	0	0	0	0	543	690	5,199	
	q	0	19,308	0	0	0	0	0	0	3,957	5,367	32,782	
Turkey	v	0	0	0	0					5,663	0	0	
	q	0	0	0	0					47,915	0	0	
Canada	v	0	0	0	0	0		0	4,392	0	0	70	
	q	0	0	0	0	0		0	54,999	0	0	198	
Australia	v	39,948	4,912	0	0	2,708	932	13,409	13,756	29,205	13,025	23,198	
	q	208,901	24,350	0	0	21,003	12,600	146,664	157,647	245,424	79,004	188,219	
Hong Kong	v	69	38	58	89	13	58	157	163	417	309	291	910
	q	39	32	36	91	7	36	633	313	699	530	254	1,760
(04 Cereals & cereal													
preparations, cont'd)													
China	v						11,355	14,692	14,860	22,571	44,592	30,921	25,426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q						151,998	129,676	143,756	168,823	302,586	269,570	219,329
Maize unmilled	v						10,206	14,179	5,836	21,506	41,796	30,622	24,569
	q						144,754	126,729	89,309	164,978	296,140	264,609	216,790
USSR(Wheat)	q	N. A.	N. A.	N. A.	N. A.				293	360			
FAO	v	97,000	158,000	120,000	68,000	38,000	36,000	53,000	101,000	104,400	113,800	109,300	
	q	510,000	720,000	585,000	350,000	200,000	200,000	310,000	660,000	655,500	664,000	661,000	
05 Vegetables & fruit	v	498	843	818	575	554	815	758	1,021	2,251	12,357	3,668	3,713
	q	0	0	0	0	0	382	922	122	106	801	1,604	12,920
OECD	v	407	641	738	505	464	369	505	716	908	987	2,294	
	q							360					
Hong Kong	v	91	202	80	70	90	266	210	196	275	421	634	1,250
China	v						180	43	109	1,068	10,949	740	2,463
	q						382	562	122	106	801	1,604	12,920
06 Sugar, sugar preparati-	v	8,654	2,078	739	2,340	890	1,659	445	391	667	2,201	7,061	4,489
ons & Honey	q	12	75	63	40	8	5,022	8	123	25	774	11,093	2,986
OECD	v	15	43	36	112	115	71	52	69	153	217	210	
	q	12	75	63	40	8	22	8	8	12	38	28	
Hong Kong	v	8,639	1,794	703	2,228	775	813	393	257	351	617	388	1,704
Singapore	v	0	241	0	0	0	0	0	0	0	0	1,701	164
China	v						775	0	65	162	1,367	4,762	2,620
	q						5,000	0	115	13	736	11,065	2,986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FAO	v	56,500	55,000	36,000	46,000	42,000	36,000	38,000	40,000	74,000	85,000	104,000	
	q	103,265	119,570	119,570	119,570	119,570	119,570	119,570	119,570	206,530	228,270	250,010	
08 Feeding stuff for animals	v	594	21	168	68	256	3,446	4,899	4,591	9,216	10,042	7,093	9,924
(not incl. unmilled cereals)	q	1,504	25	334	5	8	15,893	17,045	29,932	56,823	53,558	35,597	68,059
OECD	v	594	21	129	5	16	20	37	118	82	203	23	
	q	1,504	25	334	5	8	25	17	28	48	671	5	
Hong Kong	v	0	0	39	63	240	38	0	4	0	0	0	0
(08 Feeding stuff, cont'd)	v												
China	q						3,388	4,862	4,469	9,134	9,839	7,070	9,924
							15,868	17,028	29,904	56,775	52,887	35,592	68,059
1 Beverages & tobacco	v	428	300	1,681	1,356	1,106	1,140	1,818	4,516	4,593	7,038	7,460	8,766
OECD	v	203	131	1,355	972	852	830	1,225	1,532	1,020	1,619	2,095	
Hong Kong	v	225	169	326	384	254	303	589	2,885	3,234	4,188	4,287	5,940
China	v	0	0	0	0	0	7	4	99	339	1,231	1,076	2,826
11 Beverages	v	428	297	1,604	1,317	1,051	972	1,494	2,391	2,917	5,079	4,288	3,757
OECD	v	203	131	1,325	945	836	703	1,043	1,079	807	1,393	1,035	
Hong Kong	v	225	166	279	372	215	262	446	1,215	1,772	2,517	2,746	2,196
China	v						7	4	98	338	1,169	507	1,561
12 Tobacco	v	0	4	77	39	55	168	324	2,125	1,676	1,959	3,172	5,009
OECD	v	0	0	30	27	16	127	182	453	213	226	1,060	
Hong Kong	v	0	4	47	12	39	41	142	1,670	1,462	1,671	1,541	3,744
China	v						0	0	2	1	61	571	1,26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22 Oil seeds & oleaginous fruit	v	584	0	1,254	889	220	17,238	14,291	22,150	19,780	27,270	16,738	9,028
OECD	v	152	0	0	11	0	22	31	4	0		21	
Hong Kong	v	432	0	1,042	627	0	0	2	192	4	1	2	14
Singapore	v	0	0	213	251	220	0	0	0	0	0	0	0
China	v						17,216	14,258	21,954	19,776	27,269	16,715	9,014
FAO(Soybeans)	v	5,200	1,300	8,700	10,400	9,500	5,700	7,100	5,200	8,100	7,700	6,000	
	q	6,900	2,000	14,500	16,800	12,000	7,500	13,000	9,000	13,200	11,200	9,000	
4 Animals & vegetable oils, fats & v	v	6,182	3,386	9,691	7,677	12,262	7,623	7,829	6,800	10,020	10,456	10,382	5,808
OECD	v	3,592	567	4,124	1,496	2,061	628	2,608	858	533	627	223	
Hong Kong	v	1,653	627	1,238	810	2,121	1,390	1,509	1,209	726	338	758	411
Singapore	v	937	2,192	4,329	5,371	8,081	5,604	3,712	4,733	8,761	9,491	9,401	5,397
FAO(Soybean oil+ palm oil)	v	6,800	2,500	10,300	10,650	9,920	6,600	8,200	6,500	8,900	8,340	7,900	
	q	9,400	4,000	17,400	17,300	12,600	9,000	15,000	12,000	14,700	12,500	14,600	

Source : Same as Figures 4, 5 and 6+FAO Yearbook.

〈토 론〉

제1토론자 : 이 상 만(중앙대학교 교수)

○ 남·북한 경제통합시 북한의 무역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

- 남북한 경제통합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가능한가? ② 가능하다면 그시점은 언제인가? 하는 것인데 이를보는 시각은 정치분야에선 비관적이고 경제분야에선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자료의 신뢰성으로 대외무역 자료는 그런대로 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 북한의 대외무역은 역인과관계로 무역이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국내 경제실상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대외무역관계는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볼 수 있다.
- 교류협력 단계에서 품목의 중요성과 체제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의 경우와 북한의 경제난을 참고할 때 농촌부분의 체제개혁이 선행될 것이고 이러한 시각에서 농산물 교역의 동향은 상당한 의의가 있음.

○ 80년대 북한무역의 특징은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다.

- 남남경제협력-개도국중심
- 사회주의 경제협력
- 대서방교역

○ 북한의 무역 고찰시 유의점은

- 북한의 모든 대외거래관계는 국가계획의 일부로 배후에 존재하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이 중요하다. 대외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무역교류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다.
- 북한무역의 특징은 자본주의와 다른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무역이 정치 외교의 수단이므로 비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
 - 소수품목의 국제화시세가 변하면 무역거래가 변한다.
 - 교역의 형태가 다양하여(교역, 원조, 바터형식) 이를 감안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 역인과관계가 존재하여 국가경제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 수출과 수입의 악순환 상황임.
 - 무역통계의 신뢰성의 문제로 간접적으로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자료를 얻고있다.
- 북한무역이 '80년대 중반 대소의존도가 높아졌다가 소련의 붕괴로 인한 무역관행의 변화로 북한무역의 문제점으로 북한경제의 파탄이나 시발점이 되었다는 무리한 연결을 하였으나, 북한의 무역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않아 대외무역이 현북한의 경제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않고 북한의 현체제적인 비능률이 더 큰듯하다.
- 멕시코와의 교역이 갑자기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북한의 식량수입이 '80년대 증가하다가 '90년대 감소한 이유는?
- 1991년 곡물수입이 110만톤으로 이를 식량 부족량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전체식량의 1/6로 이와 같이 큰 배경은?
- 북한경제가 대소종속이라고 하였는데 사회주의 체제의 무역부분이 자본주의 체제만큼 크지 못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문제가 많음.

<답 변>

- 멕시코가 갑자기 신장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수출이 증가된 다음해에는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경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수출감소의 원인은 농업생산의 저하와 연료부족과 소련영해로부터의 축출에 의한 어획량의 감소를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중시를 위한 수출의 제한도 원인으로 생각 할 수 있으나 정책자의 정확한 의도는 추측이 어렵다.
- 곡물 수입량이 110만톤으로 이는 수입의 필요성 때문이며, 이부분이 북한의 부족분이라고 생각한다.

제2토론자 : 최 수 영(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 북한이 대외무역에서는 큰폭의 적자를 보고 있으나 식료품에 대해서는 흑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소련을 포함했을때와 제외했을때는?

- 식료품중 곡류의 수입이 60~70%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과 쌀 수출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로 짐작하여 보면 북한의 쌀생산이 필요한 절대량을 상회하는 것이 아니라 쌀과 소맥거래를 함으로써 이의 가격차이로 북한의 부족한 곡물을 보충할 의도는 아닌가?
- 북한이 일본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종류와 형태는?
- 소맥을 선진국을 통하여 수입하는 이유가 소련 소맥의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 아닌가? 즉, 소련으로부터의 밀수입이 많았는데 다른 상대국이 필요했던 이유는?
- 북한의 수산업이 외국과의 합작으로 수출증가의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체제상의 불안요인이 없기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
- 북한 에너지난의 심각성은 80년대 광물질 연료의 수입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많지않은 재원으로 상당한 부분을 연료수입에 투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자재나 자본수입이 억제될 수 밖에 없다.
- 북한경제의 해외의존도는 낮지만 구소련이나 동구권의 붕괴등 국제사회의 변화가 북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함.
- 현재 구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원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식량의 수입증가의 필요성과 경제난의 회복을 위해서는 수입이 필요하나 원조원이 없기때문에 한계가 있다.

〈답 변〉

- 중국에 약간의 쌀을 수출하고 상당량의 옥수수를 받고 있고 중국과 북한의 무역협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정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
- 북한의 수출품목은 오징어, 게, 스프용 조개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가공도는 낮은 수준으로 주로 냉동상태로 이루어지며 중국에 대해서는 염장상태로 명태가 수출되고 있다.

Ⅱ. 제2분과 : 사회주의 개방국가의 농업개혁과 교훈

1. 경제개혁에 따른 러시아농업의 변화

발표 : Dr. Poshkus, Bolus Ignovich
(농업과학아카데미 부소장, 러시아)

번역 : 김 영 훈

가. 경제개혁의 여건

여타 동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연방 역시 중앙집권체제에서 민주적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의 주요 목표는 전체 국민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이행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농업부문은 경쟁체제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소유권 관계를 조정하고 토지개혁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국가마다 특징이 있지만 러시아의 경우 매우 독특하다. 다양한 자연조건외에도 경제의 재조정과정은 대단히 어려운 경지여건하에서 수행되고 있다. 재정불안정의 가속화, 심한 물가상승, 농공간 교환비율의 붕괴, 지역간 생산물 유통의 교착 및 각 공화국간 경제고립 등이 러시아 경제가 처해있는 현실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여건들이 경제 및 토지개혁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에게 기본적인 식량공급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일부 농산물의 경우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농업시설, 자재 및 공산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자본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농산물의 확대재생산을 막고 있다. 1992년 상반기에만 농산물 가격은 5~6배 상승한 반면 농업자재의 가격은 10배정도 상승하여 자본투자가 1/3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소와 가금류의 정부조달량이 30%로, 우유와 계란은 27%로 각각 하락하였다.

따라서 정부 경제정책의 주안점은 국민경제의 안정화와 경제위기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의 개발에 두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제개혁이 계속되어 농촌의 토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나. 토지개혁의 필요성

러시아는 모든 인민에 정상적 영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력을 공급할 수 있으나 많은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토양, 에너지, 생산자재와 노동력 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확은 가능량을 훨씬 밑돌고 있다. 일례로 작물단위량당 에너지 소요량은 동일한 자연조건을 가진 선진국에 비해 1.5~2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저장 가공 및 유통에서의 손실을 감안하면 그 격차는 훨씬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생산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인은 집단 혹은 국가소유의 단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소유권 부여는 생산여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개혁의 주안점은 소유권에 대한 태도와 생산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생산이 향상되었으며 농촌사회의 생화여건을 향상시켰다. 이에 대한 욕구를 보다 잘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농장들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장래에도 계속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농장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본요소는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세 요소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능력있고 헌신적인 지도자, 둘째는 투자증대, 셋째는 경영의 자율성을 소생산단위에 분산시키는 지도자의 결단성에 있다. 즉, 큰 성과를 거둔 모든경우 그 요인은 경영형태가 아닌 농장지도자의 개인적 역량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사실은 해당 지도자가 농장을 떠난후 그 농장의 경영성과의 변화상황으로 잘 증명이 된다. 따라서 개인적 요소에 의해 유지되는 체제는 영속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다. 개혁의 조건

농촌은 특히 지난 30여년간 집단화과정 속에서 크게 변화하였다. 즉, 윤작과 휴경을 포함하는 보다 현대적인 체제가 구축되었다. 대부분의 농장들은 현대적인 축사, 창고, 기계 및 부수적인 설비들을 갖추게 되었다. 대규모화함에 따라 농장은 보다 원초적인 농촌의 중심사회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생산조건보다 나은 사회적 생활조건을 좇아 소규모 마을을 떠나 대규모 농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기존에 구축하였던 모든것을 버리는 일이 현명치 못한것은 물론이다. 세계는 대규모 기술화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전문가들은 윤작체계와 현대적 생산중심지를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도 대규모화 해야 하지만 동시에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관계도 개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서로 경합관계에 있는 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좀 어렵게 보인다.

토지개혁시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혁이 어느 한정된 그룹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전체 농촌사회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에 국한된 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불균등을 유발시키며 장래에 정치적 분쟁의 소지가 된다. 둘째, 농정개혁은 과거의 역사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러시아의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해 본적이 없다. 따라서 과거의 집단농장제도에 익숙해 있는 농민들을 새로운 생산제도에 이행케 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셋째로, 개혁이 전체 농산업의 생산증가를 유도해야 한다.

라. 개혁의 단계

최근 2년간 러시아의 토지개혁은 두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토지개혁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집단농장 및 국영농장 토지의 10%까지 개별농가에 분배하는 권한을 지역노동자평의회에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1992년초까지 자영농가수는 5만에 불과하였으며 총경지의 1%만을 점하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토지소유권 주장은 일반 농촌에서 보다는 거주자 및 일부

이익집단에 있어서 더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기존의 농장에서는 보유한 토지를 출연하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1991년말에 제안된 개정안은 러시아 연방의 토지개혁 수단에 관한 대통령령을 채택하였다. 이는 토지분배의 방법을 변경하였다. 이는 동시거주자와 집단농장에 평균율로 토지를 무상분배하고 나머지 토지는 지방정부에 의해 개별농가에게 분배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농민과 주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농민은 공식적으로 3~15ha의 농지를 무상으로 보유하지만 소유권은 없었다. 「지역토지은행」(district allotment fund)으로 부터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들은 소규모의 경제권(small noncommodity economies)을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영역을 넓혀 상품생산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따라서 많지않은(4~5%) 전문농장을 제외하고 모든 집단, 국영농장에서 1992년 토지개혁을 단행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다. 개정법안에도 또다른 취약이 있다. 농장측에서 구성원에게 평균율로 농지를 분배하는한 남은 농지는 몇몇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민에게 유용할 것이다. 노동력이 부족한 비흑토지대와 북부지역을 단른지역의 은퇴농 및 이주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전체경지가 분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현재 젊은 가족농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농가가 분배될때 이들은 어떻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으며 농촌주민이 잘 이해하고 있지도 못한 지난 2년간의 농지개혁 경험을 통해 어떤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주된 실패요인은 소유권문제 자체에 잘못 접근하였으며 그에 따라 분배의 방법이 불합리하였다는 점이다.

지난 2년의 경험에서 보듯이 토지개혁에 관한 세번째의 계획은 전문가들에 의해 깊이 논의된후 일반에 의해 폭넓게 토론되어야 한다. 이는 각지역의 자연적 조건 및 경제발전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는 정부에 의해 강요되거나 정책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하에 지역사회와 농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토지개혁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요건

이미 토지개혁을 이룬 국가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정부에 의한 경제적지원이 뒷받침 되었다. 토지개혁이 농민들의 자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개혁은 매우 지연될 것이다.

1) 토지소유권

토지개혁의 기본목표는 토지에 대한 정부 독점을 해체하는데 있다. 즉, 토지소유권을 토지를 경작했거나 경작하고 있는, 그래서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해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들은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는가. 발틱제국의 예를 들면, 현재 공화국내에 거부하고 있는 원소유자에게 국유화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었으며 처분권이 주어졌다. 그들은 되돌려 받은 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임대할 수도 있으며, 공동경작을 위해 집단농장이나 주식시장에 출연할 수도 있고 그것을 매각할 수도 있다. 즉, 완벽한 소유권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원소유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토지개혁이 불가능하다. 모든 토지는 그것을 현재 경작하고 있는 집단농장에서 처분될 수 있다. 즉, 구성원에게 분배하거나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젊은 농가와 영외이주자를 위해 일부를 남겨놓을 수 있다. 또한 집단농장은 토지의 일부를 매각, 임대할 수도 있으며 담보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안의 요점은 정부가 아니라 농장에 그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토지의 조방적 경영을 막기위해 새로운 조세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토지점유가 지양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농장에 소속된 농민이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사고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토지개혁은 다음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유형태

사적(Private), 인적(Personal), 개인적(Individual), 국가(State) 및 집단적(Collective) 소유중 어떤것이 가장좋다고 말할 수 없고 각 형태간에 장단점이 있다. 다만 가장 효

울적인 형태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하며 이 고려하에서 농민 스스로가 선택해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모든 소유형태에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준비할 것이다.

3) 농민경제

그 수는 약 12만에 달하며 총경지의 2.5%인 5백만ha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의 높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5내지 7년내에 전체 농업생산의 3~4%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현대적인 농장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10~15백만루블이 필요하며 12만 농가의 소요자금을 합하면 1.2~1.8조루블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는 농가에서 조달할 수 없는 규모이다. 또한 신용기관도 취약하며 정부 역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즉,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자연농화 과정에 대비한 재정담당기관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질문 : 그렇다면 누가 국민을 먹여 살릴 것인가?

답변 : 지금까지 국민을 부양해 온 농민에 의해서 선택된 「농장」이다. 따라서 토지개혁의 성공을 위해 계속 실험되어야 한다.

4) 인적소유(Personal ownership), 인적 보조금(Personal subsidiaries)

가격자유화로 이행된 후 사적부문의 생산은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이 부문은 총경지의 19%를 소유하고 있으며 총생산의 25%를 점하고 있다. 향후 2~3년후 이부문의 생산점유율은 30%로 증가할 것이며 5~7년 후면 35~40%를 점할 것이다. 이에 대해 농민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시장경제화의 과정 특히 그 초기과정에서 농촌가격에게 식량을 공급할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 식량구입을 위한 희생을 감소시킬 것이며, 이들로 하여금 견실한 상품생산 농가로 신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중 많은 수가 독립적인 농가로 전환될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은 협동을 유지할 것이다.

토지개혁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농민의 사고와 이념은 변화하게 된다. 이 형태의 개혁은 최소의 자본으로 시정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이며 러시아에서만 14~15백만 농가를 포함할 것이다.

개인의 재산(Personal property)의 개발을 위해 실제로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가? 전체적인 농산업에 있어서 개인의 재산형성이 촉진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가구원이 부차적으로 고용되는 조건하에서 경작된다면 농가구의 개인영농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개인재산은 매우 중요하다. 가축, 농업시설 및 경지가 개인에게 속한다. 지금까지의 집단화 과정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노동의 결과를 농민으로부터 박탈한 것으로서 중대한 실수이다. 농민은 그에게 부과된 경지에서 경작하는한 보호되어야 한다.

5) 집단소유재산에 대한 개혁

현재의 러시아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집단농장은 2~3년간 상품생산의 구축을 이룰 것이다(전체 농산물의 65%, 상품생산의 80~85%). 그러나 7~10년후 그 비중은 10~15%로 감소할 것이며 단지 다양한 경영형태의 보조자의 위치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권리와 창조성을 억압하는 중앙집권적 관료조직으로 인해 현존의 사회주의적 집단조직이 그 기능을 잘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이러한 문제 제기로 농장조직을 개편하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집단농장의 재산을 단 1년내에 사유화하려는 성급함도 보이고 있다. 그들은 모든 잘못을 집단농장 지도자의 보수성에 돌리고 언론이 밀고 나간다면 개혁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점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은 그 전 200여년간 지속되어온 농장이 내용물은 그대로이고 형태만 달라진 것이다. 말하자면 집단적 형태의 사회는 그것을 성급하게 개혁하여는 시도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재정적, 물질적 지원이 거의 없이 자영을 시작하려는 농민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인가. 러시아는 현재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즉 현재의 사회정치적 상황은 집단적 사회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사회화된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은 시도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몇가지 기본조건으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

- 집단농장의 운명은 어느 누구보다도 해당 집단농장 그자체에 의해 결정.

- 경영권자들의 계획입안과 그에 대한 일반의 충분한 토론.

- 개별 조직체의 자유로운 개발에 대한 보장.

- 영외로부터의 이주자, 집단농장 구성원, 젊은농민 및 그들의 어린자식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함.

- 소유권 및 경영권의 형태가 결정되는 동안 농장전문화, 가용노동력, 농업시설, 거주 시설 및 사회생활을 위한 수단 및 시설 등에 대한 검토.

- 연금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 다양한 형태의 협동체계에 대한 준비

또한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외의 여러 전문가 및 상담가들과 꾸준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6) 개혁과정과 구상

집단농장과 기타 사회주의적 경제단체가 각자 처한 조건에 대해 완전한 이해를 하면, 개혁에 대한 많은 구상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사유화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결정한다면 추척된 대규모 생산기술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혁을 염두에 둘 것이다.

가) 서로 독립적인 작은 집단농장들이 계약관계로서 협동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는 협동농장, 주식회사 형태 및 작은 집단농장의 생산수단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소규모 기업 등을 들 수 있다.

나) 협동 및 국영농장이 완전히 해체되어 소규모 집단농장이나 자연농장으로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들간에 생산기술의 교류, 농산물 가공, 사회간접 자본의 동동이용 등에 있어서 조합형태(Union)의 협조관계가 유기된다.

다) 생산조합(Production Cooperative)의 형태로 변화될 수 있다.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의무가 부과될 것이다. 첫째, 조합의 활동에 대한 참여의무, 둘째, 회원재산의 결합, 셋째, 회원 1인1표의 원칙, 넷째, 목표는 조합회원의 복지증진이라는 점 등이다.

7) 농업부문의 협동화 운동

농가, 소규모기업, 협동조합 뿐 아니라 주식회사 역시 수직적, 수평적인 협동이 없이 존속될 수 없다. 따라서 협동화 사업은 토지개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협동화체제는 아무런 경험없이 조성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협동화운동을 전농업분야의 모든 활동과 경영의 모든 단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농가의 생활 그자체가 협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적 재산의 대표적인 형태로서의 개인에 대한 지원역시 협동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적부문을 위해 두개의 협동적 체제가 공존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농가들과 개별적 지원이 본래의 생산협동체계에 속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예에서 보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농민경제와 발전된 개별지원체제가 생산협동조합운동을 촉진시킬 것이다.

협동조합운동이 성숙하게 된다면 선진국에 있어서 처럼 전문화된 협동조합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예를 들면 대규모의 우유가공공장, 목장 및 선진기자재를 갖춘 우유생산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이는 여러 기본적 작물 혹은 축산물 단위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종자생산, 기술제공, 기자재 수리, 수송, 신용, 매매 및 과학기술 상담 등 기능적인 협동조합 역시 나타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역단위의 복합적 협동조합의 형태가 발전하게 된 것이며,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생산협동조합과 전문적 협동조합의 기초위에서 여러 형태의 기업, 협의회 및 연맹 등이 강력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8) 농업개혁의 사회경제적 효과

농업부문에 있어 토지, 생산수단 및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개혁은 생산자로 하여금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직접 참여케 한다. 이로 인해 생산자는 기업가 정신과 경쟁을 인식하게 되며 보다 효율적인 생산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게 될 것이다. 즉,

- 수확, 저장, 수송 및 가공과정에서 손실을 줄임으로써 생산비 절감
- 시장수요를 고려한 생산구조 변경
- 에너지 절약적 기술채택으로 에너지 절감

- 집단농장의 대규모 생산기술을 소규모 자족농에 효율적으로 결합
- 전체농산업의 자재생산에 있어 분권화와 자영화를 촉진
- 농업생산의 소득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부재정 지원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재생산구조를 확립
- 경제의 안정과 꾸준한 농업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농산업지원제도 마련.
등이 그것이다.

농업개혁에 있어 이러한 수단들이 잘 결합되어 운용된다면, 2~3년후 축산물 생산은 안정될 것이며 작물생산은 15~20% 가량 증가할 것이다. 또한 상품생산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순조롭다면 상품을 착취해온 중앙집권적 경제형태는 일소될 것이며 시장을 통해 상품들이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 토 론 〉

사회자 : 김 태 흥(동국대학교 북방경제학회장)

이 논문의 핵심은 :

- 러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현황과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관계의 개혁, 즉 토지개혁을 포함한 소유권의 개혁이 가장 당면한 급선무이며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러시아 농업개혁의 핵심문제이다.
- 토지개혁, 소유권 개혁의 문제는 농업에만 국한하거나 농업부문중 어떤 지엽적인 부분이 아닌 농업부문 전체의 개혁, 즉 러시아 전체의 사회와 관련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아울러 러시아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해본적이 없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전제
- 러시아는 지난 2년동안 2단계의 토지개혁을 시도하였으며 3단계의 토지개혁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음
 - 1단계에서는 국영농장에서 소유한 토지의 10%를 농민에게 분배
 - 2단계에서는 국영기업이나 집단농장의 토지를 농민에게 일정부분 분배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에게도 분배권을 주는 다원적인 분배가 추진
 - 그러나 1, 2단계의 토지개혁이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3단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지연되고 있음
- 3단계의 토지개혁중 중요한 소유권 개혁의 방향은
 - 국유화를 청산하는데 있어 토지의 분배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농민의 분간이 상당히 어렵다.
 - 소유권의 형태와 관련하여 농민 스스로의 자유선택의 방법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장조건에 적합한 형태로 가야 할 것이다.
- 과거의 급격한 개혁이 토지개혁의 실패원인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인간과 토지와의 관계는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재설정하는

나의 문제가 러시아가 당면한 토지개혁의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임

제1토론자 : 박 제 훈(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러시아의 농업개혁은 시장경제로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 전반의 상황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과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경제전반의 개혁의 속도(급진적, 점진적), 국가의 역할(국가주도, 민간주도), 산업정책을 포함한 경제발전 전략문제(농공간 균형발전, 불균형발전), 무역과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개방전략(수출주도형 발전, 수입대체 또는 국내경제를 중요시하는 전략) 등 농업부문이 여타부분 특히 공업 부문과의 보조를 맞추지 않고서는 계획이 성립하기 어렵다.

- 현재 러시아내에서 급진적인 경제개혁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러시아 경제전반에 대한 의견은?

- 러시아의 식량문제, 농산물부족 문제가 대두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는 생산품 분배 자체의 문제보다는 농산물과 교환할 수 있는 공산품의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 토지개혁의 핵심이 과거로부터 축적되어온 기술잠재력과 소유권 개혁이라는 두가지 모순요소의 조화적 결합이란 주장과, 동시에 국영·집단농장이 자체적으로 그들 운명을 선택하고 국가는 법적, 제도적 하부구조를 마련해 주는 선에서 간접적 지원역할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심적인 기본 입장인데 이 경우 정부는 독점체의 해체나 사유화, 농산물 수매가 결정등 가능한 선에서 국가역할을 제한하는데 소유문제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부문의 소유문제로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중 최근 바우처시스템(액면가 10,000루블의 사유화 증서)을 실시하여 이 사유화증서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이 토지개혁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 중국의 경우 농촌개혁으로 부터 시작하여 경제개혁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경우도 농업개혁이 경제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것은 러시아가 경제발전단계, 농공업의 비중, 농촌의 유희노동력 수준이나 농촌의 기술수준

문제(기술잠재력), 문화적 배경등에서 중국과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러시아의 농업개혁 모델이 중국식의 모델을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 러시아의 경우 토지소유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즉, 농민들은 이용권 차원으로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에 토지사유화를 명시할때 이것이 토지개혁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박사의 대안이 공식적인 정부정책으로 채택될 확률은 있는가?

제2토론자 : 정 한 구(세종연구원 연구위원)

- 소유형태의 새로운 형태인 개인자영농에 의한 개인적소유보다는 소집단영농(국·협동농장안의 작은 영농집단)으로 이것은 일정지역의 농토를 기반으로 상당기간 영농을 영위해온 사람들의 집단으로 이의 중요한 내용은 자율적이며 원하는 바에 따라 여러형태의 소유와 영농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개인영농 대신에 소집단영농의 영농, 소집단영농의 토지소유를 강조한 이유는 ① 개인영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② 대규모 영농의 장점, 장기간에 걸친 종전의 집단농장때의 경험을 살려나갈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예전의 농업개혁이 개인농인 것을 살펴볼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것이 현실적일 수 있는가.
- 공산물 가격상승보다 농산물 가격상승이 낮으므로 농민이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자영농이 어렵다고 하나 이경우 소집단영농도 같다고 할 수 있다.
- 집단농장중 경영이 잘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데 이는 집단농장의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소집단영농 지도자의 자질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소집단영농도 집단농장과 다를바가 없다.
- 농민들이 자영농이 되는 것을 꺼렸는데 이는 자연농의 경우 공산물 가격상승보다 농산물 가격상승이 낮아 이윤이 없으며 집단농장의 봉급생활자로 일하면 지방농장이나 국영농장의 경영에 관계없이 자신의 급료는 보장되어 있고 집단이나 국영농장의 구성원으로 텃밭을 가질 수 있으며, 이 텃밭에서 생산된 작물을 농민시장에서 팔아 수익을 올리는 것이 자영농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자연농

을 안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집단 영농의 경우 텃밭의 문제점은 어떻게 되며, 소집단영농도 시장경제의 테두리안에서는 위험부담이 있는데 이러한 소집단영농에 열성적일까 하는 의문과 이런 의미에서 소집단영농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

- 소련사회는 집단성이 강해서 미르라는 촌락공동체가 형성되어 왔었는데 이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지주의 탄압에 대항하여 만든 것이었으며 지주로서도 공동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집단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소집단영농도 이러한 집단주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소련 농민들이 적응하기 쉬워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 미르가 집단주의 책임과 평균주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어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영농·목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미르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답 변〉

- 러시아에서 개인생산은 총생산의 20~25%이며 이것은 개인농의 재산, 토지등이다. 농정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미국이나 유럽쪽의 것을 참고하였으며 여러 계획을 실현하는데 자금이나 물질이 부족하다. 중국형태의 농업개혁 모델도 토지개혁을 해나가는데 참고할만하며 우리보다 더 나은 정책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집단농장의 형태를 계속유지하며 내부의 경영문제 등 조직을 개혁하고자 한다. 거대한 집단농장은 소규모집단농장으로 세분화되었다.
- 러시아의 식량문제는 육류나 식량의 생산은 충분하다. 다만 효과적인 배분이 문제이다. 식량수입이나 곡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현재 농수산물의 가격이 자율화되었기에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중지되었다. 전에는 정부의 정책(가격자율화)이 현실적이지 않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식료품의 가격이 급증하였다. 현재 집단농장은 이익을 내고 있는 농장이 많다. 그러나 집단농장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도 상당히 많다.

2. 경제개혁과 중국농업

발표 : Dr. 陳吉元(농촌발전연구소 소장, 중국)

번역 : 김 영 훈

1990년대 중국농업은 개혁으로 특징지어진다. 또한 농업·농촌의 개혁은 농업근대화의 달성은 물론 경제발전에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이끌 것이다.

가. 개혁과 농촌경제 발전

중국농촌에 있어 경제개혁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국가전체의 경제개혁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개혁과정을 촉진하였다. 또한 도시부문의 개혁에도 그 개혁 경험을 전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농촌개혁은 두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1978년말에서 1985년 봄까지의 첫단계에 있어서 주요목표는 농민과 집단농장간의 관계 설정 확립이다. 또한 이 시기의 주안점은 계약에 의한 농가의 책임경영제 도입이다. 이를 위해 세가지의 주요정책수단이 시행되어졌다. 1) 토지 및 생산수단의 공동소유형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토지의 경작권을 개별농가에 부여하였다. 2) 인민공사체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一大二公’ ‘政社合一’의 체제가 농업생산력 발전에 부적합하여 취소되고, 인민공사 이전의 정치 및 경제조직으로 회복되었다. 3) 국가는 농산물 수매가격을 대폭인상했다. 동시에 농업생산자재 가격은 최대한 억제했다. 1970년에 농산물 수매가격을 평균 20.1% 인상했고, 1980년에 다시 8.1% 인상했다. 1981~84년간 매년평균 3%정도 인상했다. 1984년말 1.8억의 농가가 형식은 다르지만 가정생산책임제 경영에 합류했고 이는 총 농가호수의 98%에 달했다.

농촌개혁의 두번째 단계는 1985년초에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목표는 농민과 정부의 관계 정립이었다. 주안점은 농촌상품경제의 순환체계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세가지의 정책수단이 채택되었다. 1) 1985년 초, 지난 30여년간 유지되어오던 농산물 및 부산물의 구매체계를 재조정하였다. 새로운 구매체계는 정부계획에 토대를 둔 계약구매

가 권장되었다. 2) 과거에는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현물세를 수납받았는데 1985년부터 현금으로 대체했다. 3) 1985년 5월부터 정부는 식량과 식용유작물을 제외한 농림부산물에 대해 가격자유화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해당작물의 생산농민들에게는 보조금을 지불했다.

농촌개혁은 크게 성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촌경제는 활성화되었다. 첫째로, 농산물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농촌하부 생산기반의 약간변화에도 노동생산성이 약 60%나 상승하였다. 이중 40%포인트 정도는 전통적인 농업관리체계의 해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고질적인 농산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표 1, 2, 3 참조).

〈표 1〉 곡물, 면화, 식용류 생산량(1978~91)

단위 : 만톤

년	도	곡	물	변	화	식	용	유
1978		30,477		216.7		521.8		
1979		33,212		220.7		643.5		
1980		32,056		270.7		643.5		
1981		32,502		296.8		1,020.5		
1982		35,450		359.8		1,181.7		
1983		38,728		463.7		1,055.0		
1984		40,731		625.8		1,191.0		
1985		37,911		414.7		1,578.4		
1986		39,151		354.0		1,473.8		
1987		40,298		424.5		1,527.8		
1988		39,408		414.9		1,320.3		
1989		40,755		378.8		1,295.2		
1990		44,624		450.8		1,613.2		
1991		43,529		567.5		1,638.3		

자료 : 중국 통계에서 추계(1992)

둘째, 중국의 농업개혁은 도시의 기업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198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들 기업들은 농촌경제를 더욱 강화시켰으며 활성화시켜 국민경제의 중요한 지주가 되었다. 기업수는 1985년 12백만개에서 1991년 19백만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도 총 7천만명에서 9천6백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동안 기업의 고용은 전체 생

〈표 2〉 주유가축의 부산물 생산량(1978~91)

단위 : 만톤

년	도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생산량	우	유	계	란
1978		856.3				
1979		1062.4				
1980		1205.4		114.1		
1981		1260.9		129.1		
1982		1350.8		161.8		280.9
1983		1402.1		184.5		332.4
1984		1540.6		218.6		431.6
1985		1760.7		249.9		534.7
1986		1917.1		289.9		555.0
1987		1986.0		330.1		590.2
1988		2193.6		366.0		695.5
1989		2326.2		381.3		719.8
1990		2513.5		415.7		794.6
1991		2723.8		464.7		922.0

자료 : 중국 통계에서 추계(1992)

〈표 3〉 수산물 생산량(1978~91)

단위 : 만톤

년	도	계	해	산	민	물	산
1978		466		360		106	
1979		431		319		112	
1980		450		326		124	
1981		481		223		138	
1982		516		360		156	
1983		546		362		184	
1984		619		394		225	
1985		705		420		285	
1986		824		476		348	
1987		955		548		407	
1988		1,061		606		455	
1989		1,152		661		491	
1990		1,237		713		524	
1991		1,335		784		551	

자료 : 중국 통계에서 추계(1992)

산인구의 14%에서 16.5%로 증가하였으며, 농촌에서는 18.8%에서 22.3%로 증가하였다. 총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기업이 16.6%에서 26.6%로 농촌이 43.4%에서 59.2%로 증가하였다. 제 7차 5개년계획(86~90)기간동안 도시기업의 성장은 효율성이 매우 낮은 국영기업과 좋은 대조를 보여주었다. 이기간동안 중국의 총사회생산가액은 31.9%, 농촌의 총생산가액은 66.4%, 공업총생산가액은 37.2%, 稅收는 32.8%, 대외무역은 30%, 농민 1인당 평균수입은 32%가 순증가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다. 향진기업의 발전에 기인한 것이다. 더욱 놀랄만한 것은 전국사회총생산액이 1,000억 원에서 10,000억 원으로 증가하는데 31년이 소요된것을 감안한다면 겨우 7년사이에 향진기업의 총산출액이 1,000억 원에서 10,000억 원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무슨 비결이 있는가? 그것은 향진기업이 계획경제체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시장기능의 기초위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영기업이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시장지향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면 놀랄만한 것임에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농촌개혁은 상품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시켜 왔으며 농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시켰다. 개혁의 결과 농산물의 상품화율이 매우 높아졌다. 극도의 중앙계획경제체제하인 1952~1978년 동안 농산물의 상품화율은 40~50%에 불과하였으나 개방정책이 시행된후 80년대 초반에 60%로 증가하였으며 1991년에는 83.2%로 크게 증가하였다. 상품화된 농산물의 양은 1991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면, 1978년 1,803억 원에서 1991년 6,784억 원으로 276%나 증가하였다. 비록 1952~78년 기간동안 농업부문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으나 농가소득 성장은 3.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78~91년 기간에 있어 농업부문의 성장과 농가소득의 성장은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실제로 농업부문의 1인당 소득은 13.7%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을 제외하면 9.1%가 된다. 이 소득성장은 그들의 소득원이 집단농장에서 자연농장으로 전환된 것과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커다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몇가지의 문제는 남아 있다. 다음은 농촌개혁 경험을 요약하고 현존하는 문제의 해결과 지속적인 농업성장을 위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향에 관해 설명코자 한다.

〈표 4〉 농가의 1인당 순수입

구 분	1978	1980	1985	1990	1991
1인당 순수입	133.57	191.33	397.60	686.31	708.55
집단농업소득	88.53	108.37	33.37	60.32	66.09
겸업소득			3.69	2.44	1.97
자영소득	35.79	62.55	322.53	576.27	588.52
이전소득	9.25	20.41	38.01	47.28	51.97
구성비					
집단농업소득	66.3	56.6	8.4	8.8	9.3
겸업소득			0.9	0.3	0.3
자영소득	26.8	32.7	81.1	84.0	83.1
이전소득	6.9	10.7	9.6	6.9	7.3

나. 농산물 가격과 농업투자

개혁의 커다란 성과에도 불구하고 1985~88년기간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1985년 곡물생산의 경우 2천8백만MT이나 하락하였다. 1959년 최고의 감산이래 두번째 감산수준이다. 역시 2천백만MT의 감소를 가져왔다. 유지작물생산의 경우 1985년 1,578.4만MT라는 최고기록을 세운 이후 정체되었다. 곡물생산은 곧 회복되었다.

1984년의 풍작이후 정책담당자들은 중국농업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많이 하였다. 이들은 중국이 식량부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수입국에서 곧 수출국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과도한 낙관에 의해, 농업생산과 농업생산기반의 확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가격 및 투자정책을 잘 못 수행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몇몇 농산물에 대한 시장 및 가격규제가 85년 이후 완화되어, 농수축산물 생산이 증가됨으로써 농촌경제가 다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곡물, 면화 및 유지작물 생산에 있어 가격 및 유통체제 개혁의 효과는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다.

비록 이들 농산물의 매매가 많이 자유로워지긴 하였으나 아직 규제가격하에서의 수매제도가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다. 이들 품목의 수매가격이 인상되었더라도 생산비의 상승으로 인해 상쇄되거나 오히려 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다. 이 결과 곡물, 면화 및 유지작

물 생산에 있어서 농민들의 의욕은 매우 저하되었다.

낮은 곡물수매가격외에 이들 농산물 생산침체의 또다른 요인은 농공간, 농산물간 상대가격의 저위라고 볼 수 있다. 농산물 가격결정과정에서 존재하는 두가지 문제는 1) 시장가격에 비해 50~100%의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이는 농가소득 중 200억~300억 원을 감소시킴) 2) 농산물의 수매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가격보전을 위한 지출보조는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농민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농업자재 가격은 날고, 생필품가격은 뛰며, 농산물 가격은 깎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978년 이래 감소되어오던 농공간 협상가격차는 다시 벌어졌으며 이는 1987년에 천4백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1984년에 비해 62.4% 증가한 값이다. 이로인해 1988년 농가로 부터 정부로 이전된 총합계금액은 천300억원에 이른다. 즉, 등가교환에 대한 농민의 요구와 정부의 가격정책간에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불합리한 가격결정으로 인해 곡물생산이 상당히 제한받고 있었다. 비록 광동성에서 미곡수매가격이 50kg당 19원에서 25원으로 3%가량 상승했으나 이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광동성의 동관시에는 200평당 미곡생산가액이 214원, 사탕수수가 673원 그리고 밀감이 3,739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중산시에서는 1988년 200평당 미곡, 사탕수수, 바나나, 내수면수산물 생산에 있어 순소득이 각각 123원, 421원, 687원 및 870원으로 미곡에 비해 각각 3.17, 5.18 그리고 6.77배나 되었다. 미곡생산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1988년 광동성의 곡물식부 면적은 1978년에 비해 66만ha이상이나 감소하였다. 이는 곡물수입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가격정책과 함께 잘못된 농업투자정책 역시 농업생산침체의 주요한 요인이다. 농가책임경영제 도입후 농가는 농업투자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투자재원은 농가이외에도 정부, 집단농장 및 기타 개인으로 부터도 조달되었으나 1985년 이후 이들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되었다.

1985년 이후 경제정책은 산업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산업부문과 농업부문 성장의 비율은 1978~84년 기간에는 1.5 : 1, 1985~87년 기간에는 4 : 1 그리고 1988년에는 6.7 : 1로 벌어졌다. 전체투자에 대한 정부의 농업기반투자의 비중은 1985년에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1949년 이래 30년간 계속 10%선을 유지해 오다가 1985년에 3.3%로 떨어지고 1988년에는 다시 3% 수준까지 하락했다.

산업부문에 대한 농업부문의 정부투자 비중은 역시 낮아져 1949년 이래 30여년간 4.2%로부터 1978~88년기간에는 1%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다.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와 같이 농업부문으로부터 효율높은 산업부문으로 그 투자대상을 전환하였다.

농가책임경영제 도입후 집단농장은 여전히 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며 따라서 투자여력도 빈약했다. 총농업수익에서 차지하는 집단농장의 몫은 점차 감소하여 1978년 16.7%에서 1988년 10.2%가 되었다. 비록 집단적 투자는 1983년 110억원에서 1988년 460억원으로 3.1배 증가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농업부문에 대한 실질투자는 1983년 30.1%에서 88년 9.4%로 감소하였다. 도시의 기업에 의해 마련된 자금 역시 1984년 이후 감소하였다. 1979~83년 기간동안 도시기업의 농업부분 지원액은 154억원에 달했으나 1984~88년 기간동안에는 55억원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중요한 농업투자자인 개별농가도 곡물생산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투자를 감소시켰다. 그들은 소득을 일상적인 소비와 때로는 낭비로 소모하였다. 1978~88년 기간동안 농가의 순소득은 3.1배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동안 주거에 대한 투자는 약 20배(78년 30억원에서 88년 610억원)나 증가하였다. 1988년에 농가는 총지출중 3.4%만을 농업자재 구입에 충당하였다. 이는 1983년에 비해 2.3% 하락한 수치이다. 즉, 과거에 농업부문을 위해 투자되던 상당부분이 보다 수익성이 높은 부분으로 돌려지게 된 것이다.

농업부문은 경제조정정책이 실시된 1988년에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농산물 구매가격이 인상되었으며 공업투자의 확대가 꺾혀졌고 이는 4~5년간의 정체에서 탈피함을 의미하게 되었다. 1989년의 곡물생산은 사상최고의 수준을 기록한 1984년의 그것과 같아지거나 상회하게 되었다. 1990년과 1991년 모두 곡물, 면화, 유지작물, 사탕수수과 기타 주요작물에 있어 풍작을 기록했다.

그러나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1인당 곡물공급량은 1984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태에 있다. 또한 유통 및 저장체계의 미비, 자금의 부족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곡물과 마찬가지로

지로 면화, 유지작물, 사탕 및 주요작물도 역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아직도 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중국의 농업생산에 관해서 보다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농업생산시설의 현황, 자연재해대처능력, 자연자원 보유실태와 개발능력, 농업생산을 위한 경제적 환경, 농산물의 유통체계 및 가격결정체계, 농업생산자재의 공급체계, 농업의 기능과 그메카니즘 및 여건의 변화에 따르는 농민의 반응등에 관해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중국농업의 장래는 낙관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

다.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한 농업개혁

중국의 농업발전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확대가 요구된다. 우선 계약을 통한 농가의 책임경영제를 확립해야 한다.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민의 의욕은 대단히 높다. 그러나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다. 따라서 집단적 경제체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농업시책을 다양화해야 한다. 이는 계약을 통한 농가책임경영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효과적 수단으로서 농가의 책임경영의 기승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한편 대규모 경영은 지난 몇년간 논의의 중심과제가 되어왔다. 필자의 견해로는 대규모 경영이 농가경영과 함께 중농업을 발전시키는데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비농업부문의 고용기회 확대, 농민에 대한 경영교육 확대와 농지에 대한 농민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대도시 근교와 발전된 농촌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 곳도 많지만 대부분의 농촌은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대경영을 지역실정에 맞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사회주의 편향의 기준으로 획일화시켜서도 안된다.

둘째로는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토지소유와 함께 다양한 소유형태를 허용해야 한다. 소유권 형태의 다양화로 농촌에 있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공적소유가 우세한 지역은 소유의 다양화 과정에서도 공적소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만 한다. 이에관한 설명으

로서 두가지를 들 수 있다. 1) 공적소유에 관한 논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즉, 공적소유 비중은 경제발전 및 역사적 배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장소와 주된업종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공적소유의 비중에 관해 획일적인 기준제시는 바람직하지 않다. 2) 공적소유의 우세성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방향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서도 판단되어야 한다. 소유형태 다양화의 과제에서 개별소유의 비중이 각지에서 증가하고 있다. 국민경제가 공적소유의 기초하에 있는 한 사회주의적 경제발전은 보장될 것이다.

세째로 농산물 가격결정 및 유통에 자율성을 확대시킴으로써 농촌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오랜기간동안 공산품 및 농업자재에 대한 농산물의 상대가격은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매우 저하시켰다. 이렇게 왜곡된 가격구조를 시장과 가격구조개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곡물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자급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조건이다. 이를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친 전반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주요 농산물의 판매에 곤란을 겪고 있는 문제는 주로 유통구조와 생산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 문제는 사적인 경로뿐 아니라 공적인 유통채널의 역할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최근에 상품의 판매를 위한 장거리 수송과 정부수매대상이외의 모든 상품에 대해 판매를 위한 유통이 허용되었다. 이를위한 자유시장과 전문시장이 계속적으로 개설되어 왔다. 이 중에는 사적으로 공유하는 식품상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농가의 잉여농산물에 중요한 판로를 제공해주고 있다.

계획구매체제의 개편과 농업부문 생산에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이 농업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개혁의 성공적 추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또 이는 중국농업에 시장규제 및 상품경제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넷째로, 농촌의 파잉노동력이 이동하여 도시화가 진척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농촌경제구조 자연경제에서 상품경제로 이행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어 국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기존사회체제를 고려하지 않고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 중국에 있어 도시기업의 성장과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은 동일한 사안의 양측면이다. 즉, 지난 10년간 도시기업의 성장에 따라 농업부문의

과잉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러한 이동은 농촌과 도시 모두 커다란 사회경제적 변화를 초래했다. 즉, 농촌경제는 그 효율성을 높였으며 전통적인 빈곤을 퇴치하였고 노동력 대신 자본을 증투함으로써 영농발전의 길을 열어갔다.

1988년 시작된 경제조정정책 이후 도시지역의 농민과 도시근로자로 취업한 농민들 중 일부가 다시 농촌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일시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정부정책의 영향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농촌노동력의 도시집중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중국에는 과잉농업인구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농촌노동력의 유출로 인해 농촌이 침체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농촌의 침체는 사실 왜곡된 가격결과 농업투자부진에 그 요인을 두고 있는 것이다. 과잉노동력의 유출과 도시화 현상을 막아서는 안되고 막을 수도 없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이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과거 40여년간 노동의 인구가 2:8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서 7:3으로 크게 역전되었다. 이러한 도농간의 관계는 매우 왜곡된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높아진 산업화 수준에 걸맞게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도시화 비중을 높이고 경지를 현대화 시키는 것이 앞으로 중국 사회주의자들이 담당해야 할 일이다.

〈 토 론 〉

사회자 : 김 성 훈(중앙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 중국경제개혁의 원동력은 농업으로 경제개혁의 주된 역할을 하였다.
- 중국의 면적은 남한의 96배로서 중국의 농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한·중 수교후 농업의 문제점은 우리나라와 기후조건이 비슷한 동부 3省으로 U.R, 미국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 등 우리나라 농업을 한층 더 어렵게 하고 있지만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기회적인 요소도 많다. 즉, 자원개발에 의한 자원활용, 우수한 식품·사료산업 등 Agribusiness가 진출할때 유리한 면도 있다.

제1토론자 : 홍 택 기(산업연구원 중국연구실장)

- 중국은 1978년에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농촌경제개혁을 먼저 추진하고 80년대 중반 도시개혁으로 발전하는데 이는 가격체제, 기업의 체제 등 여러가지의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 1978~85년 초반의 경제체제개혁은 농촌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농촌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의, 식, 주를 해결하는데 특히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된 중요한 때이다
 - 그동안의 집단소유제가 책임생산제로 전환하는 개혁임
 - 80년대 중반부터는 농촌경제의 개혁확대기로 농업생산물의 상품화가 추진되어 시장경제 체제의 기초가 확립되는 시기이며, 또한 이시기는 중국이 경제체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농촌경제개혁으로부터 도시경제체제개혁으로 확대되는 시기이다.
- 중국의 농업발전단계는 :
 - 농민과 집단관계 : 집단소유제(인민공사 등)가 책임경영제로 전환되면서 농업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소유개념의 변화로 볼 수 있으며 농업에 있어서 경영방식의 혁신으로 볼 수 있다.

- 농산물의 국가배분·관리 체제에서 농산물의 상품화 추진이 이루어지고 시장경제의 형성과정으로 진입하고 향촌기업이 생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 이와 같은 과정에서 농촌경제는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농업생산성이 증가하여 여기서 기본적인 농산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음.
- 향진기업은 국영기업과는 달리 국가의 중앙계획에서 벗어나 농산물의 상품화가 허용되며, 농촌상품 경제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향진기업의 발전은 농촌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서 국가경제발전력의 원동력이 되었다.
- 그러나 초기에는 정부당국의 농업에 대한 인식착오, 즉 낙관적인 견해로 투지소홀 문제, 가격정책의 왜곡으로 생산재의 가격은 높은 반면 정부수매시 소비자 가격을 고려하여 낮은 수매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없어 농업의 의욕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농촌시장 육성, 농산물에 대한 가격개혁, 농업유통구조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
- 기본적으로 공유원칙을 고수하는 완전한 자유시장원리를 도입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농촌경제의 발전도 한계성을 가질 것이다.
- 우리경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유원칙 때문에 생산성 제고에는 어느정도 한계성을 갖고 있지만 공익성을 살릴 수 있는 장점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토지의 상품화가 가지고 있는 제약을 살펴보면 우리의 경우에도 토지공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향촌기업이 1985년 1,200만개에서 91년 1,900만개로 1.56배로 늘었으며 고용인원이 6,970만명에서 9,600만명으로 1.36배 증가하였는데 기업증가에 비해 고용증가는 적었고 이것을 1개 향진기업의 고용인원은 같은 기간 5.7명에서 5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 향촌기업의 영세성으로 볼 수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데 향촌기업의 경우 고용인의 수는 몇명인가?
- 생산성이 10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향촌기업이 노동자의 생산의욕을 높인 단순한 경

영방식의 개혁인지 혹은 다른 요인이 있는지?

- 제도적 개선만이 이루어졌는데 농기계 보급상태, 기계화,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은?
또 농업의 기업화에 대한 계획은?

제2토론자 : 오 승 렬(민족통일연구원)

- 곡물의 가격문제를 살펴보면 곡물가격이 상당히 낮아 시장화를 시켜 그 시장가격에 의해 농산물 자원이 대체되게 하는 안을 마련하였는데 최근 중국경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국가중앙재정의 부족으로, 곡물을 시장가격에 맡긴다면 단시일내에 많은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중국경제의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 정부재정적자의 측면을 고려할때 도시근로자들에게 곡물섭취의 보조금을 계속 지불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되어 노동자들이 시장가격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받게 되어 농촌곡물의 자유시장화 즉, 가격자유화와 공업부문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장화의 두부문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 인구문제로는 대도시의 중·대형기업과 향촌기업이 농촌인구를 흡수해 주어야 하는데 대도시의 중·대형기업의 경우 효율성문제로 많은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상황에서 향진기업들이 농촌인구를 흡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향진기업의 경우 이윤추구는 효율적이지만 규모가 적고 여러자원의 사용측면에서 효율이 낮다(기술의 낙후, 기술자의 부족). 또한 수송이나 에저지부분에서의 병목현상이 심각한데 향진기업에서 노동인구를 많이 흡수했을때 중국전체적으로 보아 자원낭비 현상을 중국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농촌의 투자자원 문제로 80년이래 중국농촌은 생산성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하나의 단점은 인민공사나 집체적 생산체제하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투자의 체계가 책임생산제에서 상당히 소홀히 해왔다. 즉, 기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이러한 투자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에서 시장체제를 기초로 하는 협동체제를 마련해야 할데 중국정부에서 단기간에 공업의 시장화와 농촌의 시장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가능할 지 의문임. 중국정부에서 이러한 농업과 공업부

문의 상충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래의 개혁노선에 치중해서 공업부문의 개혁후 그 파급효과로서 농촌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 변>

- 향진기업은 고용인수가 7인 이상일때로 분류함
- 향진기업의 생산성증가는 향진기업이 시장수요를 근거로하여 생산활동을 하기 때문임
- 책임생산제에 속해 있는 총농가수는 98%이며 호당경지면적은 0.5ha로 농업기계화는 힘들다. 그렇지만 동부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향진기업이 발달하고 향진기업이 발전하면서 농촌인구를 흡수하면 이 흡수된 인구만큼 경지면적이 늘어나 기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 식량가격 증가가 도시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것이지만 현재 정부에서 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를 줄일 것임
- 농촌인구 유출문제는 현재 약 9억의 농촌인구가 있으며 이중 약 1억이 잉여노동력인데 이 1억의 잉여노동력 유출은 대도시, 연해주의 향진기업에서 흡수 능력이 있다. 또한 향진기업은 동부연해주에 약 60%가 치중해 있고 광대한 서부지역에는 46%이므로 서부지역에 집중적으로 향진기업을 유치하면 잉여노동력 흡수는 가능하다.
- 농산물과 공산물 가격을 합리화시키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현재 소유인식이 낮았던 농민들도 자기소유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국가에서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투자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근거를 준비하고 있다.

3. 통독과정의 농업개혁과 그 교훈

발표 : Dr. Isermeyer, Folkhard
 (독일연방농업연구소 소장, 독일)
 번역 : 김 영 훈

본고는 독일의 통일과정 속에서 동부독일 농업의 개편과정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세 단계로 수행되어질 것이다. 첫째로는 통일전의 서독 및 동독의 농업발전 현황을 개관하며, 둘째는 통일 후 동부독일의 주요한 문화적 구조적 발전이 언급되며, 마지막으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을 토의하는 동시에 인접한 두 정치체제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통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간략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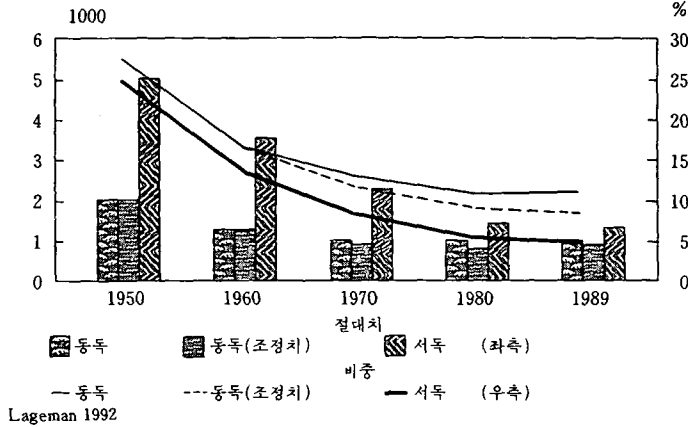
또한 본고는 주로 협동농장의 해체 및 개편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국영농장 구조개편과정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농산물 가공 부문도 제외되었다. 구동독지역에 있어 전산업부문이 급속한 변혁과정에 있기때문에, 본고에 제시되어 있는 통계자료들은 잠정적이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많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가. 역사적 배경 : 통일전 동 서독농업의 발전

1945년 독일은 영국, 프랑스, 소련 및 미국에 의해 각각 관리되는 북부, 남서부, 동부 및 중남부 등 네개의 지역으로 분할되었다. 1949년 독일 연방공화국(FRG)은 영국, 프랑스, 미국 관리하의 지역에서, 독일인민공화국(GDR)은 소련관리의 지역에서 각각 수립되었다.

1949년 이래 서독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갖춘 민주국가로 발전하였다. 농업부문은 가족농이 주축을 이루었다. 1990년의 농업노동투입을 살펴보면 총 749,000 노동단위 중 가족농에 의한 농업노동투입이 657,000이었으며 그외 노동투입이 92,000에 불과하였다. 국민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농업의 비중은 크게 감소해왔다.

〈그림 1〉 동서독 농림업의 노동투입 추세(1950~1989)



60년대 후반부터 독일과 EEC의 농업정책의 주안점은 농산물 생산자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농업지원이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계속되는 농산물 생산과잉으로 인해 생산자 가격을 낮추거나 생산쿼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한편 동독의 정치체제는 소련체제와 거의 같은 형태로 공산당에 의해 곧 장악되었다. 따라서 동독경제 역시 곧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 전환되었다. 생산수단은 몰수되었으며 국영기업이 설립되었다.

농업부문에서는 100ha 이상 소유한 농가의 토지가 몰수되었는데 이는 전동독 농경지의 절반가량이다. 이 농지 대부분이 소농, 노동자 및 은퇴자에게 재분배되었다. 나머지는 대규모 국영농장에 편입되었는데 여기에서 현대의 사회주의 농장이 어떻게 경영되는가 하는 예를 볼 수 있다. 1952년부터 중소규모 자영농이 집단화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가했다. 즉 농업집단화 과정은 농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60년에 대부분의 자영농이 집단화되어 평균적으로 한 마을에 한개의 협동농장이 형성되었다.

70년대 들어 집단화의 제2단계가 착수되었다. 즉, 2 내지 4개의 협동농장을 합해 하나의 커다란 협동농장을 설립하는 것인데, 이 협동농장의 평균규모는 사료생산면적을 포함해서 약 4,000ha에 달한다. 여기에서 생산된 사료는 동물사육과 생산을 전담하는 구협동농장으로 공급된다. 이와는 별개로 매우 규모가 큰 많은 동물사육 기업이 국영농장에 설치되

었다. 80년대 말까지 동서독의 영농 모와 구조의 차이를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1> 농업구조(1988 혹은 1989)

			서 독	동 독
총 인 구			62,063	16,614
총 면 적			248,619	108,331
경 제 면 적			11,819	6,165
농 업 노 동 단 위			815,200	840,000
농 장 수			649,000	4,650
그 - 국 영 농 장				465
그 - 협 동 농 장				3,855
그 - 축 산 장				2,696
그 - 경 종				1,159
평 균 규 모			18	
- 축 산 협 동 농 장				30
- 경 종 협 동 농 장				4,560
- 축 산 국 영 농 장				165
- 경 종 국 영 농 장				5,020

<표 2> 주요농산물의 생산자 가격(1988)

			서 독 DM/100kg	동 독 Mark/100kg
	밀		38	68
유 지 작 물			79	160
감 자			16	51
사 탕 무 우			11	16
돼 지			223	787
	소		308	1,006
가 금			195	862
우 유			69	170
계 란			15	37

동독의 경우 각농장간 그리고 농장과 다른 산업부문간의 경제적 관계는 중앙계획경제구조하에서 정부가 다루어야 할 가장 커다란 문제였다. 대규모의 정부간섭에도 불구하고(혹은 그 때문에) 소규모 가족경영에 의한 농업생산도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가족농에 의한 생산을 보면 1988년에 육류생산의 15%, 계란의 33%, 과일의 33%와 채소생산의 14%를 담당하고 있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중앙계획적인 동독농업은 EC 및 세계시장의 가격구조로부터 점차 멀어져 갔다. 특히 <표 2>에서 보듯이 경종작물에 대한 축산물의 상대가격이 서방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심각한 가격왜곡의 또 다른 예는 소비자 가격이 생산자 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경제의 왜곡과 자원배분의 왜곡상태가 노정되었으며, 이에 서방의 가격체제(price ratios)를 도입하는 것은 동독농업에서 실질적인 재배분을 의미한다.

80년대 말까지 동독의 농업부문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독에 있어서 보다 훨씬 크다. (표 3, 4 및 그림 1-3)

이는 동독경제의 상대적인 저성장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동독정부에 의한 산물 가격보조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표 3> 국민경제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 1988)

	서	독	동	독
총 부 가 가 치		1.6		9.8
고 용		4.9		10.8
투 자		2.4		8.0

1989년 11월 철의 장막이 걸려진 후 1990년 3월 선거에 의해 집권한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 사회,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이에 편입하기로 곧 결정했다. 1990년 7월에는 동서독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졌다. 동독주민들에게 충분한 구매력을 확보해 주고 서독으로의 계속되는 이주를 막기 위해 1:1(small properties) 혹은 1:2(big properties)의 비

〈표 4〉 주요농산물의 자급도(1986~1988)

	서	독	동	독
낙농제품	104		118	
쇠고기	120		108	
송아지고기	80		115	
돼지고기	87		112	
가금	61		102	
총육류	91		110	
계란	72		107	
유지작물	52		112	
곡물 ¹⁾	106		78	
감자	93		100	

1) 서독 : 1988/89, 동독/1988

율로 화폐를 교환해 주었다. 이 교환비율이 동서독의 경제력을 반영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1990년 10월 독일이 통일되었다. 이는 1년 남짓한 기간동안 동독이 사회주의적 중앙계획경제로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완전히 이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통일후 구동독지역 농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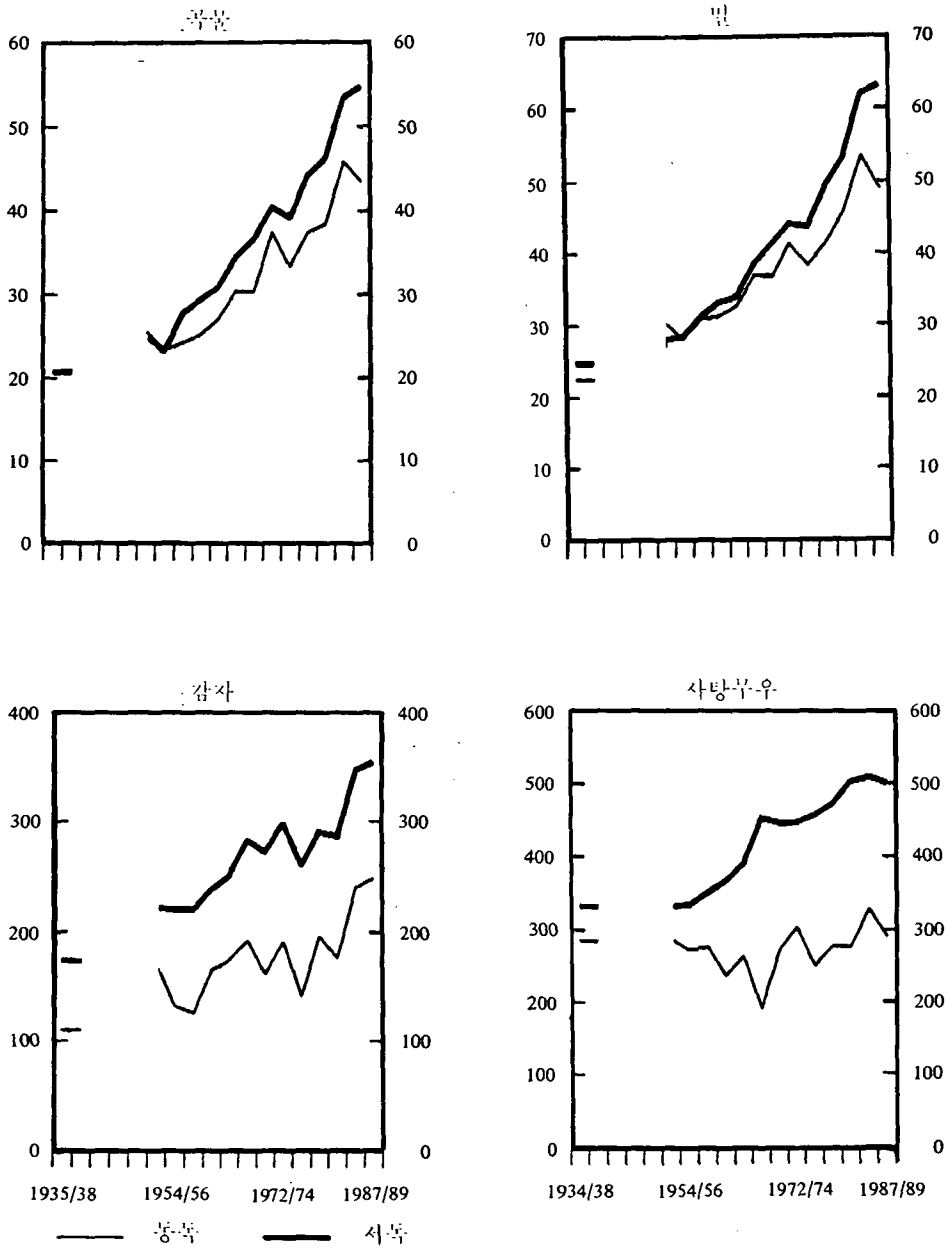
통일 후 구동독지역(이하 동독이라 칭함) 농산물의 생산자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특히 축산물생산자 가격의 경우 구서독지역(이하 서독이라 칭함)의 가격 이하로 까지 하락하였다. (표 2 참조)

그 주된 요인은 (a)동구수출시장의 상실, (b)보다 우수한 상품을 갖춘 서독기업의 도매 시장진출 (c)서구 상품에 대한 주민의 선호, (d)질 낮은 동독 농산물, (e)동독 농산물가 공설비의 비효율성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990년 봄 리터당 1.7Mark¹⁾이던 동독의 우유생산자 가격이 동년 가을 서독지역의 0.69DM보다 낮은 수준인 0.50 DM으로 급락하였다.

그러나 1991년과 1992년 동안 우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격이 서독의 가격수준에 근접

1) 통일전 동독의 화폐단위

〈그림 3〉 동서독의 주요작물생산 추이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높아지기도 하였다. 우유가격격차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이유로는 (a)우유가공에 있어 설비노후화로 인한 에너지 과다 투입과 노동력의 비효율적 이용 (b)낮은 우유의 질 (c)시장의 상실로 인한 가격저하 (d)지역적으로는 우유생산 기업의 낮은 경쟁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생산자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농업생산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축산의 경우에서 가장 심각하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89/90년 기간의 겨울에서 92년 여

<표 5> 동독의 축산두수 추이

	돼 지		소			양	
	총 계	암돼지	총 계	유 우	숫소(6달 이상)	총계	1년이상 혹은 암놈
1989. 10 수(백만)	12.01	1.36	5.72	1.96	1.10	2.60	0.80
1990. 12 수(백만)	8.78	0.82	4.95	1.58	1.03	1.46	0.38
89, 10=100	73.10	60.30	86.40	80.90	93.60	55.90	47.60
1991. 8 수(백만)	4.89	0.58	—	—	—	—	—
89, 10=100	40.70	42.40	—	—	—	—	—
1992. 12 수(백만)	4.70	0.59	3.26	1.10	0.63	0.80	0.09
89, 10=100	39.10	43.70	57.00	56.40	57.30	30.80	11.40
1992. 4 수(백만)	4.72	0.59	—	—	—	—	—
89, 10=100	35.50	43.20	—	—	—	—	—
1992. 6 수(백만)	—	—	3.08	1.08	0.55	0.85	0.06
89, 10=100	—	—	53.80	54.90	50.00	32.50	8.00

름까지 소는 50%로 돼지와 양은 60%로 그 수가 감소하였다. 1991년에는 89년의 20%로 감소한 생산쿼터량에도 못미칠 만큼 우유생산이 감소하였다. 이는 1992년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경종생산에 있어서도 식부면적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축산부문에서와 같이 심각한 경우는 아니며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 권장되었다. 서독의 경우 휴경보조에 의한 면적이 4%에 불과한데 반해 동독지역은 약 13%에 달하였다. 모래질 토양이 많은 Brandenburg주는 거의 20%의 경지가 휴경되었다.

반면에 작물생산은 크게 증가하였다. 90년대에 비해 91년 곡물 및 유지작물(oilseed)의 생산은 각각 16%, 17%씩 증가하였는데 서독의 8%, 1%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와 같은 생산증가는 (a)서독의 기술도입, (b)시장경제원칙에 따른 동기유발, (c)질 낮은 토지에 대한 휴경보조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 있는 서독 경지에 비해 아직도 낮은 생산성을 기록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계속 생산은 증가할 것이다.

동독의 영농구조발전에 관한 자료는 매우 빈약하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동독지역의 행정 및 통계체계의 급변에 의한 행정조직적인 문제 때문도 있지만, 주요인은 보다 복잡한 방법론적 문제에 있다. 따라서 구조혁신 과정의 평가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들면, 1년여 남짓한 기간동안 대규모의 협동농장 수가 20%이상 감소하였다. (1989 : 4,560. 1991 봄 : 3,375. 1992 봄 : 3,035)

이들 협동농장에 관련된 사항은 <표 6>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이는 독일농업조사센터(FAL)에 의해 두차례에 걸쳐 250여개의 대표적인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수행된 결과치이다. 이를 살펴보면 1989년 이래 40%의 기업이 감소하였는데 기업수의 감소 원인은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농업의 전문성, 특히 동물사육과 경종농업의 구분이 없어졌다. - 통일 후 동독정부의 강요에 의해 집단화 되었던 대부분의 축산농장은 그들이 기존에 경작하던 토지가 다시 환수되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동독 농민 협회(farmer's association)의 추정에 의하면 축산부문과 경종부문의 가량이 다시 결합되었다고 한다. 경종작물생산농장이 관련 축산농장과 완전히 재결합 되었다면 이전 협동농장의 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협동농장이 감소한 또 다른 이유는 합병, 자발적 해체 및 파산에 의한 해체등이다. 자발적 해체를 선택한 농장중에는 많은 부채를 안고 있던 재무상태가 빈약한 농장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해체가 농장구성원에게 가져다줄 높은 자산분배소득을 추구한 부유한 농장도 있다.

통독후 동독의 협동농장들은 1991년 말까지 미래의 조직형태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즉, 서독의 법률에 따라 협동농장을 개편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졌는데, 그것에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협업(partnership)뿐만아니라 그들이 원한다면 협동농장을 해체하고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표 6〉 동독지역 협동농장의 해체 및 개편(1989이래)

	봄(1991)	겨울(1991/92)
존속 (후속조직체포함)	70.1%	60.4%
경종 및 축산의 통합	9.4	11.3
해체	10.7	14.3
다른 농기업에 흡수	9.0	10.4
파산	0.8	3.5

〈표 7〉 법적형태별 협동조합 및 그 후속조직체 구성

	봄 1991				겨울 91/92			
	실적치		목표치		실적치		목적치	
	구성비 (%)	구성원수	구성비 (%)	구성원수	구성비 (%)	구성원수	구성비 (%)	구성원수
협동농장(동독형태)	81	145	—	—	13	72	—	—
협동조합(서독형태)	9	135	49	64	45	108	32	80
유한회사	8	Inc.	36	109	36	181	38	142
주식회사	1	Inc.	5	183	2	300	4	281
협업	1	Inc.	3	16	4	27	10	12
기타형태	—	—	3		1		—	—
가족농	—	—	1		—	—	2	—
No idea	—	—	33		—	—	14	—

FAL의 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절반정도의 협동농장이 서독의 조합형태 농기업으로 개편되었다. 〈표 7〉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독의 시장경제조건하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chap 3.3 참조). 즉 서독에서 조합형태의 농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이 아닌 유통부문의 강화가 요청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결과 최근에는 유한회사 보다 소규모의 협업형태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표 7〉에서 동독형태의 협동농장의 구성원 수도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존속하는 구성원에게 자본분배를 지拂하기 위해 더 많은 추가자본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통일 후 2년이 지난 지금 이미 동독지역 경지의 20%가 가족농 혹은 소규모 협업농에 의

해 경작되고 있다. 1990년 이래 설립된 이러한 농기업 수는 20,000개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농기업은 매우 제한된 경지 자원을 가진 소농이며 부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영농규모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많은 농민들을 고용하고 서독보다 큰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업농도 많다.

FAL 조사대상 중 전업농은 평균적으로 1991년 봄에 약 150ha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일부 환금작물 농가는 1,000ha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새로이 형성된 즉, 동독지역의 토지 시장은 미래의 농기업 성장에 적당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동독의 임차료와 토지가격은 서독지역에 비해 단지 20~30% 수준에 불과하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1992 기간 겨울의 조사에 의하면 (a)협동농장 및 그 후속조직체(예, 유한회사)와 (b)새로이 형성된 가족농(소규모 협업농을 포함)의 계획과 실행을 비교할 수 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두 집단 모두 경영규모가 확대되었음
- 협동농장과 그 후속기업은 경지규모와 가축수를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 투입을 크게 감소시키려 하고 있음
- 소규모 가족농은 이와 반대로 노동 및 기타 자재의 투입을 늘이지 않고 경지규모를 확대하려하고 있음
- 소규모 가족농이 경지규모와 가축수 확대를 피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 가족농의 경우 가축수를 줄이고 작물생산에 전문화 되고 있음
- 대규모 가족농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으며, 미래에도 계속 증가할 것임

다. 구조개편과정에서의 문제점

통독후 2년이 경과한 현재 전문가들에 의하면, 동독농업의 개편 과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만해지고 있으며 예상한 것보다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요인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1) 극단적 체제변화와 개인의 능력

동·서독을 막론하고 체제의 급격한 변화에 정책입안자들이 빨리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유발되고 있다. 체제의 변화는 개인의 모든 일상적인 삶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에 열거되는 바와 같이 그 변화는 매우 심각하다.

- 농산물가격의 50%하락-독일정부의 직접적인 재정보조가 있더라도 동서독간의 가격격차를 메우기는 불가능하다.
- 동독 가공산업의 전통적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의 대부분이 상실된다.
- 동독주민은 전혀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법률적 환경에 일시에 노출된다.
- 실제로 현존하는 계약은 변경되어져야 하며 수많은 새로운 계약은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다양한 상품간의 가치관계가 일시에 변화되며 재산권에 대한 가치도 급격히 변화한다.
- 이는 오랜기간을 통해 형성된 “경제적 감각”을 혼동시켜 새로이 직면하는 상황에 재빨리 대처하지 못하게 한다.
- 매우 새로운 서방의 소비재 및 용역을 구입할 기회를 가진다. 물론 개인의 소비에 있어서 변화는 역시 소모적인 과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 구체제하에서의 과거지사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새로운 민주적 체제하에서 논의되어진다. 따라서 과거의 일이 현재에 다시 들추어진다.

따라서 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수없이 다양한 개인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현재 시점에는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개인적 반응에 대해 판단할 수도 없거니와 판단하려 하는 것도 온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들이 처해있는 환경하에서 빨리 적응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에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동독에서는 개인적인 여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업가가 거의 없다. 이는 한세 대라는 긴 기간동안의 일이다. 기업가가 가져야 할 정신과 기술은 교과서를 통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동서독 기업간 인력과 know-how의 밀접한 교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일년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이는 동서독간 교류의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교통과 통신수단의 부족 뿐 아니라 서독의 수

준에 훨씬 못미치는 행정, 지도사업, 금융, 사법제도 등이 또다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자본부족과 과잉노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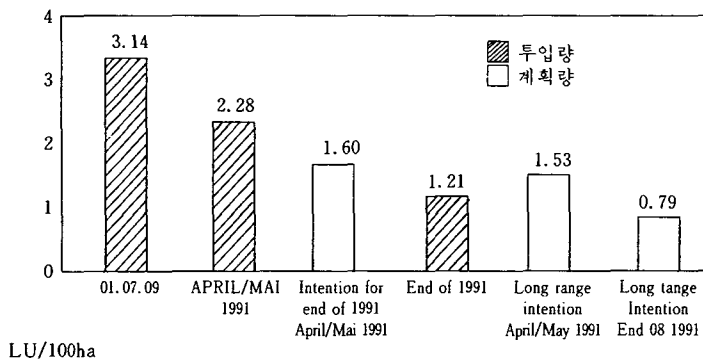
동독의 협동농장은 보유노동력의 50%이상을 감축해야만 정상화 될 수 있다. 더욱이 축산부문의 감축을 고려한다면 노동력을 80%이상 감축해야 경쟁력이 확보된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우선 협동농장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함께 오랜동안 일해오던 같은 마을 사람인 노동자를 해고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둘째로, 총회를 통해 해고에 대한 투표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회원(사원)과 피고용자의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농장을 떠나는 사람에게 그들의 자산분배몫을 분배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자산의 분배는 부채로 상쇄될 것이 이 때문이다. 넷째로 노동집약적인 동독농업에서 노동력 감축은 기술적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협동농장은 1년이내에 노동력의 50%를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그러나 농장경영 자료들에 의하면 아직도 노동력은 과잉상태이다. <표 8>에 의하면 협동농장과 그 후속기업들은 노동력의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림 4>에 의하면 환금작물 생산농장들이 얼마나 빨리 노동력을 감축해왔는지 알 수 있다.

<그림 4> 동독지역 환금작물 협동농장(후속조직체)의 노동투입



대부분의 협동농장들은 임금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정결손을 부채로써 충당해야만 한다. 또한 많은 농장들은 통합과정에서 1:1 혹은 1:2의 화폐교환으로 발생된 은행의 현금계좌를 오랜동안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농장들은 농산물 판매수익을 재투자하는 대신에 유동성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FAL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1990년 여름과 1991년 봄 사이에 대개의 협동농장의 유동성은 소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자본이 유동성 자금으로 전환된 결과일 뿐 경쟁력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대부분의 은행은 여유가 있다. 이는 첫째, 토지소유권 미확립으로 인한 담보설정불능, 둘째 시장경제체제하의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부족, 셋째 소유권의 미확립, 넷째 협동농장의 성공에 대한 의구심, 다섯째 농업부문 자체의 장래에 대한 미확신과 소작농가²⁾에 대한 대부경험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개별적인 투자자 역시 그들이 속한 기업에서 의사결정권한이 미약하므로 협동농장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본은 협동농장원 스스로 조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협동농장원들이 농업부문 이외의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3) 정치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문제

시장경제의 기능 활성화와 복지를 위해서는 소유권의 확립이 선결조건이다. 통합후 2년간 소유권 미확립의 가장 커다란 요인은 동독의 농업개편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지연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농업부문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 협동농장에 대한 재산권 분할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1990년 여름, 의회는 협동농장 총회에 그들의 재산 처리에 관해 상당한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따라 50년대에 강제로 협동농장에 편입된 본래의 농장주와 자손들은 숫적열세로 매우 불리하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1년 여름,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이미 많은 협동농장들이 구법령에 의해 정리를 한 상태였으며 그 결정이 얼마나 번복되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또다른

2) 소유권이 없는 협동농장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됨

문제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다. 높게 평가할 수록 농장을 떠나는 구성원에게 더 많은 분배 몫이 지불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가치측정은 매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많은 판례가 예상된다.

(2) 높은 부채를 안고 있는 농장이 많다. 이는 전동독 정부에 의해 수행된 비효율적 투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농장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부채의 일부를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러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혀 경험이 없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입법과정은 많은 시간을 소요했으며 문제의 소지를 많이 남겼다. 나아가서 연방정부는,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농장이 이윤을 획득할 때까지 부채상환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협동농장의 경영상태는 악화되었으며 파산도 피할 수 없었다. 통일후 2년이 지난 지금 부채탕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만약 법원이 최종적으로 부채탕감을 결정한다면 문제는 매우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탕감으로 인해 농장재산가치가 상승한다면 재산분배 몫에 대한 결정 사항이 다시 개정되어야 하며, 그동안 농장을 떠난 구성원들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농장의 재정상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유 및 설탕생산쿼터량 역시 중요한 자산이다. 특히 우유의 경우 협동농장들은 지역단위로 배분하는 쿼터결정과정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또한 쿼터는 토지와 연계되어 있고, 다른 농가가 토지를 임차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이를 잠식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투자결정에 장애요인이 된다.

(4) 구동독지역의 1/6에 해당하는 국가소유경지는 1년단위의 계약으로 협동농장에 임대되어 왔다. 정부는 이를 가까운 시일내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우선권은 (a) 1945년 이후 토지를 몰수당한 실향민과 (b) 협동농장의 구성원이었던 사람들이 조직한 가족농 및 소규모 협업농에 부여할 것이다.

이는 협동농장 및 그 후속농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5) 또다른 문제는 농장건물의 소유권에서 발생한다.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로인해 소유권 구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개인 건물을 협동농장이 사용한 경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 많다.

이와같이 재산권 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그 해결이 매우 어렵다. 동독의 소유권 확립에 관한 입법과정과 함께 독일 및 EC의 농업정책 향배 역시 동독지역 농가의 의사결정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점차 하락하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우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농장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농업정책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격보조, 투자지원, 토지지원, 토지 및 쿼터 이전에 관한 법률제정, 환경정책, 사회정책과 조세정책이 그것이다. 이와같이 많은 불리성 때문에 동독의 농가들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들이 대규모 기업을 택한다면 그들보다 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받는 수 많은 농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며, 반대로 소규모 영농을 하려 한다면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전략이 가장 성공적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 이에 관한 자료로는 1990~1991년 기간의 부기자료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절망적인 시장상황, 농장자산의 되풀이 되는 재평가, 경영규모와 생산계획의 변혁등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자료상의 제약이 많았다.

〈표 9〉는 FAL에 의해 5개의 협동농장을 조사,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1990년 동안, 특히 사육하던 동물들을 빨리 매각하지 않고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던 대규모 축산농장이 매우 큰 손해를 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9〉 이윤 및 결손과 그 요인(1990/91)

이윤/손실(1990/91)	경지면적당 액수(DM)	>0	<=0>-500	<=-500
토지가격지수		37	42	43
경 작 면 적	ha	1659	1736	1466
노 동	LU	53	70	77
동 물	SU	607	894	1327
노 동	LU/100ha	3.6	4.6	5.8
동 물	SU/100ha	42	63	97
자 본	DU/100ha	410482	631023	692567
부 채	DM/100ha	157299	282892	216632
지 도 비 용	DM/100ha	1100	1811	1446

〈표 10〉 동독지역 낙농경영실태(1991)

				가 족 농	협동농장 및 후속기업			
총	팔	자	료					
유	우	수	마 리	31	350	508	703	
노동단위당	우	수	마 리	20	12	18	25	
우	유	생	산 량	kg/cow	4744	4320	4740	5230
유	지	방	함 유 량	%	4.4	4.2	4.3	4.3
유	단	백	함 유 량	%	3.4	0.52	3.4	3.4
우	유	가	격	DM/kg %	0.52	3.4	0.54	0.54
환	원	량	%	20	0.52	24	25	
착	유	량	kg/cow	1992	23	2460	2840	
두	당	초	지	ar/cow	76	2012	68	52
사	료	량	100kg/cow	13.7	11.5	11.4	12.0	
수	익							
우	유	판	매	DM/cow	2640	2314	2658	2977
송	아	지	판 매	DM/cow	249	245	275	322
도	태	암	소 판 매	DM/cow	179	195	209	222
총	수	익	DM/cow	3068	2754	3142	3521	
			DM/kg milk	0.65	0.64	0.66	0.67	
변	동	비	용					
환	원	비	용	DM/cow	338	365	406	453
사		료	DM/cow	459	381	388	421	
			DM/cow	123	140	125	121	
기		타	DM/cow	184	176	176	176	
총	변	동	비 용	DM/cow	1104	1062	1095	1171
			DM/kg milk	0.23	0.25	0.23	0.22	
총	수	익	I	DM/cow	1963	1962	2046	2349
			DM/kg milk	0.41	0.30	0.43	0.45	
초	지	비	용	DM/cow	469	521	435	364
총	수	익	II	DM/cow	0.31	1171	1611	1984
			DM/kg milk		0.27	0.34	0.38	
고	정	비	용	DM/cow				
임	차	료	DM/cow	85	75	80	68	
임		금	DM/cow	917	1554	1012	729	
기		타	DM/cow	100	150	150	150	
총	고	정	비 용	DM/kg milk	1102	1779	1242	947
			DM/cow	0.23	0.41	0.26	0.18	
순	이	익	DM/kg milk	291	-607	369	1037	
				0.08	-0.14	0.08	0.20	

〈표 10〉은 1991년에 있어서 182개의 낙농농장의 경영상태를 나타낸 것으로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협동농장과 그 후속조직에 있어 경영상태에 많은 변화가 있다.
- 평균적으로 대규모 낙농농장의 경영상태가 우수하다.
- 가족농이 협동농장과 그 후속조직에 비해 더 성공적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 결과는 자료의 제약으로 그 설명력이 낮음을 다시 밝혀둔다. 실제로 1991년에, 농장에서 새로운 시설과 기구의 도입 경우는 없었던 반면 가족농과 소규모 협업농의 경우 100~200두 규모의 현대적 시설을 도입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표 10〉에 나타난 결과로서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요인이 있는 것이다.

라. 요약

1945년 이래 동독과 서독은 각기 다른 정치적 경제적 발전 과정을 걸어왔다. 동독농업은 중앙계획경제하에 집단화되었으며 경쟁적 세계시장으로 부터 격리되었다.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정책담당자들은 매우 급격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농업부문은 (a) 축산생산이 50%이상 감소되었으며 (b) 많은 경지의 휴경에도 불구하고 작물 생산량이 증가되었고 (c) 노동력 투입이 50%이상 감소되었다. 통일후 2년간 대규모 협동농장과 그 후속기업이 30%이상 감소되었다. 이는 경종, 축산부문의 결합과 융합, 분해, 파산에 의한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경지의 20%정도가 20,000여개의 가족농 및 소규모 협업농에 의해 경작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동독의 농업은 협동조합, 주식회사 및 몇몇 종류의 기업형태로 조직된 대경영체가 근간이 되고 있다.

동독농업의 개편과정에서 예상한 것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로 개혁과정에서 겪고 있는 개인적 어려움이 대단히 심각하다. 둘째 국제경쟁력의 회복과 왜곡된 가격구조를 바로잡는 일은 요원하다. 또한 협동농장의 입장에서는 과잉노동력을 방출하는 작업, 농장원이 그들의 몫으로 인정된 자본을 인출해가지 않도록 설득하는 작업, 그리고 은행이 대부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등이 매우 곤란한 실정에 처하게 되었다. 셋째로 재산

권 미확립이 농업개혁과정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잘 조직된 행정기구 및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로 동독지역에 잘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에 곤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동독의 농업은 독일 및 EC농업정책체제하에서 대경영이라는 불리성도 안고 있다.

〈토 론〉

제1토론자 : 여 영 무(동아일보사 통일연구원 소장)

- 통합후 통독의 농업생산성의 급격한 증가는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 통독후 협동농장이 가족농으로 즉각적인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 농지소유권 분쟁의 해결방안은?

제2토론자 : 안 두 순(시립대학교 교수)

- 통독농업의 문제는 체제전환의 문제로서 ①법적 제도적여건의 변화는 서독의 경우가 적용되며 ②화폐통합으로 시장가격의 변화와 ③점진적 구조조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 독일 통합의 문제점은 동서독의 상대적 가격비를 고려하지 않은 통합으로 통독후 ① 동독농업 시장의 붕괴 ②동독의 농업생산업체의 부채문제(채무자가 없어짐) ③정책적 시행착오 등을 들 수 있다.
- 동독의 농업은 규모면에서 비교우위성이 충분히 있으나 북한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통독의 경우를 적용시킬때 많은 문제점이 있음.
- 북한의 체제변화등으로 갑작스런 통합이 이루어질때에는 경제특구 같은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주, 직업선택의 자유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

〈답 변〉

- 독일의 농업성은 농장의 탈집단화와 50년대 강제 집단화의 해결이 쉽다고 생각했으나 이것은 심각한 실수였다.
- 농업부문의 경쟁력제고는 노하우가 필요한데 50년대 농부들이나 현세대의 농민들은 기술을 가지지 못해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 서독에서 와서 동독의 땅을 임대한 그룹
 - 통독이전의 협동농장 지도자로 가족농으로 전환한 그룹 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동독의 농업부문은 대규모 협동농장이나 기타형태이며 사농은 20%수준임.
- 소유권은
 - 재산권의 분배를 협동농장의 구성원들에게 일임하여 대다수가 노동자인 구성원들이 농장의 재산권을 노동자에게 분배하며 원소유자에게 배분하지 않게 결정
 - 원소유자나 후손들의 반대로 1년후 새법안이 제정되었으나 이미 1년의 분배과정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으며, 새법에 의한 분배는 없었고 법정문제로 비화하였으며, 동독에서 소유권이 불확실한 기간이 지연될 것이며 법도 미비하다.
 - 농업분야의 새로운 경영자는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농기계를 협동농장으로 부터 임대하여 사용할 것이며, 기존의 협동농장은 기자재 대여업으로 변화할 것이며 시간의 경과로 불확실의 요소가 줄어들 것이다.
 - 새로운 소유권을 가지고 시작함으로 은행융자등이 용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방법이다.
- 농촌지역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 독일정부는 동독농장들의 파산방지를 위한 지원으로 ①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② 급여의 계속지급 ③ 동독하부구조의 조정실시 등을 수행
- 정책만을 통한 경제성장은 이룰수 없으므로 민간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며 소유권의 문제가 대두되므로 이를 위한 강력한 정부가 필요
- 동서독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시간은 현장경험의 필요와 이에따른 예측이 필요하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동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전반적으로 실업율이 높다는 것이다.

〈부 록〉 국제학술회의개요

1) 개최일시

1992. 10. 29~1992. 10. 31(토)

2) 개최장소

○ 학술세미나 :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다이아몬드 볼룸

○ 견학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농촌현장

3) 주요일정

(1) 제1분과 회의 : 북한농림수산업의 현황과 전망(10. 29(목))

09 : 00~09 : 30 등 록

09 : 30~10 : 00 개회사 : 허신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환영사 : 강현욱 농림수산부 장관

10 : 15~12 : 35 주제발표 및 토론

12 : 35~14 : 05 휴회·중식

14 : 05~17 : 50 주제발표 및 토론

(2) 제2분과 회의 : 사회주의 개방국가의 농업개혁과 교훈(10. 30(금))

09 : 30~13 : 25 주제발표 및 토론

(3) 농경연 방문(1992. 10. 30(금))

15 : 30~17 : 00 농경연 방문

(4) 농진청 방문(10. 31(토))

10 : 30~12 : 00 농촌진흥청 방문. 견학

13 : 00~16 : 00 농촌현장 탐방

빈

면

D 78

북한농업과 사회주의국가의 농업개혁

1992년 12월

發行人 許 信 行

發行情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錄 1979年 5月 25日 第5-10號 電話 962-7311

印 刷 東洋文化印刷株式會社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